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목 차 】

I. 감사의 목적	1
II. 감사기간 및 감사일정	1
III. 감사실시 대상기관	3
IV. 감사반편성	4
V. 주요감사 실시사항	6
1. 기획재정부	6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6
나. 세제 부문	42
2. 국가데이터처	59
3. 국세청(서울·충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포함)	65
4. 관세청(광주·대구·부산본부세관 포함)	79
5. 조달청	91
6. 한국은행	99
7. 한국수출입은행	118
8. 한국조폐공사	132
9. 한국투자공사	136
10. 한국재정정보원	140
11. 한국원산지정보원	142
12. 한국통계정보원	143

VI.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4
1. 기획재정부	144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144
나. 세제부문	176
2. 국가데이터처	193
3. 국세청(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포함)	197
4. 관세청(부산본부세관 포함)	225
5. 조달청	239
6. 한국은행	243
7. 한국수출입은행	252
8. 한국조폐공사	265
9. 한국투자공사	269
10. 한국재정정보원	273
11. 한국원산지정보원	274
12. 한국통계정보원	276

I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 재정통제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II 감사기간 및 감사일정

1. 감사기간

- 2025. 10. 13. (월) ~ 10. 30. (목) [18일간]

2. 감사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13.(월)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 회	
10.14.(화)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 회	
10.15.(수)	자 료 정 리		
10.16.(목)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세종정부청사	
10.17.(금)	자 료 정 리		
10.18.(토)	공 휴 일		
10.19.(일)	공 휴 일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20.(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10.21.(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 회	
10.22.(수)	자 료 정 리	국 회	
10.23.(목)	[1반] ▶ 부산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동북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	부산지방국세청	
	[2반] ▶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호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한국은행(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목포본부)	대전지방국세청	
10.24.(금)	▶ 현장시찰	포항경주공항 등	
10.25.(토)	공 휴 일		
10.26.(일)	공 휴 일		
10.27.(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국 회	
10.28.(수)	자 료 정 리		
10.29.(목)	[종합감사]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국 회	
10.30.(금)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국 회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총 42개 기관	
1. 기획재정부	22. 대구지방조달청
2. 국가데이터처	23. 광주지방조달청
3. 국세청	24. 대전지방조달청
4. 관세청	25. 경남지방조달청
5. 조달청	26. 강원지방조달청
6. 서울지방국세청	27. 충북지방조달청
7. 중부지방국세청	28. 전북지방조달청
8. 인천지방국세청	29. 제주지방조달청
9. 대전지방국세청	30. 조달청 조달품질원
10. 광주지방국세청	31. 경인지방통계청
11. 대구지방국세청	32. 동북지방통계청
12. 부산지방국세청	33. 호남지방통계청
13. 인천공항본부세관	34. 동남지방통계청
14. 서울본부세관	35. 충청지방통계청
15. 부산본부세관	36. 한국은행(지역본부 포함)
16. 인천본부세관	37. 한국수출입은행
17. 대구본부세관	38. 한국조폐공사
18. 광주본부세관	39. 한국투자공사
19. 서울지방조달청	40. 한국재정정보원
20. 인천지방조달청	41. 한국원산지정보원
21. 부산지방조달청	42. 한국통계정보원

Ⅳ 감사반편성

1. 중앙감사반

감사위원 (26)	감사반장	임이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15)	정태호 위원 (간사) 김영진 위원, 김영환 위원, 김태년 위원, 박민규 위원, 박홍근 위원, 안규백 위원, 안도걸 위원, 오기형 위원, 이소영 위원, 정성호 위원, 정일영 위원, 조승래 위원, 진성준 위원, 최기상 위원	
	국민의힘 (9) *위원장 포함	박수영 위원 (간사) 권영세 위원, 박대출 위원, 박성훈 위원, 유상범 위원, 윤영석 위원, 이인선 위원, 최은석 위원	
	조국혁신당(1)	차규근 위원	
	개혁신당(1)	천하람 위원	
사무보조자	① 기획재정위원회 직원(21인)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입법조사관(3급) 김현중 행정실장(3급) 정상훈 입법조사관(3급) 서영재 입법조사관(4급) 한지은 〃 권혁만 〃 박상진 입법조사관(5급) 노현정 〃 심영민 〃 김태경 〃 김정엽 〃 허지현 〃 김승균 〃 이건화 입법조사관(6급) 황용준 행정관 장우석 주무관 김정혜 〃 이미숙 〃 이인희 〃 송경희		②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③ 의원 보좌직원 ④ 속기주무관

2. 지방감사반

감사 일자	감사 반	대 상 기 관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원	
10.23. (목)	제 1 반	- 부산지방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 - 부산본부세관, - 대구본부세관, - 동북지방통계청, - 동남지방통계청, - 한국은행(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	감사반장 임이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5) 국민의힘 (7) *위원장 포함 조국혁신당 (1)	김영진 위원 김태년 위원 박민규 위원 이소영 위원 안규백 위원 박수영 위원 박대출 위원 박성훈 위원 윤영석 위원 이인선 위원 최은석 위원 차규근 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행정실장 정상훈 입법조사관 한지은 〃 박상진 〃 권혁만 〃 노현정 〃 이건화 입법조사관 황용준 정책연구위원 의원보좌직원 속기주무관	
	제 2 반	- 대전지방국세청, - 광주지방국세청, - 광주본부세관, - 호남지방통계청, - 충청지방통계청, - 한국은행(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광주·전남·목포본부)	감사반장 정태호 간사 더불어민주당 (11) *간사 포함 국민의힘 (2) 개혁신당 (1)	김영환 위원 박홍근 위원 안도걸 위원 오기형 위원 정성호 위원 정일영 위원 조승래 위원 진성준 위원 최기상 위원 권영세 위원 유상범 위원 천하람 위원	전문위원 정지은 입법조사관 김현중 〃 서영재 〃 심영민 〃 김태경 〃 김정엽 〃 김승균 행정관 장우석 정책연구위원 의원보좌직원 속기주무관	

V 주요감사 실시사항

1. 기획재정부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경제정책 일반	○ 문화산업, 우주항공산업, 방산산업 육성 등 국내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일자리 구조개혁을 통해 자영업자를 구제할 필요 ○ 코스닥의 고유목적인 벤처자본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재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AI 활용 관련 내실 있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필요 ○ 현 정부는 대규모 전력과 전력 안정성이 요구되는 AI 글로벌 3대 강국을 주장하는데, 원전정책은 후퇴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장 및 전문가 의견 청취 필요 ○ 저소득층의 출산율이 급감하고 고소득층 위주로 인구 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므로, 지방 소멸과 인재 부족 문제 해결 위해 경제 주체들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구조적 혁신 필요 ○ 분절된 인재 정책을 전 부처 차원의 종합 전략으로 전환하고 정부·기업·정책금융이 공동 출연하는 ‘국가인재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산업 인재에 장기 투자하는 체계 마련 필요 ○ 청년 일자리 대책, R&D 예산 확충, 경제성장 및 자영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법인세 증세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 주도의 선별적 지원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투자 여력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 ○ 과거의 감세·세수결손·미래산업 붕괴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와 실물경제를 회복할 필요 ○ 현 정부는 경기 하강에 대응한 재정 완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투자 성과와 연계한 법인세 지원 등 경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창출하였으므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직전 3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2%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최저 성장이므로, 경제 위기를 개척할 비전 제시 필요 ○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48.3%로 내수 성장 전략이 필요한 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 도모 필요 ○ 전 정부 3년 동안 가계부채와 이자 부담 가중, 소득 격차 확대, 소비 위축 및 자영업 매출 급감 등 가계·소득 분야 5대 지표가 모두 악화되었으므로, 민생과 경제 지표 회복을 위한 성장 전략 추진 필요 ○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 운용 시 국내 자산운용사의 외부 위탁 비중을 높여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기본 먹거리와 주거비용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 ○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공적연금 보완 기능 강화를 위해 기금형 제도 도입 등 범정부 차원의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혼인신고 시 주택담보대출, 청약, 세제 등에서 페널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개선할 필요 ○ 예산낭비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국민성장펀드 인센티브 제공, 환경 조성 등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국민성장펀드가 선심성, 홍보용 관제펀드가 아닌 민간 중심 혁신 구조로 전환될 필요 ○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벤처기업이 상장 전 단계에서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현 정부는 반기업 입법과 정책 혼선(상법 및 노란봉투법 충돌)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기업가 정신 및 산업경쟁력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시장 및 전문가 의견 청취 필요 ○ 기업 성장(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자산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기업이 유보금을 신산업 분야와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 도시 내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균형성장 가중치를 도입하고,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한 서울시의 국고보조율 역차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보조율을 검토할 필요 ○ 13조 원 규모의 보편적 소비쿠폰 지급 등 단발성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현금 지급이 생활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경계할 필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부자감세 정책 철회를 통해 세입기반 복원 및 조세 형평성을 강화할 필요 ○ 실질적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유동성 의존적 부양책은 초인플레이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으므로, 단기 정책보다 잠재 성장력 회복에 집중할 필요 ○ 국민성장펀드가 집행률 20% 및 손실률 30%를 기록한 과거 뉴딜펀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부 주도 배분 구조를 지양하고 시장 원리에 기반하여 산업을 육성할 필요 ○ 송전망 등 국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자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반도체 협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및 협상 성과 도출 필요 ○ 충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과 재분배가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수립할 필요 ○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한국투자공사의 규모 및 역할 확대, 국내 전략산업 직접투자 등 국부펀드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 ○ 출국납부금 인하로 관련 기금 재원 부담이 커지는 등 기존 부담금정비안에 문제가 있으므로 원점 재검토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민간투자사업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예비타당성제도에서 수도권 내 지역간 격차 반영, 예타 수행기간 지연 등 문제를 개선할 필요 ○ 한국투자공사 위탁된 국내기업 해외진출 투자자금 50억 달러를 미집행한 것에 대한 점검 및 투자자금을 활용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 필요성에 대한 기재부 검토 필요 ○ 부처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실적 공개, 사후 관리 및 환수 강화 위한 개선방안 보고 필요 ○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 보조금 편성 등 보조금법 지원규정 개정 통한 제도화 필요 ○ 일반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물가 안정 계획을 마련할 필요
재정 운용	○ R&D 예산의 자율성·안정성·예측가능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R&D 예산 삭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및 삭감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역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 필요 ○ 감세로 인해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 준칙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조세 정상화를 통한 재정 역할 필요 ○ 전 정부의 재정건전성 중시 기조에 따라 미래성장 동력이 축소되었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세 정책은 세수결손, 지방교부세 감축 및 기금 돌려막기 등 잘못된 관행을 유발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관행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확장재정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등 재정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구조조정할 필요 ○ 수출 실적이 내수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낙수효과에만 의존하기보다 내수 소비를 직접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 재정 운용 방안을 수립할 필요 ○ 기금 운용에 있어, 과거의 소극적 안정성에서 탈피하여 수익 창출을 통한 기금 고갈 방지라는 적극적 안정성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등 필요 ○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갈 방지 대책 마련,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개혁을 검토할 필요 ○ 무분별한 현금성 지출을 지양하고, 2026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및 지출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 소비쿠폰은 소비침체와 물가상승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2072년에는 1인당 국가채무가 2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 예산안 편성 시 재정평가 구속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법적 근거 없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현금성 지원은 단기 효과에 그칠 뿐 승수효과가 낮으므로 지양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장기재정전망상 2065년 대한민국 국가채무비율이 156.3%로 전망되고, IMF가 비기축통화국 중 대한민국의 부채 상황을 평균 이상으로 경고하고 있는바, 세출 감소 및 세입 증대 외 GDP 증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국가의 대외신인도는 중장기 재정 안정화를 통하여 확보되는 바, 연금 충당 부채 확대 및 건강보험 재정 적자 등 재정 건전성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재정준칙 도입 필요 ○ 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른 통화량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압박하는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 기조와 부동산 정책 간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 ○ 삭감된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조속히 복원하여 해당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경제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 ○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개선율)가 OECD 최하위권이므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OECD 평균(25%) 대비 낮은 조세부담률(18.6%)을 현실화하고 재정확장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개선할 필요 ○ 복권법 제정 당시 설정된 법정배분비율이 유지되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배분 방안 마련 필요 ○ 지역별 고립 사망자 수와 예산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도 지표에 기반한 과학적인 재원 배분 체계를 수립하고 정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 ○ 국세감면 한도 산출 방식을 재검토하고 시행령에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총소요 재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명확히 반영하여 재정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 ○ 재정 자금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한국은행 차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년 미만 단기국채 시장을 도입하고, 국채 관리 기준을 순발행액으로 전환할 필요 ○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인 한국은행 일시대출 차입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재부에 유리하게 설정된 불공정 약정 조건을 개선하여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 ○ RFP(공모형 과제) 중심의 단절된 재정구조를 개선하여 전주기적 R&D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신산업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첨단재생의료법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반영할 필요 ○ 최근 삭감된 에듀테크 등 지식서비스 R&D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K-서비스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 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 ○ 마약 및 총기류 등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관세청 인력·장비 확충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 ○ 세수 오차 발생 시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는 등 국가재정법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 ○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개선을 위한 통합징수 방안 마련 필요 ○ 성인지예산을 기존 재정평가 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부처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성인지예산제도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증원에 따른 경직성 경비 확대에 대해 유의할 필요 ○ 2024년 R&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TF 구성 및 조사 계획 수립 및 자체조사 관련 후속 조치 미진한 경위에 대한 보고 필요 ○ 국민참여예산 확대 위한 정책 설계 필요
대외경제정책	○ ODA(공적개발원조)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예산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문제를 점검하고, 대기업 편중으로 인해 중소기업 선수금이 삭감되는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EDCF 사업 선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나 비리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 강화 필요 ○ ODA, EDCF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하여 경위 점검에 협조하여 위법·부당 행위 발견 시 책임을 물을 필요 ○ EDCF 민간협력 전대차관 예산의 경우 2023년 및 2024년 집행 실적이 저조함에도 2025년 1,300억원이 편성되었고, 한국수출입은행 또한 예산 편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바, 기획재정부는 무리한 예산 편성의 원인을 철저히 자체 조사하고 민간협력 전대차관의 예산 편성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및 미국의 대외 규제(IRA, UFLPA 등)가 국내 자동차·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향을 분석하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경제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및 법령 지원을 강화할 필요 ○ 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CPTPP 가입 검토에 따라 농축산업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농민 등 이해당사자의 우려를 감안하여 진행할 필요 ○ 캄보디아 타크마우 보충차관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타당성 조사 미진 및 실시절계 선행 등 절차적 모순에 대해 EDCF 지원 결정 사유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 ○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에서 추진된 사업의 특정 단체·정치인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감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 대외신인도 하락 및 미흡한 통상외교로 인하여 환율이 폭등하였으므로, 시장 및 전문가 의견 청취 필요 ○ 환율 1,400원대 고착화가 한국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구조적 적신호가 되지 않도록, 단순 구두 개입을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환 안정 대책을 수립할 필요 ○ 2026년 4월 예정된 WGBI 편입을 통한 외국 자금 유입 효과가 환율 급등과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상쇄되지 않도록 외환 시장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 ○ 경제 부총리가 환율 및 물가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대외 신인도 제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고가 실질적인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결과로 증명할 필요 ○ 해외 정제·제련 시설 투자에 대한 공급망기금 및 금융지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가계부채	○ 햇살론15 이자율이 저축은행·대부업 평균보다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고신용자 금리 인상을 통한 저신용자 금리 인하 정책은 저소득 고신용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저신용자가 성실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정부의 선별적 금리 개입은 금융 포폴리즘으로 부적절함 ○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세제·공급을 결합한 종합 정책 추진 필요
부동산 정책	○ 보유세 인상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실패한 정책으로 재검토 필요 ○ 부동산 세제, 공급, 수요 관리, 공공 역할 확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필요 ○ 보유세 인상을 통해 재고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는 한편, 신규주택을 공급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필요 ○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으므로 보유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책 마련 필요 ○ 용산정비창, 장기미집행 공원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필요 ○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때, 세제 정책을 포함하여 종합적 검토를 진행할 필요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 내 공공 유희부지 활용 및 공공 임대주택 비중 확대 등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집값 양극화 심화 및 상승 기대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 일자리 확충과 주택 공급 확대, 투기 억제제를 병행하는 정교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 ○ 2027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및 빌라 공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5년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는 9.5% 급증하는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용산 정비창 부지를 활용한 2만 호 규모의 아파트 추가 공급 필요 ○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서민 주거 불안 및 전세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 ○ 10·15 대책의 규제 지역 지정 시 최신 통계(9월) 대신 과거 통계(8월)를 사용한 것에 대한 지적 및 이에 대해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 준수 여부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 ○ 10·15 대책 이후 시장 불안이 심화되었으며 주거 취약계층인 월세 거주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된 문제 지적 ○ 규제 위주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과도한 수요 억제 대신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복원하며, 고위 공직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자의 부동산 인식 성찰을 통해 정책 신뢰를 회복할 필요 ○ 전세 매물 급감과 월세 폭등을 야기하는 임대차 규제 강화보다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단기 처방조차 부채한 미봉책이고, 대출 제한 정책은 오히려 전월세 시장 폭등을 유발하였으므로, 시장 및 전문가 의견 청취 필요 ○ 6·27 부동산 대출 규제는 청년층 및 무주택 실수요자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였다는 평가를 고려할 필요 ○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난민이 발생하는 등 서민 주거 환경이 악화된 점에 대해 정책 결정자의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 마련 필요 ○ 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 촉진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장기적 측면에서 부동산 PF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DSR 적용 예외를 축소하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지나치게 빈번하게 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자제할 필요 ○ 세제 처방보다는 금리·공급·유동성 관리에 기반한 구조적 접근을 추진할 필요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형평성 불균형을 해소하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기 위해 보유세 및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검토하고,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및 인적 공제 상향 등 실질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정부의 1·2차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화보다는 서울 전역과 인접 경기 지역의 집값 상승을 초래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발표될 3차 대책에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1인 가구의 70%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이고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비중이 64%에 달하는 등 서민·청년의 주거 현실을 고려하여 3차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필요 ○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현재 보유 중인 매물의 시장 유출을 확대하는 단기 공급책 등 구체적인 플랜B를 마련할 필요 ○ 전국적으로 4배 이상 급증한 미분양 물량이 건설 경기 침체와 지방 경제 위기로 직결되고 있는바, 기존의 공급자 지원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구매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 ○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을 전제로 한 분양제도, 리츠 연계 임대주택 공급 등 수요자 중심 대안을 마련할 필요 ○ 부동산 공급과 관련하여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공정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 ○ 부동산정책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필요 ○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지역 특화 정책을 마련할 필요
지역정책	○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지방 단위의 사회연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 고급 외국인 인력 유입을 위해 비자 및 체류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가족 정주가 가능한 ‘외국인 과학자 정착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방 내수 활성화와 연계 필요 ○ 거점국립대 위주의 일률적인 보조금 지원은 지역 내 우수 사립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립대와 사립대 간의 역할 분담 및 학점 교류 시스템 구축 등 상생 방안을 포함한 고등교육 발전 전략 수립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관련 조폐공사 운영 사이트를 공공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여 민간 독점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서비스 강화 필요 ○ ‘서울대 10개 만들기(거점국립대 육성)’ 사업 관련 세부 계획 마련 및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현지에서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조성 필요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필요성이나 입장을 표시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 ○ 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요소가 예타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통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 ○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위해 5극 3특 체제 추진 및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표명할 필요
공공부문	○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문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 체계 구축 및 직급 조정을 포함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 필요 ○ 전문성이 결여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하고 기관장이 개혁 의지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기관장의 전문성 검증과 조직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한국투자공사가 원활히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요건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등급제 평가가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엄정한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 ○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장의 전문성과 임기를 존중하여 제도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정치적 외압이 없도록 기획재정부 차원의 보호 장치 마련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6개월 미만 육아휴직자에 대한 실질적 인력 충원 지원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육아휴직 현황을 전수조사하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도 '가족수당(배우자 수당 등)'을 신설하여 출산·결혼 장려 정책의 형평성 제고 필요 ○ 복지카드 관측 지원금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지침 위반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임직원 혜택이 기관이나 노동조합으로 임의 유입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 ○ 단순 가이드라인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정을 통해 기관장 평가제도를 신설한 것은 부적절하며,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법안소위 논의경과와도 부합하지 않음 ○ 2022년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할 필요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이드라인은 법으로 정해진 경우가 없고 임명된 지 6개월이 안 된 기관장에 대해 평가한 적도 없다는 점, 평가기준의 주안점은 정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 ○ 공공기관 통폐합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총인건비 제도로 인해 공공기관 내 임금 이중구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기재부 내 공공안전정책팀 재설치를 검토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도 공공기관 평가 시 안전관리 평가대상에 포함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공공기관 부채가 과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지출 압박을 공공기관에 전가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재정건전화에 노력 필요 ○ 한국전력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기요금 계약종별 원가회수율 차이를 해소하고, 요금체계에서 복지·할인혜택을 점검하여 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해외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제도의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해외사업·미래전략사업 등 특정 조건에 한해 즉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정원통제 제도를 완화할 필요 ○ 공공기관 간 복지 격차와 조직 사기 저하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공제회 설립 로드맵을 검토할 필요 ○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운위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 공공기관 자회사 복지예산을 모회사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자회사 운영실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노동자의 명절상여금도 정부부처 공무원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모·자회사 간 처우 격차를 해소할 필요 ○ 공공기관 모회사와 자회사 간 계약자료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 ○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공무직 예산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공무직 처우개선에 활용할 필요 ○ 공무원과 공무직 간, 소속기관 공무직 간 복리후생 및 처우 격차에 대한 단계적 개선계획을 마련할 필요 ○ 공공기관 임원 알박기 문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개선 필요 ○ ILO 권고에 따라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이 단체교섭을 제약하지 않도록 총인건비 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 ○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해외사업 인력관리 부대비 용, 사내대출 인정상여 등을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하고 건강검진비의 평가 항목 삭제를 추진할 필요 ○ 주4.5일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구조 왜곡과 노사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인 총인건비 인상률 예외 적용 및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 ○ 임금 인상 재원 확보를 위한 의도적 불용을 인정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자녀수당 신설 허용 및 장기간 동결된 복지비의 정기적 인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자회사의 비용 부담이 본사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관리 종료 사실을 산하기관에 명확히 안내하여 불합리한 예산 동결을 방지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 체계를 전면 원상복구할 필요 ○ 전세사기 피해보상 등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노력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적 수준의 성과를 반영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할 필요 ○ 일률적인 경상경비 삭감 지침을 경영평가 가점에서 제외하고 물가 전망을 반영하여 경비를 편성하며, 일·가정 양립 평가지표의 배점 확대 및 계량화가 필요 ○ 방만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경영평가 기준을 국민 체감과 공공성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사례와 같은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을 방지할 필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액을 노사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보장하고, 1인당 기금액을 상향하는 등 기재부의 지침을 개선할 필요 ○ 노동이사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불이익 금지 등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기타 공공기관 및 지자체까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필요 ○ 방만한 기관 운영과 금융사고 대처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 ○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결정에 따른 단체 교섭권 침해 및 경직된 총인건비 평가방식 및 획일적 임금억제의 부작용 개선 등 총인건비 제도의 전면 개선 필요
기후위기 대응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전력망 안정성, 수자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원 부족, 탄소중립 역행 등 중대한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고, RE100 충족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필요 ○ RE100(재생에너지 100%) 중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원전을 포함한 CF100과 EU 그린 택소노미의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포스코·현대제철 등 대규모 배출 기업에 대한 과도한 배출권 할당이 기업의 감축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산업별 감축 역량을 정확히 반영하고, EU 탄소국경제도(CBAM)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할당 계획 수립 필요 ○ 기후테크 글로벌 선도국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GDP 대비 매우 낮은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 ○ 기후대응기금이 일반·특별회계 전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배출권거래 수입 비중이 낮아 재정이 불안정하므로 안정적인 자체 수입 기반 마련 필요 ○ 배출권 무상할당 과다와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배출권 거래가 위축되고 수입이 계획 대비 미달하고 있으므로,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할당 방식 및 유상할당 비율 조정 필요 ○ EU 대비 1/10 수준인 현저히 낮은 국내 탄소가격으로 향후 수출 시 국내 기업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탄소가격 격차 해소를 위한 배출권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 ○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대응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이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므로, 위축된 R&D 예산과 보조금 정상화 및 수소 경제위원회의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 회복 필요
노동정책	○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양성할 필요가 있고, 단편적·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 ○ 실노동시간 단축 논의 시 노동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청년 고용을 저해하지 않는 점진적 정년연장 로드맵 마련 필요 ○ 대통령의 ‘실용적 시장주의’ 및 ‘기업 적극 지원’ 약속이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 등 반기업적 입법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
사회복지	○ 청년들이 고용·주거·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재정지원 체계 구축, 기획재정부 주도 ‘청년 대응 기구’ 설치 등 책임 있는 대책 강구 필요 ○ 부처별·생애주기별로 분절된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영국·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일 필요 ○ 주거 빈곤 가구 축소 등 양극화·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 및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자산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부동산대출, 복지지원 등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의 인식전환 필요
기획재정부 조직 및 운영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된 R&D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재조정하는 관행은 부적절하므로, 해당 관행을 근절하고 지원 역할에 충실할 필요 ○ 2023년 R&D 예산 삭감 관련 잘못에 대하여 자체 조사하고 개선할 필요 ○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채무 관리 사무까지 담당하는 것은 유례없으며 부적절함 ○ 재정경제부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검토하여 보고할 필요 ○ 기재부 1급 공직자 7명의 전례 없는 일괄 사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 행위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민정부 이후 인사 자료와 개별 인원 7명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한 자료 제출이 필요 ○ 기재부 소관 12개 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통계정보원 등 9개 기관의 고용 실태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고용 이행 대책 수립이 필요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에 따른 견제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재정 투명성과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
관세 대응	○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으므로 특별법 제정, 철강 분야 고율관세, 국내투자여력 감소 등 국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우리 국익을 고려한 후속협상 필요 ○ 잠재성장률 저하, 일자리 및 투자감소 등 우리 경제 상황과 대미 총투자액 대비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했을 관세협상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미국의 과도한 현금 지불 요구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교적 선방한 정부의 협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협상에서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행보를 지지하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최악은 피했으나 트럼프 요구액으로 수렴되며 국익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일본 등 타국 대비 과도한 투자·부담 비중을 고려할 때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재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 ○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하여 양국 간 발표 내용의 괴리와 일본 사례 등 정보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합의 액수와 세부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익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 ○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합의 사항을 합의된 것으로 호도하는 왜곡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특히, 쌀·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외신의 상이한 보도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 ○ 협상 성과에 대한 정부의 과장된 홍보와 일관성 없는 발언이 국민적 신뢰를 저해한 점을 엄중히 지적하며,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성과 호도를 바로잡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소통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부적절함 ○ 한미 관세협상 관련 비망록 자료를 제출하고, 협상에 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대미 관세 협상 시 핵심 쟁점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할 필요 ○ 대미 관세 협상 시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환율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FX 거래의 제한’ 등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할 필요 ○ 한미 FTA 0% 특혜 소멸 및 자동차 관세 15% 인하에 따른 실제 산업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25% 관세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 사실을 시장에 명확히 설명할 필요 ○ 대미투자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 통화스와프의 최대 만기는 3개월로, 이를 대미 투자금 지급 문제를 상쇄할 대안으로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함 ○ 대미 관세 협상에서 거론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투자는 대한민국의 외환보유액과 외환시장 여건상 수용이 불가능하므로, 미국 및 제3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포함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외환스와프 언급 등 전략적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실질적인 국익 확보 필요 ○ 대미 관세 협상 시 대한민국 외환보유액 규모와 외환시장을 감안하여 협상할 필요 ○ 대미 투자에 지출 가능한 2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지분 출자에 사용하는 경우 유동성 제약으로 회수 불능 가능성이 있어 한국은행법 취지에 반할 수 있고,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투자 또한 현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행 제도와 충돌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대미 투자에 관하여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 ○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소멸과 환율 급등 등 외환시장 리스크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재원으로 활용될 자산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 ○ 대미 투자금의 원리금 회수 구조, 이자율 설정, 환차손 보전 장치 등에 대한 투명한 설명 필요 ○ 연간 150~20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우리 기업이 강제로 참여하지 않도록 상업적 합리성을 엄격히 따져야 하며, 철강 관세 문제 및 농산물 수입 검역 절차에 대해서도 국익을 우선으로 협상에 임할 필요 ○ 투자 실패 시 한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익은 미국이 독점하는 구조 등 독소조항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심리적 안정 효과가 큰 통화 스와프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 필요 ○ 대미 관세 협상 시 현금투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협상의 속도보다는 국익 우선 원칙을 견지하고, 상업적 합리성·재정건전성·외환안정성 원칙을 바탕으로 국익을 철저히 준수하며 협상에 임할 필요 ○ 한국경제인협회의 대외비 투자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고 협상 시한 임박 시점까지 대응이 지연되는 등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대미 협상 과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 ○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소외된 채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금액 축소가 아닌 분납 방식에만 치중하여 실질적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지적 ○ 투자 원금 회수 시까지의 이익 배분 비율 하향 및 할부 방식으로의 전환 등 주요 조건의 변경 과정에 대해 파악 ○ 철강·자동차 부품 등 산업에 대한 관세 영향이 우려되므로 기업의 불안감에 대해 유념할 필요 ○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 ○ 정부는 미국 조지아주 감금 및 대미 투자에 대하여 국익 중심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고, 자동차·반도체·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산업에 대한 세제·투자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대미 관세 협상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은 관세율이 50%인 경우 수출 30% 감소, 철강은 관세율이 75%인 경우 수출 60% 감소, 알루미늄은 관세율이 75%인 경우 수출 32% 감소가 예상되므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자동차 관세 인하와 달리 50%의 고관세를 적용받는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존속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별도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 ○ 반도체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적용 여부 등 여전한 불확실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대응이 필요 ○ 관세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부품 및 철강 중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소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및 관세 대응 바우처의 중복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 ○ 관세 협상에 기여한 대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법인세 인상, 상법·노조법 강화 등 기업 부담 정책 추진 시 정책적 균형과 배려를 재검토할 필요 ○ 독과점 규제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분리하여 접근함으로써 통상 마찰은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시장의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 ○ 대미 관세 협상 시 대통령·국무총리·정책실장 등 주요 인사 발언이 반미 여론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대미투자 확대에 의한 국내 제조업 투자 위축과 청년 고용 등 국내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
기타	○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었으나 유사니코틴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바, 업계가 규제를 피해 유사니코틴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 등과 협의하여 동일한 관리 틀을 마련할 필요 ○ 온라인 플랫폼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 ○ 대구 군공항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무국적 거래소인 바이낸스 글로벌은 자금 세탁 및 조세 회피 창구로 이용될 우려가 크므로 고압스와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의 오더북 공유 금지 등 가상자산시장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 ○ 자사주 일률 소각 등 상법 개정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검토하여 개정 과정에서 반영할 필요 ○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보다는 인센티브와 기관 간 정보 공유 위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 ○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당시 절차, 투입 자금의 정산 절차 등 경위를 확인할 필요 ○ 정부 전산망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점검할 필요 ○ 특활비를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사용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환수조치 필 ○ 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메이슨 중재판정금 관련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존 용산 대통령실 처리방안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종합계획 마련 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진행할 필요 ○ 서울 용산구 후암동 구 해병대사령부 본관 건물의 존치, 문화재 등록 및 해병대 역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기준 중위소득 산정 관련 전반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서부선 및 GTX-C 노선 등 민자·국책 사업의 공사비 기준을 현실화하여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특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히 SRT 의정부·양주 연장을 위해 GTX-C 공사 시 지하연결선로 선시공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필요 ○ 하도급 불공정 관행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발주자 지정 방식’을 재도입하고, 관련 계약예규 개정 및 법제화를 통해 원·하도급자 간 상생 협력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중소기업의 적정 대가 확보를 위해 민간 기준을 준용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국가 계약법상 엄격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 ○ 조달청 평가 기준 완화로 인한 부실 업체 낙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입찰제도 개선 필요 ○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통화·외환·금융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법정 정책기구를 구성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거래 방지 및 외환규제 우회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필요 ○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사업 등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 정권에 따른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 등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처분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 ○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매각 건수가 과거 대비 급증했으나,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비중 역시 대폭 상승하여 자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엄중히 점검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2026년도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성이 높은 자산은 무분별한 매각보다 국가 차원의 활용 방안을 우선 모색할 필요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비축 토지의 낮은 활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드림파크 승마장 등 공적 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친화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 ○ 국가 핵심 재정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보안 지침 및 내부 검증 기준을 마련하여 선제적인 무선 백도어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실효성이 결여된 임시조직인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정식 직제화하거나 해체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지침 위반 기관에 대한 감사 및 환수 방침을 마련할 필요 ○ 한국세무사회의 감리자료 미제출 문제 등 공정성 위협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 대책 수립 및 정례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서비스 산업별 경력직 대상 AI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형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버티컬 AI 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를 추진할 필요 ○ 기업 자율 재편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직접 중재자가 되어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패키지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 ○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글로벌 배송물류센터 확충 등 역직구 활성화 지원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및 기존 용산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므로, 「국유재산법」에 주요 국가기관 이전 시 국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청사 확보 비용 등에 대한 비용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조직 개편에 따른 비용 추계 정보를 작성하여 국민과 국회에 제공할 필요 ○ 중소기업 공공 대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 해결 위해 조달청,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적기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 ○ 금융통화위원회가 특정 대학·학과 출신 및 내부 인사 위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공적 절차를 도입하여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식견과 전문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우수한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연구의 자율성, 사회적 존중, 경력 개발 기회가 결합된 보상 체계 구축 필요 ○ 신성장 동력 창출 및 통화 주권 확보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를 설계할 필요 ○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 지원 신청 및 실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 신약 및 의료기기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 ○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가 미흡한 농축수산물 할당 관세의 기계적 반복 적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품목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선정 시 대기업 혜택 집중 방지와 유통사·수입업체 이익 귀속 차단을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 ○ 할당관세가 농가 생산기반 붕괴 및 세수 감소를 야기하지 않도록 품목별 효과의 정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그 세부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 및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 소득 분포를 왜곡하는 기재부의 평균임금 기준 분석을 지양하고, OECD 중위소득 기준을 도입하여 조세지출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불평등 완화 관점에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 ○ 바이낸스 글로벌 등 무국적 거래소의 국내 오더북 공유를 제한하고,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유입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 ○ 대구 및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법적 근거에 따른 국가 사무이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보상 문제 등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필요 ○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법무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기업 예타 면제 및 BTL 등 다각적인 추진 방안 검토 필요 ○ GTX-C 노선 공사 진행이 전무하여 국민의 오해를 사고 있는바, 정부의 소통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필요 ○ 특정 민간 업체가 지자체 충전금을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고객 데이터를 불법 가공하여 사익을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운영 실태 전면 점검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 중단·지연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 진해신항 사업 지역업체 도금액 비율이 저조하므로 기재부 고시에 지역업체 공동계약 참여비율 의무화 대상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추가할 필요 ○ 정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관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선 공약 이행 및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 시 정책성 평가 비중을 대폭 강화할 필요 ○ 국가 안보 및 군 작전성과 직결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자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이므로, 국가 주도의 추진 원칙을 확립하고 공자기금 용자 및 금융비용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원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리튬이온 배터리 배치 매뉴얼 부재 및 무자격 업체 하청 문제를 근절하고, 핵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중화 예산 확보 및 중장기 복구 계획 수립 필요 ○ 전기차 보조금, 면세 사업권, 문화콘텐츠 등과 관련하여 중국과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청년기본법상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과거 확장재정과 국가부채 증가로 잠재성장률이 정체된 상황에서 경제구조 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필요하며,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및 실질적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대통령 주도로 회의를 소집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므로, AI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예산 반영과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코로나19 특례에 기반한 수의계약이 과도한 문제가 있으므로 특례 연장을 중단하고, 퇴직 공무원이 대표인 기업과의 수의계약 및 보훈·장애인단체와의 수의계약 관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 ○ 공공조달 대금이 적시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달청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유사니코틴 규제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 필요 ○ 모태펀드 자펀드의 운용실적을 출자부처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 ○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성과입증된 데이터 바우처 사업 축소 및 성과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 확대에 대한 의견 ○ 기업 원하는 인재의 적시 공급 위한 취업연계형 계약학과 확대 필요에 따른 활성화 정책 마련 필요 ○ OTT 매절 계약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저작권 생산 및 보호 강화 통한 창작자 권리 보장 필요 ○ 상병수당 조속한 도입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연계한 구조개편 필요 ○ 투기심리가 주도하는 비정상적 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처벌강화, 통계 개편 및 다주택자 규제개편 등 방안 마련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인천 교통망 부족 해결 위한 SOC 예타 신속 추진 등 인천 역차별 해소 필요 ○ 전략적 예산 투입을 통한 정부 AI 정책의 내실화 필요 ○ 배터리 산업에 대한 ‘생산유도형 금융지원’ 별도 배정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마련 필요

나. 세제 부문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조세정책 일반	○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정신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명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해 불로소득보다 노동소득이 더 존중받는 과세 형평이 이루어질 필요 ○ 프랑스 사례와 같이 경직된 재정준칙과 감세가 세입기반 약화와 재정여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세제 정상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재정준칙을 경제 상황과 정책 목표에 맞게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 ○ 정부가 국민 전체의 이익과 경제 성장을 조화롭게 이끌기 위해 유능하고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감세로 인한 불평등 심화 문제를 피하고 서민 중산층 소득 산정 방식 등을 검토해 OECD 기준에 맞춘 보편적 체계를 갖출 필요 ○ 정부는 지난 정부 대비 세수기반을 회복하고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으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 제한적이고 주력 제조업과 소액투자자가 배제되고 있으므로 보완 대책 마련 필요 ○ 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국세수입이 경성성장을 대비 크게 감소하여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므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감세정책으로 자산·소득 불평등은 확대된 반면 자산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자산세를 종합적·중기적 관점에서 개편할 필요 ○ 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 감소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조세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며,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거래 관련 세제와 국내생산촉진세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 ○ 지난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해 재정 여력이 크게 약화된 만큼 근본적·구조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며, 자산·자본소득이 극소수에 집중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배당 소득 분리과세와 상속·부동산 세제 등을 응능부담과 조세형평 원칙에 맞게 전면 재설계할 필요 ○ 우리나라 재정규모 및 조세부담률이 OECD 대비 낮아 재정이 소득재분배와 경기대응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지출 증가 및 국가부채 급증 우려가 있으므로, 부유층 조세부담률 제고, 재정 정상화 및 중장기적인 재정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노동생산성 혁신, 핵심 경제정책 과제와 미래 전략 산업, 국가 기간산업, 우수 인재 육성·확보를 위해 법인세 등 조세정책의 일관된 원칙과 함께 조세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세금·대출·청약 등의 제도로 인해 혼인신고 지연이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청년 결혼과 출산을 촉진할 수 있는 조세제도 개선 필요 ○ 희생절차 활성화와 채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희생 매각자산에 대한 세제 특례 마련 필요 ○ 형평 과세, 민생 지원,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하여 과거 감세 정책의 정상화 필요 ○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관세 감면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세금 귀착효과를 고려하여 조세지출이 사회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도록 설계 개선 필요 ○ 자산불평등이 악화되는 문제 및 총국세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자산 세수는 증가하지 않는 문제 등 자산 세제 구조 전반적으로 공정과세, 응능과세 차원에서 검토 필요 ○ 과거의 감세, 세수결손, 미래산업 붕괴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
소득세 관련	○ 주식양도세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부의 배당소득 과세체계 방안이 기업에게 배당 확대 동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므로, 투자자들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주환원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개편 필요 ○ 정부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대주주 양도세 최고세율(25%)보다 높아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면제요건 중 하나인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금액 증가’와 적용대상(2026사업연도에 대한 배당부터)이 기업의 배당결정을 왜곡시킬 우려 ○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배당 조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성장과 투자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약 25%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특정 고배당 기준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증권거래세 인하 복원으로 개인투자자 부담 증가와 시장 유동성 감소가 우려되므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제를 마련하고 투자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 시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였으므로, 정책결정 과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 ○ 세제 단순화와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법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지역균형을 위해 근로소득세 차등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시장규모의 정확한 파악, 거래내역의 면밀한 파악, 국제 공조 강화 등 과세체계 전반적으로 준비 철저 필요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준비 필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 검토 필요 ○ 내향선원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 상향 필요 ○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국내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 매매차익 비과세 검토 필요 ○ 주주 배당 확대를 위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등 보다 적극적 대응 필요 ○ 현행 소득세 열거주의를 미국과 같이 소득세 포괄주의로 변경 필요 ○ 고향사랑기부제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필요 ○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 필요 ○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율 상향 및 공제구간 조정 필요 ○ 복지포인트에 대해 민간에는 과세하고 공무원이나 지자체 등은 비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자본소득이나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소수 상위계층들에게 혜택이 독점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신중 필요 ○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연착륙 등을 위해서는 장기투자자에 대한 지원이나 보유기간별 차등세율 도입, 배당 재투자에 대한 비과세 등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필요 ○ ISA계좌 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한도에 대한 검토 필요 ○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감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구간별 분리과세를 차등하는 방안이나 성과평가제 도입 필요 ○ 국가투자우선산업인 주력제조업체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건 완화 필요 ○ 2천만원 이하 소액투자자에 대한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안 마련 필요 ○ 기업승계형 m&a 활성화를 위하여 제3자 매각시 양도소득세가 증여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에 대한 개선 필요 ○ m&a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나 제제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박근혜 정부 당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7개월밖에 시행되지 않았으며, 유일하게 시행된 2016년에는 평균 배당성향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었음에도 부정확한 정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 세제실 차원에서의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통장 소득공제 범위 확대 필요 ○ 상호금융 비과세 축소 정책은 지방소멸과 국민자산 형성을 저해하므로 재검토 필요 ○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소득세에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 ○ 비거주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배당소득세 인하가 지배주주의 배당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임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계열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보수를 가져가는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 ○ 고령화와 인력 유입 부족으로 내항선원 수급난이 심화되고 국가안보 측면의 중요성도 큰 만큼, 외항선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내항선원 급여 비과세 한도 개선 필요 ○ 자사주 취득방식, 기존 보유 자사주 처리방식 등과 관련한 세제 정비와 함께, 자사주 과세체계를 손익 거래가 아닌 자본거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
법인세 관련	○ 조세는 국가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세정책과 산업정책을 통해 법인세 과세대상 기업을 확대하여 세원을 넓힐 필요 ○ 조세는 국가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세정책과 산업정책을 통해 법인세 과세대상 기업을 확대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하여 세원을 넓힐 필요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이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순 세율 조정보다는 세원 구조 개선과 국제경쟁력·경제성장을 고려한 근본적·구조적 대책 필요 ○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OECD 평균 대비 높은 편이므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대신 R&D·시설투자 등 편셋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보유자금을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정책을 마련할 필요 ○ 국내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상보다는 조세감면 및 투자세액공제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할 필요 ○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활성화보다는 사내유보금·배당 확대에 이어졌으므로, 실효세율이 낮은 대기업 대상 실효세율이 낮은 대기업 대상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확보된 재원을 중소기업에 정상화하고 확보된 재원을 첨단산업·R&D·민생 지원에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 ○ 문화콘텐츠 산업 중 영상·웹툰과 같이 게임·음악에도 제작비 세제 지원을 확대해 형평성을 높이고, 단기 세수 감소를 넘어 투자·부가가치·고용 증가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디지털 매출에 대한 실질과세 방안을 마련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요 ○ 지적재산권과 특허 출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법인세 등 기업들의 조세감면 혜택에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에 대해 비수도권으로 본사 이전시 법인세율 차등감면제도 등 대책 마련 필요 ○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하여 장기 계약시 법인세 감면 등 대책 마련 필요 ○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 벤처투자 세액공제 확대 필요 ○ 법인세율 인상 재검토 필요 ○ 통합고용세액공제 한도 상향 필요 ○ 생산 세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개선안의 조속한 도입 필요 ○ 연안화물선사, 화주 상생을 위한 법인세 감면 필요 ○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판매시 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 ○ 국내생산촉진세제 요건 중 국내판매는 제외하고 국내생산만 충족하면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검토 필요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 기업에 대해 국내생산촉진세제 혜택을 병행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세밀한 설계 필요 ○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 세액공제 활용을 위해 기재부 차원에서의 조속한 세법 해석 필요 ○ 건축물 투자비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포함할 필요 ○ 싱가포르나 대만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세수 상승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자동차부품 중소기업들의 간접 수출 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해 각종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 필요 ○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 수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 ○ 게임·음악 산업도 한류 확산과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문화 콘텐츠 분야인 만큼, 기존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실태에 맞게 재검토하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해당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필요
국제조세 관련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투자 효과에 대해 평가 필요
부동산세제 관련	○ 정책 입안자들이 부동산정책 개편방안으로 세제강화를 제시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 차원에서 대책 마련 필요 ○ 종합부동산세의 본질을 사회로부터 받는 편익의 대가로 명확히 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적정화하여 소위 ‘뜯뜯한 한 채’ 수요를 제한할 필요 ○ 현행 주택 수 기준 세제의 한계를 고려해 주택가액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포함 과세 방안과 ‘똥똥한 한 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 토지·주택정책 실패로 다주택자 비중이 상승하고 갭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공급 확대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요관리 대책을 지속·강화하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정책도 적극적·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 ○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가수요·투기수요 억제 및 주택공급 확대 기조 하에서 수습하고,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권을 전제로 한 분양제도 활성화 및 리츠 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필요 ○ 다주택자 보유세 세제 개편 필요 ○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공제 규모 및 실택 정확히 파악 필요 ○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임대료로 전가되고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구축주택 물량 공급을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한시적용에 대해 검토 필요 ○ 조정대상지역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한시적, 조건부적 양도세 완화 방안 필요 ○ 부동산 양도차익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설계 필요 ○ 임대주택 사업자 중 주택임대업 코드 기입 오류로 인해 과거 종부세 합산배제를 인정받아왔으나 현재 소급추징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소급추징 유예 및 대책 마련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와 보유세 인상 정책은 주택 거래를 오히려 제약할 수 있으며 정책일관성에 대한 고민이 없으므로 재검토 필요 ○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려는 것은 과거 실패한 정책이며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 ○ 주택 공급과 자가보유율, 유주택비율 상승이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감면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 소유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부동산 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필요 ○ 현행 부동산세제가 소위 ‘똥똥한 한 채’라고 지칭되는 고액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서 세 부담을 저감시켜 줌에 따라 시장이 왜곡되고 있으며,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과도하므로, 해당 대상자에 대한 세 부담 정상화 필요 ○ 생활물가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역·세대별 여건을 반영한 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보유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 필요 ○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는 판단은 국가간 실효세율 비교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을 수 있는 만큼,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보다 공급·금리·유동성 등 근본 요인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세금 강화 등 수요 규제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이루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기 어려운 만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거래·공급을 제약하는 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민간 분양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 필요 ○ 세금을 통해 시장가격 자체를 직접 조절하려는 접근보다는, 조세의 공정성 제고와 자산 양극화 완화를 목표로 하는 방향에서 부동산 세제를 재정비할 필요
상증세 관련	○ 상속세 과세대상 대부분이 부동산 중심의 중산층인 점을 고려할 때 주거안정과 생활 보호를 위해 배우자공제 등 공제 한도 상향이 필요하며, 동시에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할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인한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문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 범위 축소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 축소,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기준·한도 확대에 대한 검토 필요 ○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제출된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개정안은 초부자의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이 어려울 경우 인적공제 현실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과 함께 시기·금액별 자본이득 과세를 포함한 하이브리드형 상속세 개편을 검토할 필요 ○ 배우자 상속제도와 관련하여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를 상향하는 경우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보다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상속세 부담으로 고소득자가 한국을 이탈한다는 근거없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응 필요 ○ 편법 세습을 정부가 지원하는 현황에 대해 시정 필요 ○ 가업승계제도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한 고민 필요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사무처리규정 개정(훈령 제2681호)과 관련하여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속세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상장주식 상속·증여세가 저평가된 주가만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비상장주식이나 실제 경영권 거래가치에 비해 과세가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주가가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 할증 및 물납제도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 필요
관세 관련	○ 해외자원개발 및 중간재 도입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관세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제약,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할당관세 제도 개선 필요 ○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 필요 ○ 혁신 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 지원 제도화 필요 ○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 지원 등을 위해서 관세청의 CBP 사전심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 ○ 농축수산물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물가안정에 미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 제시 필요 ○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할당관세 물량 배정 및 수입유통구조 개선 필요 ○ 할당관세 지정 및 변경과정의 국회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인 반면, 국내 생산자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품목별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수급 상황에 맞게 보다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 등 간접세 관련	○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업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사례를 계기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업체 및 환급 규모에 대해 추정하고, 향후 상거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상거래 양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필요 ○ 플랫폼 미정산대금 피해업체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 지원을 위해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플랫폼 미정산대금 피해업체 현황 및 부가세 환급 규모 파악 필요 ○ 증권거래세 인상 재검토 필요 ○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교육세 증세 재검토 필요 ○ 교육세 인상이 이자로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명확한 설명 필요 ○ 교육세 인상은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다는 것에 대한 기재부 차원의 분석 필요 및 재검토 필요 ○ 교육세 인상이 지방균형발전과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금융,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인상 재검토를 위하여 교육세 인상액 3년 인플레이션을 추가하고 세율 인상폭을 축소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 필요 ○ 중고품 산업 확대를 위하여 중고자동차로 제한되어 있는 부가세의제대입을 중고품으로 확대 필요 ○ 장류업계 부가세 면세기간 연장 반대 의견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담배의 범위가 확대된 최근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하여 사재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소비자 보호 및 주류시장의 건전성 유지, 주세의 형평성 및 공평과세 등의 측면에서 발포주를 맥주에 포함시킬 필요 ○ 공평 과세 및 세수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본처럼 알코올 농도별 차등세율 도입 방안 등에 대해 검토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김리아)에 대한 부가세 감면 필요
세수실적 및 세입예산 관련	○ 조세지출이 계속 늘어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어, 재정 안정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조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조세지출이 고소득자·대기업에 집중되고 일몰 연장이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감안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결정할 필요 ○ 세수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아닌 세원을 늘리는 근본적 고민 필요 ○ 조세지출의 상당 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불평등 완화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소득분위별 귀착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조세감면 제도를 저소득층 지원과 분배 개선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 ○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실적이 이후 연도의 감면 한도를 다시 높이도록 국세감면율 한도 산출 방식이 설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재정비 필요 ○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의 과도한 감세정책이 세수 감소와 재정적자 확대를 초래한 만큼, 재정준칙 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세 기조를 재검토하고 조세 정상화등 통한 세금제도 개편 필요 ○ 혼인으로 인해 취득세 등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혼인신고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세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할 필요 ○ 재정 부족의 원인과 재원 조달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감세 정책의 영향과 재정 운용 실태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 ○ 경기 여건에 맞는 재정·조세정책을 추진하되, 국민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고효율 투자 및 성장동력 확보 위주로 재정지출을 집행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
기타	○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일몰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연 장 필요 ○ 자사주 논쟁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등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게임산업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게 임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 ○ 세무자료 제출거부 기업에 대한 명단공개 등 추가 적 제재수단 검토 필요 ○ K-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 한 지원 등 세제 지원 필요 ○ 한국세무사회 감사 결과에 따라 감리자료 미제출자 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 감독 방안 마련을 위해 주 기적인 감사 계획 수립 등 대책 수립 필요 ○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 등 검토 필요 ○ 사이버 침해 대응이 처벌·은폐 중심으로 흐르지 않 도록 자진신고 면책제도와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 하는 한편, 기업의 보안 투자와 협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제도 마련 필요

2. 국가데이터처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통계의 기준과 원칙 관련	○ 데이터처 승격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서 과거 통계 왜곡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외압이나 이해관계에 의한 통계 왜곡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 ○ 통계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며, 자문 및 시험 조사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 ○ 과거 소득통계 가중값 산정 변경 사실 및 시계열이 흐트러진 정확한 시점을 기록·예방 차원에서 통계 시스템 또는 통계정보보고서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 ○ 정치적 감사를 지양하고, 감사 과정에서 고통받은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대처 방안 마련 필요 ○ 동성 배우자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에 대한 통계 반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동성 동거 실태 파악은 법적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실체를 반영하는 통계적 책무이며, 혐오와 차별을 경계할 필요 ○ 동성 배우자 항목 도입과 관련된 법률·전문가 자문 내역 제출 필요
통계 품질 개선 및 작성·활용 개선	○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국가정책에 활용되는 통계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통계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노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의성 확보를 위해 공표 시기를 단축하고, 행정자료 활용을 가로막는 금융실명법 등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변화된 소비 패턴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물가지수 개편 주기를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고 보조지표 활용을 강화할 필요 ○ 지역소득통계 시 ‘순처분가능소득’ 및 ‘순본원소득’ 데이터를 추가 공개하고, ‘개인소득’ 등 오해를 유발하는 통계 용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 ○ OECD 주요국과 달리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서 제외하여 발생하는 현실 물가와의 괴리를 해소하고, 이를 주지표로 전환하여 통계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
통계의 개발 및 신설	○ 사회이동성 지표 등 기본권 보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개발 필요 ○ 가상자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통계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젊은 층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가구 단위 조사 방식을 개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 국제질병분류 번역 및 현장 적용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되, 사회적 합의가 미비한 ‘게임이용장애’ 코드 등재 여부는 별도로 분리하여 사회적 합의 후 추진 필요 ○ 급증한 사업소득자 및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업종(기타자영업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2018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년 ILO(국제노동기구) 개정 체계를 반영한 종사상 지위분류를 선도적으로 공표할 필요 ○ 플랫폼 종사자 88만 명 돌파에도 국가 승인 통계가 부재하므로, 실험적 통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필요 ○ OECD 기준에 맞춰 외로움 조사 항목을 세분화하여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 ○ 단순 취업자 수를 넘어 ‘고용의 질 지표체계’를 공식 통계화할 필요
조사방법 및 환경 개선	○ 조사 거부·폭언 및 민감 항목에 따른 응답자 거부감 등 현장 조사요원이 직면한 물리적·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및 상해보험 자부담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사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경제통계통합조사 시 재무제표 제출을 압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유관 기관과의 자료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위해 수만 대의 태블릿PC를 대량 구매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단기 사용 특성을 고려한 렌탈·리스 도입 및 기존 기기 재활용 등 예산 절감 방안 강구 필요 ○ 인구주택총조사 응답률 하락 추세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참여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마련 필요 ○ 즉석밥은 제외되고 무관한 외식 품목이 포함된 현행 쌀 소비 통계의 오류를 시정하여 변화된 식생활 현실을 반영한 통계 생산 체계 구축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국가데이터처 조직·운영 및 기타	○ 국가데이터처 승격 취지에 맞춰 부처별로 파편화된 데이터 관련 법령과 조직 체계를 통합하고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법적 권한을 명문화하는 한편, 본부와 지방청 간 명칭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하여 종합적인 데이터 전략 수립 및 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 ○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부적절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기관의 적절한 대응 필요 ○ AI 육성을 위해 데이터 관리·운용·활용의 혁신이 중요하므로 국가데이터처 인력증원에 노력할 필요 ○ 분산된 국가 통계 자원을 국가데이터처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여 품질 제고 필요 ○ 표본 규모가 작고 주관적 개입 우려가 있는 주간 부동산 통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근무 시간 유지를 위해 노력 필요 ○ 연 1회 수준의 도청 점검에 따른 보안 공백 해소를 위해 상시 탐지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취하고, 무선백도어 해킹 등 신종 보안 위협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별도 지침 및 구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 ○ 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국가통계포털(KOSIS) 장기 마비 사태의 신속한 복구와 전문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향후 데이터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복구 대책 및 세부 계획을 마련할 필요 ○ 직원대상 통일교육 콘텐츠를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콘텐츠로 대체할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개선 방안 마련 필요(기관 공통) ○ 조사비용 현실화 등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합리적 예산 편성 필요 ○ KOSIS 검색 기능 및 UI 현대화 노력 필요 ○ (각 지방통계청)국가데이터처 승격에도 불구하고 지방 조직은 여전히 ‘통계청’ 명칭을 유지하는 등 본부와 지방청 간 명칭 불일치로 인한 혼선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명칭 일원화와 행정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 (호남)인구주택총조사 수행 시 주말·야간 및 도서 지역 조사요원의 1인 단독 조사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 및 책임 소재 규명 대책을 강화하고, 고령층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과 지자체 조사 과정에 대한 국가데이터처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할 필요 ○ (충청,호남)지역별 물가 수준을 반영한 지역 간 비교 통계 및 지역 특화 지표를 개발하여 잠재성장률 하락의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 ○ (호남)생계 곤란 해소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주 35시간으로 확대되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인력 수급 등 행정 편의적 사유로 다시 단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 유지를 위해 본부와 적극 협의할 필요 ○ (동북)대구·경북 지역의 안전 인식 비율이 낮고 신종 질병 및 자연재해, 산불 등 취약 요소가 많으므로, 통계 분석 결과가 단순 공표에 그치지 않고 실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제 지자체 정책에 반영되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 추적 조사를 내실화할 필요 ○ (호남)국가데이터처 승격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조직의 역할을 분절적인 통계 생산에서 통합적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으로 확대하고, 지역 데이터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3. 국세청(서울·충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포함)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부과·징수	○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필요 ○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필요 ○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당한 세금 징수 필요 ○ 가상자산 파생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 구축 필요 ○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확대 필요 ○ 과소부과액 최소화 및 사후 관리 시스템 필요 ○ 세금 체납 등으로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후에도 서훈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 ○ 지출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주택 감정평가 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 ○ 바우처 사업 중 자기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중단할 필요 ○ 역외 탈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 ○ 전문가 조력을 통한 역외탈세에 대해 세무조력인 제재 등 대책 마련 필요 ○ 미술품 거래 시장 투명화와 과세 현실화 필요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를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상속증여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게임 아이템 거래시장에 대한 업종코드 마련 및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과세 필요 ○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의 미수납률이 높은 이유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 ○ 비상장주식에 대한 복잡한 평가방식이 세무공무원과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납세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실무 어려움을 청취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실질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 ○ 중부세 합산배제 제도 변경에 따라 주택건설입대업자에 대한 합산배제 혜택 제외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필요 ○ 임대주택 사업자 중 주택임대업 코드 기입 오류로 인해 과거 중부세 합산배제를 인정받아왔으나 현재 소급추징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소급추징 유예 및 대책 마련 필요
탈세·체납 등 세원관리	○ 부동산 계약해제 위약금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 신고누락되지 않도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을 개정하여 관리 필요 ○ 미등록 PG 단말기를 통한 세금 탈루 해결책 마련 필요 ○ 군부대 판매물품에 대한 재판매 단속 필요 ○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하를 체납했다가 세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신용평가회사 기록 삭제 검토 필요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탈세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국가기관 공무원 근로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용하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과세 필요 ○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필요 ○ 기업이 기부금을 납품대상에게 리베이트의 명목으로 지급하여 탈루에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점검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사회복지시설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식자재 납품기업에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면서 리베이트 차원에서 기부금을 받는 것이 아닌지 점검 필요 ○ 가족 신탁회사를 활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탈세 수법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국세와 관세를 모두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체납징수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등 관련 제도 보완, 체납업무 직원에 대한 법적,경제적 지원제도 마련, 탈세 제보 포상금제도, 예산 성과급 인센티브 활용방안 등 체납 문제 해결 필요 ○ 고의적 체납 현황,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액 현황,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접근성, 국세 체납관리단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에 대해 질의 ○ 학자금 체납 증가에 따른 제도 지속성 문제에 대한 입장 질의 ○ 외국인 체납액 증가 이유 등에 대해 질의 ○ 공평하고 철저한 과세로 세입기반을 확충 필요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사후검증 등	○ 의료법인 등의 유통구조 중간 업체를 통한 사익편취 통제 필요 ○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금융정보 수집 및 활용 필요 ○ 재벌총수에 대한 과도한 보수 배분 대처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결정 건에 대한 엄정한 조치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독점 발렛파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세무행정 필요 ○ 유튜브 1인 미디어, 연애인 등 1인 기획사 탈세에 대한 조사 필요 ○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 대응 필요 ○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한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 검토를 판단하는 법령상의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외투기업 세무조사 대상 선정 논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정치적 세무조사 절제 필요 ○ 비거주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고위공직자의 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하여 자금출처 등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필요 ○ 해외 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한 GS 그룹의 사익편취에 대해 세무조사 필요 ○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국내연락사무소의 불법영리 활동에 대한 점검 필요 ○ 생활물가 밀집 업종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 ○ 전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에 대한 국세청 차원의 철저한 감찰 및 건설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필요 ○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AI 분석 시스템 확충 등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현장조사 기준과 매뉴얼의 공개 필요 ○ 무영장 계좌조회 활용 빈도가 급증한 반면 상속·증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여세 추징세액 성과는 감소하고 있어 제도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비 필요 ○ 행정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계좌 일괄조회 남용 지양 필요 ○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후모니터링 제도 개선 필요
납세자 보호 및 세정지원	○ 영세사업자 국세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신속 집행 필요 ○ 티몬, 위메프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 필요 ○ 과오납 환급에 대한 납세자 보호 및 신뢰 제고 등 개선 필요 ○ 조세채권 우선변제제도 개선 검토 필요 ○ 납세자보호 기능의 외부기구화 검토 필요 ○ 수입업체 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 폐지 검토 필요 ○ 월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기준경비율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부가세 예납제 개선 필요 ○ 서면질의 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등 실효성 개선 필요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실효성 개선 필요 ○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 세액공제 활용 위한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시급 ○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의 개선 필요 ○ 홈플러스 등 사회적 파급이 큰 사안에 대해 선제적인 세정지원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영세한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개선 필요 ○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 등 지역 특화 사업 활성화 위한 지방 국세청 역할 필요 ○ 민원조정위원회는 국민의 고충을 조정하고 제도개선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나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민원인이 직접 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한 매각유예 등 세정지원 검토 필요 ○ 소상공인 폐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소멸 등을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 필요 ○ 학자금 체납 등 생계형 체납에 대해 연계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근거 마련 및 사유별 세무조사 유예 통계 관리 필요 ○ 국방부의 잘못된 용역 공고로 인해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인사·조직	○ 대전 관내 세무서 추가 신설 필요 ○ 국세행정 개혁TF 개혁안 이행 필요 ○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 승격 필요 ○ 국세청 민간위탁 콜센터 직원에 대한 유급평가 확대 등 처우 개선 등 필요 ○ 국세청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 고위직 공무원의 해임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재심신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청과 복직 이후의 급여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검토 필요 ○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조사 담당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 필요 ○ 국세청 고위직공무원 중 비고시 출신이 매우 적고 여성 비율은 더 적어 비고시 출신이나 여성들에게도 더많은 기회를 부여할 필요 ○ 사무관·서기관 승진 및 핵심 보직 인사가 특정대학 출신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조사와 징세인력 비율 조정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질의
기타 세무행정 등	○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에 대해 업무구조 재구성 및 보안 위험 방지 등 필요 ○ 부동산 대책의 적정성 검토 필요 ○ 미가공 식료품 부가세 면세제도 기준 명확화 필요 ○ 국세청 퇴직 세무사의 유튜브 등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 ○ 가상자산 강제징수 개선 필요 ○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필요 ○ 세금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보완책 필요 ○ 각 세무서별 자체 규정 등에 대한 통제 필요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사적 이용 통제 필요 ○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과금 수납률 제고 대책 필요 ○ 조세포탈 고발 등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국세청 사칭 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필요 ○ 국세청의 NTIS 운영·유지관리 사업의 참가기준 변경 및 계약구조 변경에 대한 검토 필요 ○ 국세청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방안 마련 필요 ○ 사문화된 입회 세무조사 제도 폐지 필요 ○ 다국적기업의 스톡옵션 등 거래내역 미제출 시 제재 필요 ○ AI를 활용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적발 방안 추진 필요 ○ 국세청 감정평가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기준시가로 성실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를 요구하거나 세액을 재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 필요 ○ 1가구 1주택자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 규모에 대한 통계를 관리할 필요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의 이용률 제고 필요 ○ 조선 술 및 북한 술의 인터넷 판매에 대해 단속 강화 필요 ○ 세무신고 플랫폼 이용으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마련 필요 ○ 암표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세청이 확보한 매출 정보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게 공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 필요 ○ 소액 체납액 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발생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종합적인 검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세목별 조세환급금에 대한 통계 관리 필요 ○ AI 등 창업분야에 대해서는 수도권 청년 창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을 확대 필요 ○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조세회피 및 탈세 유도 콘텐츠에 대한 조치경과 질의 ○ 국세청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세무사 자격이 있는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대형로펌의 위성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 ○ 모범 납세자 선정 후 체납 및 탈세 등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점 등 모범납세자 제도 유지 필요성에 대해 질의 ○ 무선 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한 점검 체계 등에 대해 질의 ○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부가세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 필요
인천지방국세청	○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 승격 필요 ○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 등 지역 특화 사업 활성화 위한 지방 국세청 역할 필요
중부지방국세청	○ 세무서 증축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 등에 대한 검토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 북대전의 세수 규모가 매우 큰 상황으로 세정 서비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스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세무서 신설을 추진할 필요 ○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가동률이 떨어진 가운데 가업승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가업상속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있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필요 ○ 체납,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를 추적하고 조회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보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필요 ○ 현장 중심의 추적조사, 고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징수 방안을 강구하고 고액·상습 체납, 탈세에 엄정히 대응할 필요 ○ 대전지방국세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최근 23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지적받음. 세무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세무서비스의 관리나 품질 등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을 강구할 필요 ○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감면의 적용으로 금융권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필요 ○ 지방국세청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명한 특정 세무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엄정히 조치할 필요 ○ 지역 특성을 살리는 창업 기업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나 대전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행정을 강구 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연금수령 고령층이 공공일자리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장부 작성, 관련 증빙 서류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국세청은 납세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세정행정을 구현할 필요 ○ 악성 민원과 관련하여 사례를 잘 분석하고 본청과 협의하여 직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 ○ 국세 체납관리단이 실제로 운영될 경우 납세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 실태조사원들의 안전문제 등을 잘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광주지방국세청	○ 현장 중심의 추적조사, 고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징수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특별한 징수방안을 강구할 필요 ○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감면의 적용으로 금융권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의 협력이 필요 ○ 건설업체의 벌떼 입찰 사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통해 특정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숨긴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있고, 기업체들의 편법 세습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적 비판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중간평가를 했는지 보고할 것 ○ 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투자, 연구개발 세액공제등이 중요한데, 광주지역은 투자가 위축된 상황으로 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인 세정행정을 실시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연금수령 고령층이 공공일자리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장부 작성, 관련 증빙 서류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국세청은 납세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행정을 구현할 필요 ○ 악성 민원과 관련하여 사례를 잘 분석하고 본청과 협의하여 직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 ○ 국세 체납관리단이 실제로 운영이 될 경우 납세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 실태조사원들의 안전문제 등을 잘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영세·소상공인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국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세심한 징수 행정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체납액징수특례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대구지방국세청	○ 대구·경북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정 지원 실적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부분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 ○ 대구지방국세청의 과오납환급금의 규모가 매우 큼. 무리한 징세를 지양하고, 정당한 과세에 대하여는 대형로펌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 ○ 소멸시효에 의한 세금 일실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고액체납 등 조세징의를 위해 징수해야 될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강구 ○ 우리나라 전통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홍보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등 지원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대학생 학자금 상환 체납액과 체납 건수에 있어 대구가 높음. 청년들에게 상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 ○ 청년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거나 대구의 미래를 이끌고 갈 전략산업 중심 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경제적 파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위탁인력의 배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가 큰 상황으로 지역 납세자 누구나 동등하게 세무행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 ○ 비정기조사 착수사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따라 구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발급하는 자료상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은 인구 고령화로 기업의 계속 경영을 위해 후계자에게 기업을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나 과도한 세금이 발생함. 기업승계의 경우 엄격한 요건으로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을 건의할 필요 ○ 진주·마산·거창 세무서에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운용하였으나 재해손실 세액공제 실적은 1건에 불과함. 이는 홍보 부족에 그 원인이 있어 보이는바 향후 관련 홍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경남 지역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므로 이들 수출기업들에 대한 실효적인 세정지원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영세 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의 요건을 합리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홍보를 강화할 필요 ○ 소멸시효에 의한 세금 일실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고액체납 등 조세징의를 위해 징수해야 될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부산지방국세청은 포상금 지급률이 약 3% 수준임.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세정 투명성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할 필요 ○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위탁인력의 배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편차가 큰 상황으로 지역 납세자 누구나 동등하게 세무행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의 홍보 부족으로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격차로 인해 고령자 등 일부 소상공인은 온라인 상담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마련할 필요

4. 관세청(광주·대구·부산본부세관 포함)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마약 및 위험물 밀반입 관련	○ 관세청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 ○ 캄보디아발 마약 등 불법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 오지 않도록 양국간 공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필요 ○ 중국발 총포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단속장비 및 인원 확충을 통한 단속 강화 필요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관세청 직원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세관 직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 주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통해 진상을 밝힐 필요 ○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특송업체와 택배업체 간 배송정보가 바뀔 경우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전송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마약류 반입 근절을 위하여 입국 시 간이통관 문제, 우회 입국 문제, 관련 부처 간 정보 공유 문제 등 시스템을 보완하고 통관 사각지대를 차단할 필요 ○ 인천세관 마약사건 관련 수사에 철저하게 응하여 결백을 입증할 필요 ○ 총기류 및 마약류 대거 유입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마약 밀반입 적발 및 단속에 대한 역량 강화, 장비 구축,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 ○ 불법 의약품 반입 차단을 위하여 관계부처 간 공동 대응센터를 가동하고 해외 플랫폼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 ○ 고도화되고 있는 마약류 유통 범죄에 맞추어 단속 인원을 늘려 점검과 확인하는 범위를 넓히고 AI를 점목해 단속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 ○ 해외로 밀수출되는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 ○ 우리나라가 마약 위기국가로 전락하고 있고 세관 마약 적발량도 폭증하고 있으므로 마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급증하는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에 대응하여 위험화물 분석, 승객 사전검증 시스템(APIS)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 개인 사용 목적 불법 무선통신기기는 요건 확인이 면제되므로 국내 상황과 요건에 맞춘 적극적인 후속조치 및 대안 마련 필요 ○ 국내 마약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범 화물 유형에 대한 성분분석표 강화, 마약 관련 기관 공조를 통한 세관별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 수출 통관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 ○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완구용으로 들어오는 비비탄 총 개조용 부품과 규격외 비비탄, 총기부품의 반입을 세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유관 기관과의 공조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마약 치료 환자 증가 현황과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의 ○ 청소년 마약문제 대응을 위한 AI 기반 시스템 구축 필요
통관·감시장비 운용 관련	○ 딥러닝을 통한 AI 기반 영상 인식 역량 제고, SNS 및 해외직구 플랫폼 거래정보 연동 등 통관시스템 고도화 필요 ○ 무선백도어 등 신종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 필요 ○ 마약 반입 방지를 위한 특송 및 여행자 통관 인력의 증원과 장비의 확충 필요 ○ 인천항만 통관 과부하 문제가 심각하므로 X-RAY 판독원 증원 필요
상품·유형별 관세탈루 관련	○ 상업적 수입으로 의심되는 해외직구에 대하여 과도한 면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올해 안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조사를 추진할 필요 ○ 구매대행 업체들이 자가사용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영업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가격을 과소신고하여 관부가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관세청에서 점검 및 조치할 필요 ○ 보세운송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자가사용물품 해외직구 면세제도 악용에 대한 제도 개선 마련 필요
관세조사 관련	○ 세관 조사관들의 수사·조사 관련 기본 소양교육을 철저하게 실시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관세조사 시 영상녹화가 허용된다는 사실의 고지 필요 ○ 관세청 수사장비 노후화 개선 필요
원산지 표시관리 관련	○ 외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제3국으로 수출되는 우회수출에 대하여 피해규모 및 산업별 영향에 대한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자료 관리,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 개선, 처벌 강화, 법령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우회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검증을 하는 실무인력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우회수출 적발 등 관세청의 단속정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적출국·목적국 품목별 통계 관리 필요 ○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적발 이후 판매 사이트 차단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식재산처 및 플랫폼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전담인력을 충원할 필요 ○ 국산을 가장한 우회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FTA 및 원산지표시 규정 준수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해 추가 관세 부과 등으로 국내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내 적발 기업·품목의 공표방안을 검토하며, 시중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정보를 수출입신고 데이터와 연계하여 이러한 사례가 수출단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필요 ○ 우리나라를 경유한 중국산 물품의 우회 수출 증가에 대비해 미국의 원산지 관련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및 미국과의 협의 강화 필요 ○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원산지 세탁에 대한 가중처벌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검토 필요 ○ CBP 사전심사 지원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
기타 통관행정 관련	○ 조사인력 부족 해소 및 세수 누락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가 세액 정확성을 검증하고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국세청과 협의하여 도입할 필요 ○ 중국 정부의 원자재 수출 통제 문제로 인한 우리나라 수입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 ○ 미국 CBP 사전심사 지원사업과 산업통상부의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 지원사업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 ○ 관세체납관리단 운영에 예산을 사용하기 보다는 수출기업을 도와서 수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로 자리매김할 필요 ○ 세관 직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현장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 ○ AI 통관시스템 오류 발생 시 법적책임 소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여 AI 통관을 도입할 필요 ○ 중국산 위조 완구류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소비자 대상 위험경고 발령이 미흡하고 선제적 차단이 부실하므로 개장 검사를 늘릴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 필요 ○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하여 사전구매 검사 예산 증액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개장 검사 수량을 늘릴 필요 ○ 수입품 안정성 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 부처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할 필요 ○ 다수의 카지노 환전업체에서 환전 거래내역 거짓작성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으나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과소하므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방지를 위하여 국적별 환급액 집계 등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 ○ 관리대상화물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는 경우 화주가 검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하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더라도 협력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도청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효적인 체계 수립을 통한 개선 필요 ○ 관세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제도에서 법규 위반 업체 대부분이 양벌규정 예외 조항으로 인해 공인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수출기업에 대한 외국세관의 자의적 특혜세율 배제 및 통관 지연 문제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외통관 애로 해소 및 지원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도청 보안 체계 수립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근 국선관세사 제도 도입 필요 ○ X-Ray 판독인력 증원 필요 ○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경 통과 단계에서부터 환경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 ○ 과태료 수납실적이 저조하므로 관세청·기획재정부·법무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법률 개정, 제도 정비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체화물품과 압수물품의 적극적인 매각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압수물품 보관업무를 관세청의 전관단체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몰아주고 있으므로 유착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 ○ 관세청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고 통상환경 변화 및 안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미국의 관세정책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관세청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북한 술 반입이 대북제재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 필요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스 리펀드 통계관리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관세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 필요 ○ 역직구 시장 확장을 위한 방안 질의 ○ 개인통관고유번호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능 추가 등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 개선 필요
세수 체납 관련	○ 관세청의 체납액 징수 기능을 국세청에게 맡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 국세와 관세를 모두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체납관리단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
면세점 운영 및 면세한도 관련	○ 타인의 여권사진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 면세사업자 허가기준 중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계량화하고 법규 미준수 시 과락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 역사열 시 면세한도 내 구매 물품에 대한 반납 의무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공항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입국장 인도장의 공항 확대 정책을 폐기할 필요 ○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필요 ○ 비자발적 출국 취소에 대해서 면세 한도 내에서 국내 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면세사업자 특허심사 심사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 ○ 인천공항 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의 복수 운영사 도입에 대해 질의 ○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상생방안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마련 필요
가상자산 및 외환거래 관련	○ 가상자산 환치기 수법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확대 및 분석 고도화 필요 ○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와 발맞추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규율체계 및 적발 시스템을 구비할 필요 ○ 가상자산 불법거래와 환치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사권 확보를 포함한 입법 필요사항을 적극 검토할 필요 ○ 가상자산 거래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질 필요 ○ 환전소 관리감독 인력이 부족하므로 인사혁신처와 충원 협의 필요 ○ 불법 외국환거래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국부 유출과 금융질서 교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경제범죄이므로 실질적 단속과 징수로 불법 외국환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필요 ○ 외환범죄 대응의 최전선기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거점세관 인력 보완, 추적 프로그램 확대·보급, 검·경과의 공조체계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국환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저조한 과태료 수납률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
관세청 자체 내부운영 관련	○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세관별 폐기업무 물량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업무 과중 완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 및 효율적 분담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격무·기피업무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보상 체계 및 지원방안을 강화할 필요 ○ 기관 청렴도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중 최하위이고, 관세청 출신 퇴직자가 한국면세점협회 임원을 독점하는 등 전관예우가 팽배하므로 조직 혁신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 ○ 국가 통상역량 강화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6급 정원을 줄이고 5급 이상 정원을 동일하게 늘리는 방향의 계급 구조 개편 필요 ○ 관세청 재해복구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필요 ○ 무선 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한 점검 체계 등에 대해 질의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른 특사경 수사인력에 대한 재구성 과정 및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 협업 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필요 ○ 검찰청 폐지에 따라 관세청 특사경 관련 지휘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
대구본부세관	○ 마약, 총기 등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 탐지견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후화된 장비의 개선 및 관련 첨단장비 도입 등 계획을 수립할 것. 미흡한 장비, 인력에 대하여는 현황을 파악하여 본청,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관련 장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구경북 산업의 수출둔화와 지역경기 침체에 대해 질의
부산본부세관	○ 마약, 총기 등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노후화된 검색 장비의 개선 및 관련 첨단장비 도입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 ○ 경남 지역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이들 수출기업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 ○ 부산항의 마약 밀반입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
광주본부세관	○ 마약, 총기 등 위해물품을 X-ray 판독 등 모니터링 하는 직원의 1인당 업무량이 과다하여 적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인력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 항공 노선이 급증하면서 잠재적인 마약 반입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나, 관련 단속 장비와 인력은 현저히 미흡한 상황이므로 보완할 필요 ○ 군산세관을 통한 총포류 적발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본청과 협력하여 불법 총포류 무기류 단속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군산 특송물류센터의 통관 물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관은 X-ray 판독 인력 확충 및 장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불법 물품의 통관 차단 역량을 강화할 필요 ○ 제주도 방문 여행객들과 제주 지역사회를 위해 지정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새만금 신항 개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고, 물류, 관광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므로 추후 준비 미흡으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 영세한 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통관,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물류, 인증, 마케팅 등 여러 측면에서 초기 진입장벽이 높으나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의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5. 조달청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조달물품 품질 관리	○ 일반 신용평가사와 메이저 평가사 간의 이원적 인정 체계 및 평가기관별 등급 격차, 급행료 의혹 등 신용평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철도차량 납품 지연 및 품질 저하 문제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
혁신조달	○ 혁신제품 지정 이후의 후속구매 연계를 강화하고, 지정제도를 신산업 분야 및 민관 협력형으로 개선할 필요
비축물자	○ 비축 마스크 폐기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전략물자 비축을 위한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참여자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필요
조달청 입찰 과정 공정성 강화	○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한 대규모 인조잔디 납품 비리 및 폐이퍼컴퍼니 재발 방지를 위해, 서류와 인증기관의 공신력에만 의존하는 현행 검증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우수제품 지정 등 주요 조달 절차에 조달청 주도의 직접 샘플링 점검과 현장실사 등 직접 검증 과정을 필수적으로 도입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 ○ 입찰 참여 업체의 평가위원 사전 접촉 및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평가위원단 Pool을 대폭 확대하여 개별 평가 참여 인원을 증대하는 등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평가위원의 공무원 의제 등 처벌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특정 종교 단체 및 사이버 종교 연루 기업들이 최근 10년간 약 3,129억 원 규모의 공공조달 계약을 수주하며 발생하는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반사회적 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나라장터 내 계약 정보 누락 및 비공개로 인한 갑갑이 계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고-계약 연계 시스템의 오류를 시정하고, 국립대 축제 용역 등 사각지대에 있는 자체 조달 계약에 대한 정보 공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점검 지침 및 시스템 보완책을 수립할 필요 ○ 조달청이 발주한 건축물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낙찰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 가담 기업에 대한 엄정한 후속 조치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사 체계를 확립할 필요 ○ 2023년 ‘LH 철근 누락 사태’ 이후 LH의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이 조달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과정에서 입찰 브로커 개입, 동가 입찰 등 부정 입찰 의혹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찰 브로커를 차단하는 담합 방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부정당업자 등 제재	○ 조달 과정에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비리 업체에 대하여 손해 규모에 비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등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고, 대규모 국고 손실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마련하여 조달 시장의 기강을 확립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입찰 제한을 회피하고 추가 낙찰을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계약법령 개정 등 필요 ○ 국가계약의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에 따른 재량권을 활용하여, 조달청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중인 업체와 신규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지난 5년간 1,515건의 부정당업자 제재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계약법」의 한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 관련 제재는 0건인바, 조달청은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기조에 맞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조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조달청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입찰 심사 시 안전 관리 부실 기업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전면적인 조달 평가 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정부 계약 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재 경감을 위해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감점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 우수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실질화할 필요 ○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1인 사망 사고의 경우 입찰 참가 제한 등 페널티 부여가 어려운바, 1인 사망 사건이라도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 명백하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거나 연간 다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 차원에서 입·낙찰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페널티 부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실적이 저조하고 미수업체 등록 후에도 계약 수임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검사지 등 공신력 있는 문서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고 부당이득 취득 자체를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로 명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부당이득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 ○ 나라장터 시스템을 악용하는 조달 브로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
조달 관련 제도개선	○ 연간 225조 원 규모의 전체 공공조달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 의무 폐지 등 조달 개혁 추진 시, 중앙 시스템의 효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 다수공급자계약(MAS) 운영 시 조달청의 과도한 가격 개입과 통제를 지양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우회적인 고가 납품이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격 검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정한 계약 관리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위조하는 표지갈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수입 정보와 조달 정보를 연계한 상시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을 강화할 필요 ○ 공공조달 기능을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전환하여 안전 중심의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 ○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점검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 제도와의 중복성 면제 대책을 마련하여 업계 반발에 대비할 필요 ○ 하도급 업체에 설계 및 계약 변경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소송 비화 전 조달청 차원의 사전 조정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 ○ 군 방상내피 납품 지연과 관련한 보도설명자료 배포 경위를 점검하고, 납품 불이행 시 즉각적인 계약 해지 및 신규 계약 조기 체결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 ○ 민간 대비 이용률이 저조한 ‘일자리알리미’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민간 구인구직 플랫폼과의 연계 등 사용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노후화 개선 등을 위해 계약 시 헬기 특성을 고려한 단가 산정 방식 등을 검토하여, 기종별 특성과 시장 가격을 반영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 ○ 나라장터 공고는 AI와 호환성이 낮은 HWP 문서로 편중되어 있어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AI 인식이 가능한 형태의 문서 도입을 확대하고 관련 조달 기준을 정비할 필요 ○ 지난 2년간 태양광 업체 제재 처분과 관련한 1심 판결 패소율이 81%에 달하고, 직접생산 기준의 불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명확성 등으로 인한 행정 처분의 한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패소 건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무분별한 항소를 지양하고 각 제재 처분 중 선별하여 항소할 필요 ○ 조달청은 당초 계획된 ‘안전총괄책임자’ 제도를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제도로 변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제도 또한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제도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할 필요 ○ 조달청 공무원이 중소기업의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 ○ 조달청은 2023년 시범 도입한 ‘스마트 안전지킴이(안전관리 신문고)’ 제도를 예산 문제 등으로 폐지하고, 동 제도를 대체하여 AI 기반 스마트 신고 체계를 도입할 예정인 바, 신규 시스템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 공공조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부대입찰제도에 안전관리공정을 포함하는 하도급 입찰 방식인 ‘안전관리공정 포함형 특례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글로벌 주요 기업이 적극 도입 중인 저전력·고효율 특성의 ARM 기반 서버 활용을 강구하고, 다양한 서버 아키텍처의 공공조달 진입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 ○ 국내 공공기관 서버의 외국산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x86 서버가 92%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 바, 조달청은 기술 주권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현행 「조달사업법」은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및 근절 효과가 미흡하므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조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필요 ○ 불공정조달행위를 근절하고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수사권 부여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물품제조계약에 ‘단품 물가조정제도’ 도입 및 확산 필요
조달청 조직 및 운영	○ 도심지에 위치하여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물자 비축·방출 효율성이 저하되는 대전지방조달청 등 도심지 지방청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주민 편의시설이나 공동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 ○ 상시 도청 위협 및 무선백도어 해킹과 같은 신종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단발성 점검과 네트워크 보안 위주의 기존 체계를 개선하고, 실시간 탐지 시스템 구축 및 하드웨어 보안 검증 절차를 포함한 통합적인 보안 대책을 수립할 필요
중소기업 지원	○ 인천 소재 중소기업 수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K-바이오 등 지역 특화 산업의 해외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 조달청의 역할과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 ○ 공공조달 물품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검수 기간 단축 및 대금 지급 프로세스 자동화 등 신속 집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도입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 및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적기 지급 체계를 확보할 필요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등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제도가 국내 입찰 가점 혜택만을 향유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실적 부재 기업에 대한 전수점검 및 우대제도를 재검토하고, 형식적인 심사 체계의 정상화와 실적 부재 시 지정을 취소하는 강력한 사후 관리 및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
기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 절감 위주의 관리에서 탈피하여 안전 중심의 자동경고시스템 도입 및 기술 중심 평가를 적용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공사 실적 제한 경쟁과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

6. 한국은행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기준금리 운용 등 통화정책과 물가 관리	○ 재정적자 확대와 유동성 증가가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재정 우위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은행은 독립적이고 엄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채무 급증 위험에 대응하여 정부와 협의를 지속할 필요 ○ 물가안정이라는 핵심 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성장,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 ○ 기준금리 결정 시 부동산 가격, 성장률 대비 낮은 내수 상황, 환율 변동성, 관세협상 등 대내외 여건 및 거시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 ○ 세수 결손 등 재정 여건 악화로 통화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경제 활력 제고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재정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통화정책 운용 필요 ○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보다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여, 금리 조정 시 시기와 속도를 신중히 검토하고 금융안정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 ○ 통화정책의 부동산 가격 영향력을 인지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유동성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 피해 없는 부동산 안정을 도모할 필요 ○ M2 통화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한 원인을 분석하여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 대출지원제도를 통화정책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보완 수단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추진할 필요 ○ 소비쿠폰 지급 등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유동성(M2) 증가가 자산·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지 않도록 재원 조달 방식에 따른 통화량 변화와 가격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대국민 설명을 강화할 필요 ○ 원화 가치 하락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금리 조정 외에도 통화량 및 유동성 관리 등 원화가치 관리를 위한 통화정책 운영방안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 ○ 세수 결손에 따른 기재부의 한은 일시대출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증권 발행 확대 등 근본적인 단기 유동성 조달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 필요 ○ 일본은행의 ETF 직매입 사례를 연구하여 증시 안정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NGFS(녹색금융협의체)가 제시한 대출·담보제도 등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 ○ 식료품·주거비 등 필수재 중심의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고환율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분의 소비자 전가 과정을 정밀 분석할 필요 ○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국민 체감 물가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의 보조 지표 개발에 협력하고, 한국은행이 관리 중인 지표를 적극 홍보하여 정책 신뢰를 확보할 필요 ○ 고물가 구조 개선을 위해 농산물 시장 개방 등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기여하고 공공의 이익에 적극 봉사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 현금 없는 사회에서 소외되는 고령층·취약계층을 위해 현금 결제 거부 실태를 파악하고, 현금 사용 선택권 법제화 및 지역 간 ATM 접근성 격차 해소에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 ○ 화폐 발행량 감소에 따른 조폐 산업 기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화폐 제조·이송·유통 인프라를 공공재 차원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정비할 필요 ○ 일시대출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 고신용자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식의 인위적 금리 조정보다는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정교한 금융 복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소비 부진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등 재정 지원의 경기 진작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국가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일본화지수(Japanization Index) 등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한국은행의 구조조정 보고서와 국정과제 간의 정합성을 높여 잠재성장을 제고를 위한 실행 방안 마련 필요 ○ 고빈도 자료와 최신 예측 모형을 통해 경제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고, ECOS상 해외 본원통화 통계의 정합성 확보 및 주요국 대비 지연되고 있는 통화지표 공표 시차를 단축할 필요 ○ 국가부채 임계 수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적자재정 기조를 개선하는 한편, 사문화된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규정을 법적으로 삭제 검토할 필요 ○ 과도한 재정 지원에 따른 재정 우위 현상을 경계하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며 연금 등의 구조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제언을 강화할 필요 ○ 주 4.5일제, 정년 연장, AI 기술 확산 등 노동 환경 변화가 가져올 세대 간 갈등과 고용 불안에 대비하여 정책 연구를 강화할 필요 ○ 단기적인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한국은행 차원의 심도 있는 정책 연구를 추진할 필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과제를 발굴하여 공공의 이익에 적극 봉사할 필요 ○ 주요 경쟁국 대비 이완된 우리 사회의 긴장감을 점검하고 근로 시간 및 경제 관리 전반에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필요 ○ 중앙은행 차원에서 혁신기술 촉진, 규제 합리화 및 갈등 해소를 위한 보상 체계 마련 등 정책 연구와 금융정책 제언을 추진할 필요
외환정책	○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지속에 따른 경제 위기 가능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글로벌 달러 약세(달러 인덱스 하락)와 역행하는 원화의 디커플링 현상을 정밀 분석하여 적극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 ○ GDP 대비 낮은 외환보유고 비중(22%) 및 국제 기준(IMF, BIS 등)을 고려하여 완충 능력을 전면 재점검하고, 기회비용 발생을 감수하더라도 대외 위기 대응을 위해 외환보유고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 ○ 유가증권에 편중된(89.7%) 자산 구성을 개선하고 안정성·유동성·수익성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외환보유액의 본질에 걸맞은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 재점검 및 ESG 투자 확대를 추진할 필요 ○ 주요국 중앙은행 수준으로 금 보유 비중을 전향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자산 배분 계획을 수립하되, 보관 비용 및 유사시 현금화 방안 등 자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세 자료를 마련할 필요 ○ 미 연준과의 상시 통화스와프 체결을 지속 추진하되, 무제한 체결 여부보다는 실효성과 비용 등 세부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외 제약 요인을 방지하고 외환시장 안정화 장치로서의 정교함을 높일 필요 ○ 외환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지난 1년간의 직접개입 현황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 ○ 세계국채지수(WGBI) 완전 편입이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관리하며, 거래 시간 연장 및 24시간 개방에 대비하여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와 인력을 철저히 정비할 필요 ○ 국채 시장 선진화를 위해 2년 미만 단기 국채 도입에 관해 기재부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필요
한국은행의 독립성	○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재정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인건비 편성 시 기획재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 ○ 12.3 계엄 등 헌법 파괴적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명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확한 반대 입장 표명하고, 비상시 유동성 공급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책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 ○ 한국은행은 중립적인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부 정책의 위험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익을 위한 정책 제언을 지속할 필요
가계·국가 부채	○ 가계부채 및 주택 대출 편중 구조를 개선하고, 전세대출 규제 강화 과정에서 서민·청년층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과도한 가계부채가 내수 위축 및 실물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 ○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하여 빚내서 집 사는 식의 부채 의존적 정책에서 탈피하고,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 ○ 고금리 시기에도 정책대출 확대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실패한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책금융 운용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
부동산 및 금융정책 관련	○ 연체율이 높은 PF 사업장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적기 대응을 통해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고, 공급망 정상화를 통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지난 3년간의 인허가·착공 실적 급감에 대응하여 시장에 확실한 공급 안정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실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 ○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를 통해 가수요 발생을 방지하고, 과도한 수요 억제책이 서민층에 미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교한 맞춤형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부동산 규제가 노동 부자를 역차별하거나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차단하지 않도록 전세 세입자 등을 포함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정교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서울 지역의 평균 매매가격과 순자산 규모의 격차를 고려하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한 현실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현실 인식을 교정할 필요 ○ 전세대출의 DSR 산입 등 대출 규제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갭투자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되, 서민·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필요 ○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사이의 균형점을 도출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 공조를 지속할 필요 ○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동산 과열을 자극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 리스크 제어와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정교한 정책 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운용할 필요 ○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에 실패한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책금융 운용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추진할 필요 ○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교육 격차 해소 및 입시 제도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을 협력하고, 전세 제도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 10년 이상의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 ○ 주식시장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역머니무브 현상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산이 이동하도록 유도할 필요 ○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아닌 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안정화 대책을 모색하고, 특정 지역 억제용 세제보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세제 운용 방향을 설정할 필요 ○ 한국은행은 중립적인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부 정책의 위험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책 제언을 지속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 한국은행의 저리(1%) 자금이 시중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되어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대출 금리 실적을 배정 기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고 수혜 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필요 ○ 지역별 경제적 비중(GRDP, 중소기업 수 등)과 산업 생태계를 반영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배분 개선안 마련 필요하고, 장기간 동결된 지역별 배정액을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현실화하며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균형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 ○ 저성장·고령화에 따른 실효하한금리 도달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대출지원제도를 기존 산업정책 중심에서 통화정책 보완 수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 등 양극화 해소 관련	○ 확장적 통화정책이 자산 가격을 상승시켜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점검하기 위해 순자산 지니계수 중심의 심층 연구를 강화하고, K-니콜라 및 K-헨리 현상으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자산 불평등 박탈감 해소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등 근본적 구조 개혁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다할 필요 ○ 통화 완화 정책이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 필요 ○ 영세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한국은행 차원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책을 마련 필요 ○ 소득 하위 계층에 영향이 큰 먹거리, 의류, 주거, 공공요금 등 항목별 물가 수준을 정밀 분석하여 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 ○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 미준수에 따른 재금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준수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CBDC 예금토큰 간의 정책 우선순위를 세심하게 조율하고,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한 CBDC 도입 전략을 구체화하는 한편 두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규제적 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기관용 CBDC(한강 프로젝트) 추진 시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 ○ CBDC 예금토큰의 활용성 제고 및 원화 국제화 추진 시 기술적 통제와 은행 중심 접근 간의 최적 모델을 도출할 필요 ○ CBDC 테스트의 낮은 효용성과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 활용성보다는 국고보조금 등 공공 부문의 투명한 집행 수단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대용재로서 범용적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존 간편결제 수단과의 차별성을 고려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대체재로서 기능함에 따라 한국은행이 단순한 의견 전달자나 조언자를 넘어 정책 결정 및 규제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공식적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필요 ○ 비허가형 분산원장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외환규제 우회 및 금산분리 원칙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위험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발행사의 경제력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집중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한국은행 차원의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구조와 글로벌 거래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리스크 방어 제도 와 기술 기반 규제 시스템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 ○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수요 흡수 및 환율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비은행권의 참여를 통해 혁신성과 국제 거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설계할 필요
지역균형발전	○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지자체 직원 파견 시 경북·울산 등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 인력 파견 검토 필요 ○ 철강 산업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을 대폭 활성화하고, 타 본부 대비 저조한 실적에 대한 개선 대책 보고 필요 ○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단순 공급 확대를 넘어, 교육 격차 해소 및 입시제도 개선 등 인구 유입을 근본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 ○ 2005년 부산 APEC 사례와 같은 수준의 금융 지원을 경북 APEC에도 적용하고 포스트 APEC 사업 발굴을 지원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지역본부	○ 한국은행 일부 지역본부의 명칭과 위상을 실제 행정구역 및 경제 활동 단위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지역사회 내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정립할 필요 ○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지역금융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필요 ○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민생현장의 실상과 지역 민심이 잘 전달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AI 기술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이 AI 전환에 따른 경제적 수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 ○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지역경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지역 특화형 미래산업 관련 연구가 미흡하므로 개선 필요 ○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에 대한 잠재력 분석을 통해 권역별로 특화 산업 육성 정책 제시 필요 ○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책금융기관들을 부산에 단독으로 설립하거나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을 부산에 분산할 필요 ○ 부산 지역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C2 자금) 한도 상향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 및 금융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필요 ○ 한국은행 직원의 경북 지역 파견 필요 ○ 대구·경북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누적 등으로 인한 부동산업 성장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대구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통산업의 고부가치형으로의 고도화 추진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 및 한국은행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 필요 ○ 대구·경북의 기후위기가 심각하므로 관련 연구 검토를 통해 지역 산업들의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전, 세종, 충남의 지역 성격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를 분리할 필요 ○ 충청권의 높은 실물경제 비중에도 불구하고 예금은행 여·수신은 저조한 반면 비은행권 대출이 급증하여 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금융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지역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 개선책 마련 필요 ○ 대전·충남 지역의 철강·자동차 등 국가기반산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AI 등 신산업 투자 시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특화 발전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 간 결속력 제고, 초광역 교통망 구축, 산업 간 연계 시너지 창출을 핵심 시사점으로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 방안 마련과 각 지역 본부별 ‘5극 3특’ 전략 구현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를 추진할 필요 ○ 광주·전남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필요 ○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상생 모델이 노사 갈등 및 사회적 임금 보전 부실로 인해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 및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형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에 적극 제안할 필요 ○ 충북 제조업 다변화 및 데이터 협력 강화 충북의 이차전지 산업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제조업 다변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이차전지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형 특별 지원 트랙’ 신설 등 금융중개지원제도의 한시적·실효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 ○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향후 경기둔화나 금리 인상에 대비해 기술형·수출형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속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 한국은행 경남지역본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상향 또는 수도권 한도의 비수도권 재배정 등 실효성 있는 지역별 한도 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전북은 대미수출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에 맞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수출 중소기업 전용 자금 운용 방안 마련 필요 ○ 수도권 집중 완화 및 부동산 양극화 해소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과 지방의 하락세로 대변되는 부동산 양극화 및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및 일자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방의 흡입력을 제고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적 재정 운용 기반 강화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하므로, 세수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고려한 균특회계의 효율적 활용 및 포괄 보조금 도입 등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 권한을 강화 필요 ○ 지역 경제 자립을 위한 성장 기반 및 일자리 생태계 구축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귀농 정책 등을 통해 지역 내 실질적인 성장 기반 강화 필요 ○ 지역거점대학 중 혁신경쟁력이 가장 높은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에 대한 과격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엘리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를 지역 경제 성장의 앵커(Anchor)로 활용하여 산학연 협력 생태계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필요 ○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따른 최근의 소비심리 개선이 내수 활성화로 지속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연구 및 경제적 효과를 정밀 분석할 필요 ○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기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 투자와 연구 개발을 통한 지역 개조를 위해 중앙경제기관들의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지원 필요
경영관리	○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보안 실태 평가가 저조한 상황이므로, AI 및 클라우드 환경 변화에 대응한 보안 예산과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할 필요 ○ 외주 용역인 특수경비원의 업무 범위 및 지휘 체계를 점검하여 불법 파견 소지를 해소하고 조직 내 보안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기할 필요 ○ 조직 내 유리천장 해소와 성비 불균형 개선을 위해 4급 이상 직급 격차를 분석하고 적극적인 고위직 여성 임용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체 감사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여 감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 ○ 수십 년간 지속된 행우회비의 강제 원천공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임금 공제 관행을 즉시 중단하고,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와 자율적 가입 체계로 전환할 필요
금융통화위원회	○ 금융통화위원회 발언 실명제 도입 등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 ○ 금융통화위원회의 합리적인 통화정책 결정을 위해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한미 관세협상 등 대외 경제 현안의 불확실성에 관한 세부 정보를 금통위원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고, 관련 논의 내용을 의사록에 누락 없이 반영할 필요 ○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추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미국 연준 사례를 참고해 금융통화위원 인사청문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
녹색금융 및 지속가능한 금융 관련	○ 기후위기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물리적·이행 리스크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체계에 적극 반영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수준의 파급력 있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실질적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내 녹색기업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적격담보 대상 내 녹색채권 우대, 자산 매입 시 기후 리스크 스크리닝 체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관세 대응	○ 대미 투자 협상 시 연간 150~2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시장 충격을 고려하여 일시불이 아닌 분산 투자 방식을 관철하고, 가용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미 재무부와외 통화스와프 체결 등 실질적인 외환안전판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 ○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요구와 관련하여 외환보유액의 특정 국가 편중 리스크를 정밀 분석하고, 한은법 개정 및 국회 동의 절차 등 법적·제도적 한계를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현실적으로 체결 가능성이 낮은 상설 통화스와프 요구에 매몰되기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는 정교한 국익 중심의 대미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 ○ 대미 투자 압박과 관련하여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안전판을 확보하는 동시에, 협상 과정에서 중앙은행으로서 정부의 무모한 정책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견제를 수행할 필요
기타	○ 가계부채와 대외 경제 충격 등 복합적 제약 요인 관리를 위해 독립성과 정책 공조 역량을 갖춘 차기 총재의 자격 요건을 정립하고, 대통령과의 실효성 있는 소통 채널을 복원하여 소신 있는 제언을 지속할 필요 ○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위해 F4 회의를 법정 기구화하고, 비상계엄 시기 등 주요 회의 기록 부재 문제를 개선할 필요 ○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 감독·공동검사권 및 자료요구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안정협의체를 제도화하여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도록 감독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 ○ 거액결제시스템 운영 시간을 내년까지 20시로 연장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결제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 ○ 조폐공사의 예술형 주화 추진 등 중앙은행 발권력 침해 시도에 엄정 대응하고, 기념주화 발행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 ○ 관봉권 따지의 정보 한계와 추적 불가능성을 공표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하여 특정 자금 출처 추적에 대한 오해와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할 필요 ○ 수출입은행 출자 공적자금의 낮은 회수율(12.1%)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배당 방식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고 신속한 상환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진입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 방지 및 국내 거래소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 ○ 국가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조성 시 적재적소에 자금이 투입되도록 세부 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

7. 한국수출입은행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체코 원전 수주 관련	○ 한국수출입은행의 웨스팅하우스 이행보증 발급 과정에서 한수원으로부터 협정문 전체가 아닌 마킹된 일부 자료만 제출받아 위험성 검토가 부실하였고, 이례적인 외국 기업 보증임에도 여신전문위원회 회의 없이 서면 결의로 처리한 바, 향후 유사 보증 발급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성 보증 대지급은 올해까지 4건이 발생하였으나 구상권 행사로 전액 회수되었고, 한수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대지급 및 자금 손실 가능성은 낮은 실정인 바, 에너지정책이 정권 변화에 따라 정쟁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의 웨스팅하우스 이행성보증 발급 과정에서 리스크 평가 등이 철저히 진행되었는지 규명할 필요
수출입 해외진출 지원 등 정책금융 관련	○ 히든챔피언 기업이 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경우 대상 기업이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② 기존 고객사 위주의 히든챔피언 선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개 공고를 통해 히든챔피언을 선정하며, ③ 2023년 제도 개정 당시 부칙을 재검토하여 불공정을 해소할 필요 ○ 2019년 고위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계정의 승인 실적이 2025년 8월까지 5건에 불과하고, 승인 사업들의 후속 사업 연계 또한 미흡하므로, 특별계정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수출성장자금대출을 포함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및 보증 상품이 당초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만기가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 연장을 관리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의 ‘유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적 이 2년 연속 전무하므로,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의 히든챔피언 취소가 지연되어 불공정 기업이 우대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관심서한의 문안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승인 절차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 ○ ‘국가 전략 사업·수출 파급 효과가 큰 사업·고부가가치 사업’의 결합 사업에 대한 전략적 금융 지원을 통하여 이익 극대화 필요
중소기업, 취약계층, 지역경제등 지원관련	○ 한국수출입은행의 배드뱅크 사업 분담금 지출은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 원리를 훼손하거나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관 설립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3년간 중형 조선사에 대하여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하지 않은 바,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수행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출연 여부 및 그 적정성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중형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재개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자원외교 관련	○ 2025년 기준 118개 세계 공적금융기관이 석유·가스 사업 투자 배제 기준을 도입하였고, 화석연료 인프라의 자산 가치 급락 위험이 평가되고 있는 바, 한국수출입은행이 발급했거나 검토 중인 신규 화석연료 사업 45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관의 의사결정 방향성에 대하여도 재검토 필요 ○ LNG 운반선 과잉 공급 및 주요국 공적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관련 선박 금융 중단·축소 추세를 고려하여, 한국수출입은행으로의 리스크 전가 가능성 및 LNG 운반선에 편중된 지원 구조 검토 필요 ○ 필리핀 해상교량 건설사업, 인도네시아 메단 하지 종합병원 확장 사업, 필리핀 순환도로 건설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과 무관한 사업들이 그린 ODA 실적으로 분류되어 ‘그린워싱’으로 판단되므로, 그린 ODA 판단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이 2021년에 수립한 ‘ESG 경영 로드맵’의 13개 금융프로그램 중 4개 프로그램은 집행 실적이 전무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ESG 경영 로드맵’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지원 실적 및 성과 간 유기적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암모니아 등 무탄소 차세대 선박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암모니아 독성 문제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및 해상풍력 전용 선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LOI가 발급되었거나 발급을 검토 중인 45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하여 재무적 리스크를 검토하여 보고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EDCF등 경제협력 관련	○ 전 정부에서 추진된 캄보디아 EDCF 사업,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 개량 건설사업, 우크라이나 공여협정 및 EDCF 운영관리 규정 개정을 통한 미소금융 지원 등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 ○ 몽골 아이막 난방사업 관련 벽산 ENG의 사업을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이 보증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몽골 정부와 건설공제조합 간 소송이 우려되므로,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EDCF 사업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주 비중이 58%에서 2%로 급락하고, 중소기업 전용 ‘소액차관제도’의 집행 실적이 전무한 바,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 발굴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고, 소액차관 기준을 현행 700만달러에서 2,000만 달러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가나가 2022년 12월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관 한도를 20억불로 확대하였고, EDCF 사업 중단 상황에서도 3개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한 바,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도적 절차를 보완할 필요 ○ 모로코 전동차 사업 등 특정 대규모 사업에 EDCF 지원이 집중되면서 타 사업의 선수금 비율이 하향 조정되고, 이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대형 사업 추진 시 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여 집행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EDCF 연도별 운용 계획을 재설계할 필요 ○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하수처리 사업의 보충용자 규모가 본용자에 육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증액되는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재조사가 생략되고 2016년 심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사보고서와 2023년 심사보고서 내용이 상충되는 등 부실 심사 정황이 의심되므로, 동 정황에 대하여 철저한 규명 필요 ○ 캄보디아 EDCF 기본약정 한도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사업이 통일교 메콩강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함 ○ 현재 보충용자 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대신하여 상시설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① 캄보디아 ODA 원조 사업과 관련된 검토 자료가 보존되어 있고, ②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제도상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③ 캄보디아 ODA 사업은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하게 수행되었음을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 ○ 캄보디아 민관 전대차관 예산의 과거 집행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현지 실사나 사업의 향서에 대한 평가 없이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 ○ 캄보디아 EDCF 사업과 관련하여 ① 민간협력 전대차관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되었고, ② 4대 시중은행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③ 관련된 기초 자료들이 보존되어 있고, ④ 외부 청탁·특혜와 무관하다는 사항을 점검 ○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사업 및 모로코 교외선·메트로 철도차량 공급사업과 관련된 특혜성 의혹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점검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사업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진행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동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바, 타당성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필요 ○ 민간협력 전대차관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되었고 OECD에서도 확대를 권고한 사안이며, 윤석열 정부 기간 중 민간협력 전대차관 신규 사업 비중은 낮은 편이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은 관련 의혹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 ○ 대개도국 차관 예산 중 현대로템의 수주 비중이 24%에 달하고, 현대로템의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수출 EDCF 사업은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승인 전 수원국이 대통령령을 미리 개정하는 등 절차적 모순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EDCF가 특정 기업의 전용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하도급법 위반 등 경쟁법을 위반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EDCF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 ○ 캄보디아 민간협력 전대차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공고 당시부터 ① 최종 차주의 한국계 자본 비율을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② 최종 차주는 비한국계 기관으로 한정하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은 관련 의혹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협력 전대차관과 관련하여, ① 동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시행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되었으며, ② OECD 권고 사항 역시 '전대차관 도입'을 특정하여 명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2013년 12월 진행된 필리핀 EDCF 사업설명회에 불참한 대우건설이 한 달 후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점과 해당 사업의 중단으로 타당성 조사비용 16억 원이 낭비된 바, 타당성 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하여 사실 관계를 규명할 필요 ○ 탄자니아 EDCF 사업에서 현지 브로커를 통한 로비정황 등 부패 의혹 제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원국 정부의 결정’이라는 사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신설된 ‘경협민원 심의위원회’ 또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건설공제조합은 몽골 아이막 난방 사업과 관련하여 벽산 ENG에 계약이행보증 및 선수금지급보증을 제공하였으나, 동 보증의 미이행에 따라 대한민국-몽골 간 외교적 신뢰가 저하되고, 건설공제조합의 해외보증사업 대외 신뢰도가 저하되었으므로, 건설공제조합과 벽산 ENG의 공모를 비롯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 ○ 캄보디아 EDCF 사업은 시중은행 참여의향서 평가 및 현지법인 실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총리실에서 수립하는 ‘국제협력개발 종합계획’에도 사후에 포함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협력전대차관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보고할 필요 ○ 이집트가 IMF 구제금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입은행 EDCF 심사보고서는 외채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표기하는 등 부실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부실 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책임 규명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방안 마련 및 KDI 예비타당성보고서에 준하는 심사보고서 공개 필요 ○ 소액차관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은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윤석열 정부 기간 중 캄보디아 EDCF 지원 한도와 집행액이 상향되는 과정에서, 해당 결정이 통일교 및 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 연계된 것인지 규명할 필요 ○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특정 국회의원의 외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규명할 필요 ○ 우크라이나 EDCF 사업과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간 연계 의혹이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규명할 필요 ○ 도이치모터스 캄보디아 자회사(BAMC) 특혜 의혹 및 민간협력 전대차관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규명할 필요 ○ EDCF 연체가 발생한 수원국에 대하여 신규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후 제도적 절차를 보완할 필요 ○ EDCF 사업은 물가상승, 환율 변동, 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민간협력 전대차관 제도가 대한민국 내 특정 기업·특정인·특정 단체에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인지 소명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이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급기관 또는 정치권에서 부당한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압박을 받거나 부적절한 특혜를 요청받았는지 소명할 필요 ○ 민간협력 전대차관이 문제인 정부 기간 중 실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 ○ 모로코, 이집트, 캄보디아 등 EDCF 지원 사업들의 심사보고서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심사보고서를 공개할 필요
공급망안정화 관련	○ 전략물자 비축량 확대를 위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관 공동 비축제도’ 참여 중소기업 중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수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금리 우대 및 융자프로그램 신설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 첫해 집행 실적이 당초 계획(10조 원) 대비 저조하고, 금융지원이 신규 시설자금에 편중되어 기존 프로젝트의 증액 수요나 운영·투자자금 지원에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리파이낸싱 허용 등 다각적인 지원 방식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은 약 70%인데, 실제 기금 지원 실적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이 대출과 보증 등 민간 기업에 리스크를 전가하는 방식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적극적 투자 필요
대북사업 관련	○ 북한의 대북 차관 미상환 및 경수로 사업 관련 원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리금 부담 등 대북사업에 혈세가 낭비되었고, 유엔 대북 제재로 실질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올해보다 25.2%가 증가한 바, 한국수출입은행은 대북 사업이 국제법 위반 사업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은 6%로 저조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에도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으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 관리 주체로서 현행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 개성공단 폐쇄 후 개성공단지원재단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사무실 임차료, 근로화환 구입, 업무추진비 지출 및 신규 채용 등 비용 지출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 관리 주체로서 감사 후 위원님들께 공유할 필요 ○ 광해재단 흑연광산 개발사업, 한국전력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 개성공단 지원 및 경수로 사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액의 대북 채권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웜비어’ 부모 사례와 같이 소송을 비롯하여 적극적 회수 방안을 검토할 필요 ○ 2025년 9월 기준, 전체 디폴트 차관 약 1조원 중 북한 관련 미상환 원리금이 6억 2,120만 달러로 88%에 달하고 있으므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공탁 자산 환수 등 북한 관련 자산의 환수를 추진할 필요 ○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업무추진비가 하루에 5회 집행되거나, 연간 352회 집행되는 등 비정상적 집행 행태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은 감사를 진행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이 통일부 대신 남북협력기금 운용을 수탁받는 사유를 소명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남북협력기금은 집행률 및 회수율이 저조한 바, 과다한 예산편성, 비공개 사업 운영 및 퍼다주기식 원조를 중단할 필요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등에 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감사 필요
관세 대응 관련	○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펀드 조성 시, 한국수출입은행의 외화채권 발행 분담과 관련하여 국제 채권시장의 수용성 및 금리 변동 리스크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 ○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도입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이 34.7%에 불과하여 타 정책금융기관 대비 저조하고, 특히 신규 대출에 평균 53일이라는 과도한 심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속심사제 도입 등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 ○ 현행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각각 3조원이 배정되어 있으나,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등 대외 통상 환경 악화 시 자체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 ○ MASGA 관련하여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출할 필요
경영관리, 조직운영 및 기타	○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2020년 이후 매년 악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기관의 투자 및 구매 계획을 수립할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계획을 포함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체 탄소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은 탄소배출량 저감 계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획을 제출할 필요 ○ 현행 「한국수출입은행법」은 은행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은행장의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입법할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청렴도는 4등급으로, 기재위 소관 8개 기관 중 최하위 수준이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은 청렴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여 약 9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부담하였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지속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경제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여신정책 방향 설정과 유동성 점검을 위해 발족한 ‘수출위기상황 점검회의’가 2024년 12월 발족 이후 개최 실적이 저조하므로, 내부 일상 회의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해당 공식 회의체를 정례화하여 운영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KAI의 대주주로서, KAI의 부실한 환차손 관리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주주 대표소송 등을 통하여 경영진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이 동 사항을 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 ○ 직접투자 범위 및 간접투자 펀드 대상을 확대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을 마련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KAI의 최대주주이므로, KAI 사장 임명 및 민영화 계획에 최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이행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의 학술연수 성과 제고를 위하여 현행 운영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 현지사무소 내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포함한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탄소배출량 저감계획 및 예측치’를 제출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직무급 도입을 연기하는 사유를 소명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부서·프로젝트별 업무가 상이하므로, 직무평가를 통하여 합리적 보상을 지급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의 젊은 직원의 퇴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퇴사 증가에 대한 원인 규명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기획재정부는 직무급 도입기관을 중심으로 직무급 비중 향상 및 직무등급 간 차등 수준 확대 등 보수체계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 중인데, 한국수출입은행이 직무급제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직무급제 추진 계획을 제출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과 관련된 한국수출입은행의 리스크 관리 현황을 제출할 필요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소속 자회사 명단을 제출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원 대상으로 운영 중인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금리를 비롯한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

8. 한국조폐공사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디지털신분증, 기념주화 등 국내 사업 분야	○ 순환효과를 위해 모바일상품권을 2, 3차 결제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골드바 음성 거래 및 탈루·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명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만 골드바를 구매하도록 하거나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시장점유율 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 수립 필요 ○ 디지털온누리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 이용 불편, 오류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전준비가 미흡했다고 보이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플랫폼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 ○ 무기명 골드바 거래가 상속·증여세 포탈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통보 시스템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지폐 내구성 및 위생 강화를 위한 연구 필요 ○ 동사무소 등 관련기관의 불필요한 방문 없이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민간업체들의 불공정 거래·입찰 등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조폐공사 전자쇼핑몰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 현재 골드바와 24K 메달 가격 및 판매 정책이 다르므로 정책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CHAK)의 상품권 발행액 점유율이 하락추세이므로 지자체 대상 수수료를 개편, 소상공인 지원책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품질을 제고할 필요
미래 성장 동력 및 사업 다각화 모색 관련	○ 사업 다각화를 위해 예술형 주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행할 필요 ○ 외국인 관광객들의 디지털 신원 인증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
조직운영 전반	○ 임직원 복지카드 교체에 따라 카드사가 지급한 발전기금(판촉비)을 조폐공사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바로 제3자인 노동조합에 직접 입금한 것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반으로, 환수 후 회계처리 할 필요 ○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부담이나 장기부채 누증 문제가 있으므로 구조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 임직원공제기금과 관련하여 퇴사 시 처리 규정 미비, 공제 철회 불가 등 문제가 다수 있으므로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필요 ○ 회사를 상대로 한 직원들의 소송 규모가 21건, 소송가액 129억원에 달하므로 직원과의 소통 등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경상경비가 삭감·동결되어 직원 복지 축소, 노사분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 중 해당 협동조합에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이 실적으로 포함된 사례가 있으므로, 직접생산 여부나 납품 제품의 적정성에 대한 전수조사 후 문제 제품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제외할 필요 ○ 자회사(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노동조합 농성 중으로, 노동자 및 자회사 대표 면담 등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우즈베키스탄 자회사(GKD)가 아동 노동 착취 원료 구매, 환경오염 문제, 린터 안전재고 미달에 따른 특별감사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 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할 필요 ○ 전자여권기 관련 감사원의 직원 면담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이 있었는지 경위를 확인하여 보고할 필요 ○ 조폐공사 특수경비 자회사(콤스코시큐리티) 직원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자 면담 및 의견 청취할 필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다른 공공기관 대비 저조하므로 적극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 ○ 5년간 수의계약 심의 대상 공사 건수가 34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심의위원회 회의가 전혀 개최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노란봉투법 관련 공사의 리스크 관리 현황 및 노동쟁의 발생 시 대책을 보고할 필요 ○ 조폐산업 발전 3개년 계획 수립을 적극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중장기 경영목표도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물품 대금 미회수 관련하여, 상환금리 등 약정이 상대방 업체측에 유리하고 상환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해당 경위 및 책임소재를 보고할 필요

9. 한국투자공사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투자 정책 관련	○ 한국투자공사의 설립 목적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용 자산 중 국내 자산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하므로,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 ○ 한국투자공사의 국내 운용사 위탁 규모를 확대하라는 의견을 유념할 필요 ○ 한국투자공사의 운용 자산 중 국내 자산운용사 위탁 비율이 1.6%, 수수료 지급 비중이 0.3%에 불과하여 국내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미흡한 바, ① 국내 자산운용사에 대한 중장기적 위탁 비율 목표 설정, ② 신생·소형 운용사 발굴을 위한 루키리그 제도 도입, ③ 해외 자산운용사 선정 시 국내 기관의 컨소시엄 참여 의무화, ④ 소규모 사업에 대한 국내 운용사 별도 리그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국투자공사가 석탄 발전, 담배, 대마 등을 투자배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립모리스 등 담배 관련 기업이나 석탄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바,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를 참고하여 ESG 원칙을 견지하며 수익을 추구할 필요 ○ 글로벌 국부펀드 추적 기관인 싱가포르 SWF의 분석 결과, 한국투자공사 평균 수익률은 5.36%로 조사 대상 50개 연기금·국부펀드 중 41위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거버넌스 개편 등 수익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부펀드로서 ESG 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마련할 필요 ○ 한국투자공사는 투자 전략 재검토 등을 통하여 부동산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위탁 자산 관련	○ 2023년도 한일 재무장관 협의 후 발행된 엔화 외평채는 엔화 확보 필요성이나 투자 자산 배분 전략이 불분명하고,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절차적 미비점이 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의 싹짓돈으로 운영되거나 한일 외교 관계의 부속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할 필요 ○ 2015년 기획재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공동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50억 달러의 집행 실적이 2025년까지 전무한 바, 한국투자공사는 다른 부처 산하의 전문 기관들과 협업 관계를 확대할 필요 ○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기금관리 주체로부터만 자산을 위탁받을 수 있어, 운용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현행 한국투자공사는 위탁자산을 외국에서 외화 표시 자산으로만 운영하여야 하므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국투자공사의 국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투자 허용 등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포함한 한국투자공사 운영 방식을 재설계 할 필요 ○ 대미투자 방안으로 한국투자공사(KIC) 자산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한국투자공사는 국부펀드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투자공사법」 제30조에 명시된 위탁자산 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준수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대미 관세협상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 규모는 185억 달러 내외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 ○ 2015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해외 진출 기업 투자 지원 목적으로 위탁받은 50억 달러는 위탁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일반 위탁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동 50억 달러를 반납할 필요 ○ 2015년 한국투자공사가 전략적 투자자금을 위탁받은 이후 이를 전담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전략투자팀을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투자 실적이 전무하며, 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 또한 개최한 적이 없는 바, 해당 사항의 존속을 검토할 필요 ○ 한국투자공사는 2015년 기획재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공동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5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투자에 대하여 구체적 집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국투자공사는 전략적투자가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전략적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경영관리, 조직운영 및 기타	○ 한국투자공사는 총인건비 규제 및 성과보상체계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글로벌 인재 확보가 곤란하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국투자공사는 직원 1인당 10억원 내외를 지출하는 조직으로,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예산 및 비용 구조를 성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 ○ 한국투자공사 임직원의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 위반은 42건임에도 경징계 처분이 반복되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국투자공사 직원이 개인 저서 발간 및 유튜브 출연을 통하여 사모펀드 투자 전략 등 공사의 구체적인 실무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한국투자공사법」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위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밀누설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한국투자공사법」 제31조제6항은 자산운용 전문성 제고를 위한 투자운용인력 자격 요건과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위임 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 필요 ○ 한국투자공사의 운용 자산은 327조원이나, 한국투자공사는 자료 미제출 및 정보 비공개 등 대외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할 필요 ○ KIC 운영위원회는 학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현장 투자 전문가 비중이 확대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 ○ 한국투자공사의 국내 투자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법 개정이 필요 ○ 한국투자공사의 설립 목적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이 아니므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필요 ○ 한국투자공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방안을 제출할 필요

10. 한국재정정보원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기관 고유사업 관련	○ 국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플랫폼 e나라 도움에 대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노력이 필요하고, 정보원이 국가보조금을 통합적으로 사후관리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겠다는데도 활용 실적을 관리 못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 국민 편의를 위해 만든 국세외수입포털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낮으므로 국민 인지도 증가 및 국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디브레인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삶의 질 지표와 재정사업 간 연계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국고보조금 모니터링 추출 후 1차로 걸러낸 건이 '24년도 기준 7,629건, 확정건수 381건(확정률 5.0%)임. 담당부처로 양질의 데이터를 줘야 양질의 결과물을 만드는데, 정밀하지 않은 의심건을 다량으로 생산해 중앙부처에 행정·시간 낭비, 부담을 떠안게 하고 있음. 낮은 확정률의 원인 조사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 및 지적
기관 운영 관련	○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를 3년간 미이행하고 있고,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5년 연속 개선 필요를 받았음. 개선 노력 필요 ○ 한국재정정보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의 지속적인 상담사 이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정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보원 차원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재정 정보원과 상담인력 간의 소통 창구를 구축하는 방안 검토 필요

11. 한국원산지정보원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원산지 정보 관련	○ 원산지전문기관인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을 확보 필요
기업 지원 관련	○ 통상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과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의 증액 필요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 강화 및 정성적 판정 기준에 따른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 방지 필요 ○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 해소 필요 ○ 한미 무역협상 타결 이후의 기업의 공급망에 불안정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검토 필요
기관 운영 관련	○ 연구보고서 공개 규정 명확히 수립 및 위원회 구성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필요 ○ 원산지정보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적극적인 공개 필요 ○ 원산지정보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장의 역할에 대해 질의

12. 한국통계정보원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통계 품질 개선 및 작성·활용 개선	○ 통계 품질 개선을 위해 데이터 수집·검증 및 품질 점검 역량을 확충할 필요
조직 운영 관련	○ 위탁사업 해지 및 수탁기관 재지정 과정의 불투명한 사유 규명 필요 ○ 중단된 정규직 신규 채용을 재개하고, ‘체험형 인턴’ 위주의 인력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지난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자체 감사기구 마련 및 관련 제도·규정 정비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감사 조직 구성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기타	○ 국정자원 화재와 같은 비상 사태 시 서비스 지연 방지 위해 단일 서버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서버 분산 배치 검토 필요

VI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기획재정부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1) 국가 핵심 전략 산업 육성 및 지원책 강화

문화, 우주항공, 방산 및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전략 산업의 독보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책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통상 협상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

(2) 코스닥시장 재편 및 벤처자본 활성화

벤처자본시장이라는 코스닥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장 재편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마련하고, 자금 조달의 효율성을 높일 것

(3) AI 활용 세부 계획 수립 및 실질적 성과 도출

AI 활용에 있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것

(4) 인구·인재 위기 대응을 위한 구조적 혁신 및 국가인재기금 신설

출산율 급감과 인구 구조 재편에 대응하여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구조적 혁신을 추진하고, 전 부처 차원의 종합 전략으로서 국가인재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인재에 대한 장기 투자 체계를 구축할 것

(5)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경영 안전망 구축

일자리 구조개혁과 연계하여 위기의 자영업자를 구제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

(6) 법인세 인상 정책 재검토 필요

법인세 증세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 주도의 선별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율적인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것

(7) 거시경제 위기 극복 방안 및 민생 지표 회복 전략 수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성장률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가계부채 및 소득 격차 등 악화된 민생 지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성장 전략을 추진할 것

(8)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

GDP 대비 낮은 민간 소비 비중을 고려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성장 전략을 마련할 것

(9) 국내 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산 운용 위탁 확대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 운용 시 국내 자산운용사에 대한 외부 위탁 비중을 높여 국내 금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

(10) 필수재 중심의 생활물가 안정 노력

먹거리와 주거비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대책을 강화할 것

(11) 퇴직연금 기금화 및 범정부 차원의 개혁 추진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공적연금 보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할 것

(12) 예산낭비 방지 대책 마련

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예산낭비 사례 관리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3) 국민성장펀드의 민간 중심 개편 및 성과 제고

과거 뉴딜펀드의 실패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관제펀드 성격을 탈피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 구조와 시장 원리에 기반한 산업 육성 체계를 확립할 것

(14) 도시 내부 불균형 해소 및 국고보조율 역차별 개선

예비타당성조사 시 균형성장 가중치를 도입하고, 서울시 등 특정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율 역차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보조율을 검토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

(15) 소비쿠폰 지원에 따른 물가 부담 부작용 경계

소비쿠폰 지원에 따른 물가 부담 등 부작용을 경계할 것

(16)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및 조세 형평성 강화

민생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소비쿠폰 지급 등을 검토하고,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복원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것

(17) R&D 투자 강화 및 연구의 연속성·안정성 확보

연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R&D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예산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18) R&D 예산 삭감 과정의 절차적 하자 조사 및 부적절한 예산 편성 관행 개선

주요 R&D 예산 삭감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하자가 확인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임의로 재조정하는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9) 재정준칙 법제화 및 중장기 건전성 관리 체계 확립

재정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준칙 입법화가 필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체계를 확립할 것

(20) 단기 유동성 조달 방식 개선

단기국채 시장 활성화를 통해 한국은행 차입 의존도를 낮추는 등 단기 유동성 조달 방식을 개선할 것

(21)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 투명성 제고

예산 편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상시적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승수효과가 낮은 선심성 현금 지원을 지양하여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

(22) 재정 성과 평가의 실효성 및 구속력 강화

형식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각 부처가 신장동력 확보 등 실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도록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가 차년도 예산 배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속력을 강화할 것

(23) 국가채무비율 관리와 GDP 증대 전략 병행

대외 재정 신뢰도 확보를 위해 세출 감소와 세입 증대뿐만 아니라, GDP 자체를 키울 수 있는 국가 성장 전략을 병행하여 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

(24) 재정 기조와 부동산 정책의 정합성 검토

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정책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 기조와 부동산 정책 간의 정합성을 재점검할 것

(25) 사회적 지표에 기반한 과학적 자원 배분 체계 수립

지역별 고립 사망자 수 등 구체적인 사회적 고립도 지표에 기반한 과학적인 자원 배분 모델을 구축하여 예산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성과 점검을 실시할 것

(26) 복권기금 배분 및 국세감면 제도의 합리화

복권기금의 법정배분비율을 현재 수요에 맞게 재검토하고, 국세감면 한도 산출 방식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자의적 운용 방지 및 일관성을 확보할 것

(27) 중기재정계획의 국정과제 환류 및 예측 가능성 제고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총소요 재원을 중기재정계획에 투명하게 반영하여 재정의 대외 신인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

(28) 민생 안전을 위한 관세 행정 역량 강화

마약 및 총기류 등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법체계를 재검토할 것

(29)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국회 통제권 강화

대규모 세수 오차 발생 시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30) ODA 및 EDCF 예산 관리 체계 구축 및 중소기업 보호

ODA와 EDCF 사업의 부실 집행을 점검하여 대기업 편중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공정한 참여가 보장되는 예산 관리 체계를 수립할 것

(31) ODA · EDCF 투명성 강화 및 비리 의혹 진상 규명

사업 선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나 비리 의혹이 개입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경위 점검에 협조하여 위법·부당 행위 발견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

(32) EDCF 민간협력 전대차관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무리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예산 편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권 강화 및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것

(33)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및 핵심 광물 안보 전략 수립

대외 규제가 국내 전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하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경제 안보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법적 지원을 강화할 것

(34) CPTPP 가입 전략 수립 및 이해당사자 보호 대책 마련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CPTPP 가입 실익을 전향적으로 검

토하되, 농축산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피해 보전 대책과 소통 방안을 우선 마련할 것

(35) 특정 국가 해외 사업 의혹 규명

타당성 조사 미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결정된 타크마우 사업 등 특정 국가 사업의 절차적 모순과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감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기금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

(36) 서민금융 상품의 이자율 구조 시정 및 저소득 고신용자 역차별 방지

햇살론15 등 서민금융 상품의 이자율이 대부업체 평균보다 높게 설정된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고, 금리 조정 과정에서 저소득 고신용자가 역차별 받지 않도록 정책 설계 시 유념할 것

(37) 시장 원리에 입각한 가계부채 안정화 종합 대책 추진

정부의 선별적 금리 개입 등을 지양하고, 대출 규제·세제 정책·주택 공급을 결합한 정교한 종합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의 구조적 안정화와 부동산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

(38) 공공 주도의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및 실행력 제고

용산 정비창 등 서울 내 공공 유휴 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시장에 확실한 수급 안정 시그널을 제공할 것

(39) 종합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수립

세제, 공급, 수요관리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것

(40) 10·15 부동산 대책 보완

주택법 시행령 준수 여부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서민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대책을 마련할 것

(41)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

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을 촉진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여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것

(42)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세·월세 시장 안정화 및 주거 지원 대책 수립

전세 매물 부족 및 월세 가격 상승 현상을 엄중히 인식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수립할 것

(43)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대출 규제 시 예외 조항 적용 등 정교한 설계를 통해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용이하도록 할 것

(44) 공급 확대 및 DSR 기조 유지

부동산 PF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DSR 적용 예외 축소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

(45) 기업 유보금의 신산업 투자 환류 촉진

기업의 유보금이 신산업 분야와 생산적인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

(46) 벤처 붐 조성 및 BDC 제도의 조속한 안착

공적 자금을 마중물로 하는 제3차 벤처 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벤처 기업이 상장 전 단계에서도 자금을 원활히 회수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킬 것

(47)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총요소생산성 제고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으로 성장과 재분배가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48) 내수 소비 촉진 방안 강구

수출 실적이 내수 소비로 직결되지 않는 단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낙수효과에만 의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내수 소비 촉진 방안을 강구할 것

(49) 기금 운용의 적극적 수익 창출 전환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과거의 소극적 운용에서 벗어나 안정성·유동성을 전제로 투자 다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50) 실효성 있는 외환 안정 및 WGBI 편입 환경 조성

환율 1,400원대 고착화가 대외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구조적 적신호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WGBI 편입을 통한 외국 자금 유입 효과가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상쇄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외환 환경을 조성할 것

(51) 경제 부총리의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경제 부총리가 환율 및 물가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대외 신인도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것

(52)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및 공급 계획 마련

실효성 있는 3차 대책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되, 시장 불안 지속 시를 대비해 매물의 출회 확대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하며,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

(53) 미분양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 모델 도입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을 전제로 한 분양제도, 리츠 연계 임대주택 공급 등 수요자 중심의 대안을 검토할 것

(54) 미래 전력 수요 대응 및 원전 활용

AI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

(55)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

국유재산의 매각 실태를 점검하여 헐값 매각에 따른 자산 손실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공공성이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관리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한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 등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

(56) 일반 시민 체감 물가 안정화 대책 마련

일반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화를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물가 안정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57)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 단위의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58) 외국인 과학자 정착 도시 조성

고급 외국인 인력 유입을 위해 비자 및 체류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가족 정주가 가능한 ‘외국인 과학자 정착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방 내수 활성화와 연계할 것

(59) 거점국립대 육성 및 우수 지역사립대학 경쟁력 강화

거점국립대 위주의 일률적인 보조금 지원은 지역 내 우수 사립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립대와 사립대 간의 역할 분담 및 학점 교류 시스템 구축 등 상생 방안을 포함한 고등교육 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

‘서울대 10개 만들기(거점국립대 육성)’ 사업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현지에서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것

(60)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고도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관련 조폐공사 운영 사이트를 공공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여 민간 독점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것

(61)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 지원 확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통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것

(6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요소가 예타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위해 5극 3특 체제 추진 및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을 추진할 것

(63) 공공기관 전문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문인력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투자공사가 원활히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요건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할 것

(64) 공공기관 육아휴직 등 출산·결혼 정책 개선

6개월 미만 육아휴직자에 대한 실질적 인력 충원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육아휴직 현황을 전수조사하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도 ‘가족수당(배우자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을 행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

(65) 공공기관 노동계 참여 메커니즘 수립

ILO 권고에 따라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이 단체교섭을 제약하지 않도록 총인건비 제

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6) 공공기관 총인건비 산정기준 변경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해외사업 인력관리 부대비용, 사내대출 인정상여, 건강검지비 등을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할 것

(67)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예외 적용 및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

주4.5일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구조 왜곡과 노사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인 총인건비 인상률 예외 적용 및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

(68) 공공기관 자녀수당 신설 허용 및 복지비 정기 인상

임금 인상 재원 확보를 위한 의도적 불용을 인정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자녀수당 신설 허용 및 장기간 동결된 복지비의 정기적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

(69)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지침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액을 노사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보장하고, 1인당 기금액을 상향하는 등 기재부의 지침을 개선할 것

(70)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및 구체적 권한 부여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

(71) 공무직 예산 통합관리체계 구축

공무직 예산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공무직 처우개선에 활용할 것

(72) 공무원 처우 개선계획 마련

공무원과 공무원 간, 소속기관 공무원 간 복리후생 및 처우 격차에 대한 단계적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

(73) 공공기관 인사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전문성이 결여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하고 기관장이 개혁 의지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장의 전문성과 임기를 존중하여 제도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정치적 외압이 없도록 기획재정부 차원의 보호 장치를 마하며, 공운위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공공기관 임원 알박기 문제를 개선할 것

(74) 공공기관 조직운영 개선

기관장의 전문성 검증과 조직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5) 공공기관 복지카드 판촉 지원금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근절

복지카드 판촉 지원금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지침 위반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임직원 혜택이 기관이나 노동조합으로 임의 유입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76)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관련 후속대응

2022년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계획을 마련

하여 제출할 것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관리 종료 사실을 산하기관에 명확히 안내하여 불합리한 예산 동결을 방지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 체계를 전면 원상복구할 것

(77)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안전관리 평가 개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기재부 내 공공안전정책팀 재설치를 검토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도 공공기관 평가 시 안전관리 평가대상에 포함할 것

(78)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국제적 수준 반영 및 맞춤형 절대평가 전환

전세사기 피해보상 등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노력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적 수준의 성과를 반영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할 것

(79)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배점사항 개선

일률적인 경상경비 삭감 지침을 경영평가 가점에서 제외하고 물가 전망을 반영하여 경비를 편성하며, 일·가정 양립 평가지표의 배점 확대 및 계량화를 검토할 것

방만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경영평가 기준을 국민 체감과 공공성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사례와 같은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을 방지할 것

(80)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출 전가 방지 및 재정건전화

공공기관 부채가 과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지출 압박을 공공기관에 전가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재정건전화에 노력할

것

(81) 한국전력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한국전력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기요금 계약종별 원가회수율 차이를 해소하고, 요금체계에서 복지·할인혜택을 점검하여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

(82)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해외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83) 공공기관 정원통제 제도 완화

해외사업·미래전략사업 등 특정 조건에 한해 즉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정원통제 제도를 완화할 것

(84) 공공기관 공제회 설립 검토

공공기관 간 복지 격차와 조직 사기 저하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공제회 설립 로드맵을 검토할 것

(85) 노동이사제 안착 및 확대 지원

노동이사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불이익 금지 등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기타 공공기관 및 지자체까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것

(86) 공공기관 산재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등급제 평가가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엄정한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

(87) 공공기관 통폐합 및 총인건비제 재검토

공공기관 통폐합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총인건비 제도로 인해 공공기관 내 임금 이중구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

(88) 공공기관 자회사 처우 개선

공공기관 자회사 복지예산을 모회사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자회사 운영 실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자회사 노동자의 명절상여금도 정부부처 공무원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모·자회사 간 처우 격차를 해소할 것

(89) 자회사 부담이 본사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자회사의 비용 부담이 본사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90)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방만한 기관 운영과 금융사고 대처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

(9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재검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전력망 안정성, 수자원 부족, 탄소중립 역행 등 중대한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고, RE100 충족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히 재검토할 것

(92)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개선

포스코·현대제철 등 대규모 배출 기업에 대한 과도한 배출권 할당이 기업의 감축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산업별 감축 역량을 정확히 반영하고, EU 탄소국경제도(CBAM)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할당 계획을 수립할 것

배출권 무상할당 과다와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배출권 거래가 위축되고 수입이 계획 대비 미달하고 있으므로,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할당 방식 및 유상할당 비율을 조정할 것

(93) 탄소가격 격차 해소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

EU 대비 1/10 수준인 현저히 낮은 국내 탄소가격으로 향후 수출 시 국내 기업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탄소가격 격차 해소를 위해 배출권 시장 활성화 등 노력 필요

(94) 기후대응기금 규모 확대

기후테크 글로벌 선도국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GDP 대비 매우 낮은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

(95) 기후대응기금 자체 수입 기반 마련

기후대응기금이 일반·특별회계 전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배출권거래 수입 비중이 낮아 재정이 불안정하므로 안정적인 자체 수입 기반을 마련할 것

(96)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대응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이므로, 위축된 R&D 예산과 보조금을 정상화하고 수소경제위원회의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회복할 것

(97) 청년고용 문제 해결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양성할 필요가 있고, 단편적·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

(98) 실노동시간 단축 및 점진적 정년연장 로드맵 마련

실노동시간 단축 논의 시 노동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청년 고용을 저해하지 않는 점진적 정년연장 로드맵을 마련할 것

(99) 청년복지 정책 마련

청년들이 고용·주거·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재정지원 체계 구축, 기획재정부 주도 ‘청년 대응 기구’ 설치 등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100) 사회적 고립 대책 마련

부처별·생애주기별로 분절된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영국·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일 것

(101) 양극화·불평등 완화 대책 마련

주거 빈곤 가구 축소 등 양극화·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 및 방안을 마련할 것

(10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 실효성 제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재부 소관 기관의 고용 실태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고용 이행 대책을 수립할 것

(103) 재정 거버넌스 정립 및 세입추계 신뢰성 확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따른 견제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재정 투명성 확보 및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104)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산업 보호 및 후속 대책 마련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특별법 제정, 철강 분야 고율관세 대응, 국내 투자 여력 감소 방지 등 국내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속 협상에 임할 것

(105) 국익 보호를 위한 초당적 협력 유지

향후 협상에서도 국익 보호를 위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행보를 지지하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 지원을 지속할 것

(106) 협상 결과의 객관적 재평가 및 대책 수립

관세 협상 결과가 국익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을 직시하고, 타국 대비 과도한 투자·부담 비중을 객관적 지표에 기반하여 재평가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07) 투명한 정보 공개 및 대응 전략 수립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하여 양국 간 발표 내용의 괴리와 정보 혼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협상에 임할 것

(108) 미합의 사항에 대한 왜곡 방지 및 농산물 시장 개방 현황 명확화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합의 사항이 합의된 것으로 호도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쌀·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외신 보도 등과 상이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보고할 것

(109) 한미 FTA 특혜 소멸 및 자동차 관세에 따른 산업 영향 분석

한미 FTA 특혜 소멸 및 자동차 관세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시장에 투명하게 설명할 것

(110) 대미 투자 관련 외환시장 안전장치 마련

대미 투자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원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111) 비현실적 현금 투자 요구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투자는 우리 외환 여건상 수용이 불가능하므로 통화 스와프를 포함하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112) 외환 건전성을 고려한 대미 관세 협상 추진

대미 관세 협상 시 대한민국의 외환보유액 규모와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요구에 대응할 것

(113) 외환보유액의 지분 출자 관련 법적 검토 및 국회 동의 절차 준수

외환보유액을 지분 출자에 사용하는 행위가 한국은행법 취지나 외국환평형기금 제도와 충돌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미 투자에 관하여 국회와 소통하며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것

(114) 외환 리스크 보완 및 자산 운용 실태 국회 보고

대규모 투자에 따른 운용수익 소멸 및 환율 급등 리스크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재원으로 활용될 자산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115) 대미 투자 조건의 투명한 설명 지속

대미 투자금의 원리금 회수 구조, 이자율 설정 등에 대하여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할 것

(116) 수익성 낮은 사업 참여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검토 및 국익 우선 협상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우리 기업이 강제로 참여하지 않도록 상업적 합리성·건전성·안정성 등을 엄격히 따지고, 철강 관세 및 농산물 검역 등 주요 현안에서 국익을 우선할 것

(117) 투자 계약 내 독소조항 재검토 및 실질적 보완책 마련

불평등한 독소조항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통화 스와프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118) 투자 정보 보안 강화 및 대통령 중심의 주도적 협상 추진

투자 정보 유출 등 협상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시정하고,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협상을 주도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것

(119) 국익 중심 원칙 견지 및 주요 산업별 세제·투자 지원 대책 수립

대미 투자 및 주요 현안에 대해 국익 중심 원칙을 견지하고,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세제 및 투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120) 주요 산업 수출 감소 대비 대응 전략 마련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

(121) 반도체 불확실성 해소 및 최혜국대우 사실 확인

반도체 분야의 최혜국대우 적용 여부 등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122)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바우처 중복 지원 허용

관세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 및 관세 대응 바우처의 중복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할 것

(123) 국내 제조업 위축 방지 및 고용 시장 보완 대책 마련

대미 투자 확대로 인해 국내 제조업 투자가 위축되거나 청년 고용 등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124) 유사니코틴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체계 마련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니코틴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25)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시장 참여자 보호 및 소상공인 지원 체계 구축

자영업자·소상공인·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2의 티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배송물류센터 확충 등 역지구 활성화를 지원할 것

(126) 가상자산시장 보호를 위한 무국적 거래소 규제 강화

무국적 거래소에 대응하여 가상자산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책을 마련할 것

(127) 자사주 일률 소각 등 상법 개정 관련 부작용 검토

자사주 일률 소각을 포함한 상법 개정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을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 과정에 반영할 것

(128) 침해사고 대응 패러다임 전환 및 정보 공유 활성화

전산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에서 인센티브 제공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위주로 전환하여 선제적 방어 역량을 강화할 것

(129)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 위반에 대한 예산 환류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가 예산에 환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130)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의 합리적 보완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산정 방식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통계적 정확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131) 하도급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한 발주자 지정 방식 재도입

하도급 구조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계약자 관리 방식

공동계약에서 입찰자 선택이 아닌 발주자 지정 방식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계약예규 개정 및 법제화 등을 통해 상생 협력 환경을 조성할 것

(132)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계약 조정 요건 현실화

중소기업이 적정 대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기준을 준용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국가계약법상 지나치게 엄격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

(133) 조달청 전동차 입찰 평가기준 강화 필요

전동차 입찰의 평가 기준 완화로 인한 부실 업체 낙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입찰제도를 개선할 것

(134) 스테이블코인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 정비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통화·외환·금융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법정 정책기구를 구성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불법거래 방지 및 외환규제 우회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

(135)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사업 등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사업 등이 단순 디지털 바우처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전자지갑 미개설 사용처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

(136) 비축 토지 활용률 제고

활용률이 낮은 비축 토지의 매입 과정을 개선할 것

(137) 무선백도어 대응 등 국가 재정 데이터 보안 체계 구축

국가 핵심 재정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보안 지침 및 내부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무선백도어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

(138) 임시조직 정비 및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관리 강화

실효성이 낮은 임시조직은 정식 직제화하거나 해체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지침 위반 사례에 대한 엄격한 감사 및 환수 방침을 확립할 것

(139) 한국세무사회 감리 업무의 공정성 및 감사 체계 강화

한국세무사회의 감리자료 미제출 등 공정성 저해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정례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할 것

(140) 서비스 산업 특화 AI 인력 양성 및 집중 투자

서비스 산업별 경력직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한국형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버티컬 AI 기술 개발에 국가 역량을 집중 투자할 것

(141)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 재편 중재 및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어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패키지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

(142) 조직 개편에 따른 비용 추계 정보의 투명한 제공

정부 조직 개편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밀한 추계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

(143) 중소기업 공공 대금 지급 지연 방지를 위한 조치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등 적기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144)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

금융통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식견과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145) 우수 연구 인력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보상 체계 구축

국가 핵심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자율성 보장, 사회적 존중, 경력 개발 기회 등이 통합된 혁신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

(146) 군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 주도 해결 및 범정부 대책 마련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 사무임을 명확히 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되,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147)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신속·다각적 추진 방안 검토

기재부-법무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통해 신속 이전을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다각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

(148) 지자체 충전금 및 고객 데이터 관리 실태 전면 점검

민간 업체의 지자체 충전금 부당 운영 및 고객 데이터 불법 가공 의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철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할 것

(149)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연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의 중단 및 지연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고할 것

(150) 지역업체 공동계약 참여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해신항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기획재정부 고시상의 지역업체 공동계약 참여 의무화 대상에 추가하는 등 지역업체 공동계약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1) 정관선 건설 조속 추진 및 예타 평가 방식 개선

정관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관선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책성 평가 비중을 대폭 강화할 것

(15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재발 방지 및 시스템 안정성 강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리튬이온 배터리 배치 매뉴얼 부재 및 무자격 업체 하청 문제를 근절하고, 핵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중화 예산 확보 및 중장기 복구 계획을 수립할 것

(153) 국부펀드 운영 활성화 및 국내 전략산업 지원 확대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투자공사(KIC)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하고,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투자 등 국부펀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

(154) 부담금 정비 방안의 재검토 및 기금 자원 확보

출국납부금 인하 등 기존 부담금 정비안이 관련 기금의 재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할 것

(155) 민간투자사업 확충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

련 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56)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지역 격차 반영 및 운영 개선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를 적절히 반영하고, 조사 수행 기간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57) 한국투자공사 위탁 자금의 효율적 집행 및 스타트업 지원 검토

한국투자공사에 위탁된 국내 기업 해외 진출 투자자금의 미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해당 자금을 활용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158)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부처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관리 및 실효성 있는 환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

(159)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개선을 위한 통합징수 체계 마련

국세외수입의 미수납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징수 방안을 마련할 것

(160)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성과평가 반영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환류제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1) 공무원 증원에 따른 경직성 경비 확대 관리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직성 경비의 과도한 확대를 유의하여 관리할 것

(162) 국민참여예산 확대를 위한 정책 설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보다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

(163) 핵심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해외 정제 및 제련 시설 투자 등 국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급망기금 활용 및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164)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역 특화 정책 마련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정책을 마련할 것

(165) 인건비 제도의 전면 개선 및 노동권 보호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결정이 공공부문의 단체 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경직된 평가 방식과 획일적 임금 억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총인건비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166)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및 복지 정책 전환

자산 격차 심화에 대응하여 청년과 신혼부부가 부동산 대출 및 각종 복지 지원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적 인식 전환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

(167) 대중국 경제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원칙 확립

전기차 보조금, 면세 사업권, 문화 콘텐츠 등 주요 분야에서 중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

(168)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잠재성장률 정체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통령 주도로 회의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169) AI 인력 양성 및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 강구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예산을 확충하고, 업무 특성에 맞는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170) 수의계약 제도 개선 및 퇴직 공무원 유관 기업 관리 강화

코로나19 관련 수의계약 특례 연장을 중단하고, 퇴직 공무원 관련 기업 및 특정 단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 대한 관리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할 것

(171) 모태펀드 자펀드 운용 실적의 투명한 공개

모태펀드 자펀드의 운용 실적을 출자 부처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17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국가 차원의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

(173)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효율적 예산 배정

성과가 입증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내실화하고,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174) 취업연계형 계약학과 확대 및 활성화 정책 마련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의 적시 공급을 위하여 취업연계형 계약학과를 확

대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을 마련할 것

(175) OTT 창작자 권리 보호 및 저작권 체계 강화

OTT 창작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저작물 생산 및 보호를 강화하고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

(176) 상병수당 제도의 조속한 도입 및 사회보험 연계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177)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장교란행위 근절 및 규제 개편

투기 심리 차단을 위해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통계 개편 및 다주택자 규제 체계의 합리적 재설계 방안을 마련할 것

(178) 인천 지역 SOC 사업 신속 추진 및 역차별 해소

인천 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주요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적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것

(179) 전략적 예산 투입을 통한 AI 정책 내실화

단순 지원을 넘어 정부의 AI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입하고 사업을 내실화할 것

(180)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용 금융지원 계획 마련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생산유도형 금융지원’ 자금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구체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을 마련할 것

나. 세제부문

(1) 헌법정신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 원칙 준수 필요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정신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명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해 불로소득보다 노동소득이 더 존중받는 과세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2) 경제 상황에 맞춘 유연한 재정준칙 운용과 세제 정상화를 통한 세입 기반 확충 필요

프랑스 사례와 같이 경직된 재정준칙과 감세가 세입기반 약화와 재정여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제 정상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재정준칙을 경제 상황과 정책 목표에 맞게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정부 역할 강화 및 조세체계 개선 필요

정부가 국민 전체의 이익과 경제 성장을 조화롭게 이끌기 위해 유능하고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감세로 인한 불평등 심화 문제를 피하기 위한 서민·중산층 소득 안정방식 등을 검토해 OECD 기준에 맞춘 보편적 체계 마련을 검토할 것

(4) 감세정책 전환 및 세수 회복과 과세 형평성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 제한적이고 주력 제조업과 소액투자자가 배제되고 있으므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국세수입이 경상성장률 대비 크게 감소하여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므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감세정책으로 자산·소득 불평등은 확대된 반면 자산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종합적·중기적 관점에서 자산세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

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 감소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조세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며,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거래 관련 세제와 국내생산촉진세제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

자산·자본소득이 극소수에 집중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부동산 세제 등을 응능부담과 조세형평 원칙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의 과도한 감세정책이 세수 감소와 재정적자 확대를 초래한 만큼, 재정준칙 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세 기조를 재검토하고 조세 정상화 등 세금제도를 개편할 것

재정 부족의 원인과 재원 조달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감세정책의 영향과 재정운용 실태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세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소통을 강화할 것

우리나라 재정규모 및 조세부담률이 OECD 대비 낮아 재정이 소득재분배와 경기대응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의무지출 증가 및 국가부채 급증 우려가 있으므로, 부유층 조세부담률 제고, 재정 정상화 및 중장기적인 재정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5) 핵심 경제정책 성공과 산업·인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조세 전략 필요

노동생산성 혁신, 핵심 경제정책 과제와 미래 전략산업, 국가 기간산업, 우수 인재 육성·확보를 위해 법인세 등 조세정책의 일관된 원칙과 함께 조세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 방안을 마련할 것

(6) 희생절차 활성화와 채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 마련

회생절차 활성화와 채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회생 매각자산에 대한 세제 특례를 마련할 것

(7) 조세지출 집중과 관행적 일몰 연장 해소 개선 논의 필요

조세지출이 고소득자·대기업에 집중되고 일몰 연장이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감안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결정할 것

(8) 조세지출 관련 제도 개선

조세지출의 상당 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불평등 완화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소득분위별 귀착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조세감면 제도를 저소득층 지원과 분배 개선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세지출이 계속 늘어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어, 장기적 재정 안정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조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실적이 이후 연도의 감면한도를 다시 높이도록 국세감면율 한도 산출방식이 설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재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혼인으로 인한 세부담 역차별 문제 개선

혼인으로 인해 취득세 등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혼인신고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하는 세금 제도를 확인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할 것

(10) 내향선원 급여 비과세 한도 형평성 개선

고령화와 인력 유입 부족으로 내향선원 수급난이 심화되고 국가안보 측

면의 중요성도 큰 만큼, 외항선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내항선원 급여 비과세 한도를 개선할 것

(11) 지역균형을 위한 근로소득세 개선 필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근로소득세 차등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2) 소득세 포괄주의로 변경 필요

현행 열거주의 중심의 소득세를 포괄주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시장규모의 정확한 파악, 거래내역의 면밀한 파악, 국제 공조 강화 등 과세체계 전반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14)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필요

기업승계형 m&a 활성화를 위하여 제3자 매각시 양도소득세가 증여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에 대해 개선할 것

m&a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나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15) 민간 복지포인트에 대한 비과세 필요

공무원이나 공무원직 근로자 등과 같이 민간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 확대 필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필요성을 검토할 것

(17)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비과세 도입 필요

퇴직연금 계좌를 통하여 국내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 대해 매매차익 비과세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것

(18) 무주택세대원의 청약통장 소득공제 범위 확대 필요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통장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할 것

(19) 소득세에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한 근본적인 근로소득세 개편을 검토할 것

(20)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필요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구간을 조정할 것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

(21) 자산세제 구조 전반적인 개선 필요

자산불평등이 악화되는 문제 및 자산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 문제 등 자산 세제 구조 전반적으로 공정과세, 응능과세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것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22)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과 조세 형평성·기업 성장 검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 배당 간 조세 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성장과 투자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약 25%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특정 고배당 기준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적용할 방안을 검토할 것

주주 배당 확대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인하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소득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도입에 신중할 것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장기투자자에 대한 지원이나 보유기간별 차등세율 도입, 배당재투자에 대한 비과세 등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

ISA계좌 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한도에 대해 검토할 것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감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구간별 분리과세를 차등하는 방안이나 성과평가제 도입할 것

국가투자우선산업인 주력제조업체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

2천만원 이하 소액투자자에 대한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안을 마련할 것

과거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시 기간 및 효과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

(23) 주식양도세 · 배당소득 분리과세 현실화로 기업 주주환원 촉진 및 투자자 신뢰 회복 필요

주식양도세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부의 배당소득 과세체계 방안이 기업에게 배당 확대 동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므로, 투자자들에게 실

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주환원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24) 증권거래세 인하 복원에 따른 투자자 부담과 유동성 저하 방지 및 맞춤형 세제 마련

증권거래세 인하 복원으로 개인투자자 부담 증가와 시장 유동성 감소가 우려되므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제를 마련하고 투자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5)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시 시장 분석 부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 시 시장 불안 가능성 분석이 부실하였으므로, 정책결정 과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향후 조세정책 추진시 충분히 검토할 것

(26) 상호금융 비과세 축소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상호금융 비과세 축소 정책은 지방소멸과 국민자산형성을 저해하므로 재검토할 것

(27)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및 경제·산업정책 마련 필요

조세는 국가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세정책과 산업정책을 통해 법인세 과세대상 기업을 확대하여 세원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이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순 세율 조정보다는 세원 구조 개선과 국제경쟁력·경제성장을 고려한 근본적·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것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수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대신 R&D·시설투자 등 펀셋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보유자금을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정책을 마련할 것

국내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상보다는 조세감면 및 투자세액공제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제도를 마련할 것

싱가포르나 대만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세수 상승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재검토할 것

(28)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자원 확보와 첨단산업·R&D·민생 지원 선순환 구조 검토

실효세율이 낮은 대기업 대상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확보된 재원을 첨단산업·R&D·민생 지원에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 방안을 마련할 것

(29) 국내생산촉진세제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생산 세제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판매시 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할 것

국내생산촉진세제 요건 중 국내판매는 제외하고 국내생산만 충족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 기업에 대해 국내생산촉진세제 혜택을 병행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세밀히 설계할 것

(30) 대손세액공제 환급 및 제도 개선 필요

대손세액공제 대상업체 및 환급 규모에 대해 추정하고, 향후 상거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상거래 양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31) 글로벌 플랫폼 기업 디지털 매출 실질 과세 마련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디지털 매출에 대한 실질과세 방안을 마련할 것

(32) 중소·벤처 기업 특허 출원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감면 검토

지적재산권과 특허 출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방안을 마련할 것

(33)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기업의 사이버 침해 대응이 처벌·은폐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진신고 면책제도와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보안 투자와 협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

(34) 실질적인 직무 수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

배당소득세 인하가 지배주주의 배당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임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계열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보수를 가져가는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 수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할 것

(35)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 세제 감면 방안을 마련할 것

(36)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법인세 제도 개선 필요

법인세 등 기업들의 조세감면 혜택에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에 대해 비수도권으로 본사 이전시 법인세율 차등감면제도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7) 노후선박 교체를 위한 법인세 감면 필요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하여 장기 계약시 법인세 감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연안화물선사, 화주 상생을 위해 법인세를 감면할 것

(38) 통합고용세액공제 한도 상향 필요

통합고용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할 것

(39)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연장 필요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일몰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연장할 것

(40) 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확대

게임산업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게임·음악 산업도 한류 확산과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문화콘텐츠

분야인 만큼, 기존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실태에 맞게 재검토하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해당 산업 지원을 위해 세금제도를 개편할 것

K-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한 지원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41)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 세액공제 활용을 위한 세법 해석 필요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 세액공제 활용을 위해 기재부 차원에서의 조속히 관련 세법 해석을 실시할 것

(42) 건축물 투자비 세액공제 필요

건축물 투자비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것

(43)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

자동차부품 중소기업들의 간접 수출 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해 각종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44) 자사주 과세체계의 전반적인 재정비 필요

자사주 취득방식, 기존 보유 자사주 처리방식 등과 관련한 세제 정비와 함께, 자사주 과세체계를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정비할 것

(45)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도입 효과 평가 필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투자 효과에 대해 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

(46) 보유세 인상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재고 필요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는 판단은 국가간 실효세율 비교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을 수 있는 만큼,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보다 공급·금리·유동성 등 근본 요인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려는 것은 과거 실패한 정책이며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지양할 것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임대료로 전가되고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와 보유세 인상 정책은 주택거래를 오히려 제약할 수 있으며 정책일관성에 대한 고민이 없으므로 재검토할 것

(47) 고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정상화 필요

현행 부동산세제가 소위 ‘뜰뜰한 한 채’라고 지칭되는 고액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서 세부담을 저감시켜 줌에 따라 시장이 왜곡되고 있으며,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과도하므로, 해당 대상자에 대한 세 부담을 정상화할 것

(48)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 필요

주택 공급과 자가보유율, 유주택비율 상승이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감면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소유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부동산 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생활물가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역·세대별 여건을 반영한 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보유세 등 부동산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부동산 대책에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적정화하여 ‘뜯뜯한 한 채’ 수요를 억제하고, 현행 주택 수 기준 세제의 한계를 고려해 주택가액 포함 과세와 ‘뜯뜯한 한 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

토지·주택 정책 실패로 다주택자 비중이 상승하고 갭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공급 확대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요관리 대책을 지속·강화하고 향후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정책도 적극적·심층적으로 검토할 것

(49) 조세공정성 제고 및 자산양극화 완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비 필요

세금을 통해 시장가격 자체를 직접 조절하려는 접근보다는, 조세의 공정성 제고와 자산 양극화 완화를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재정비할 것

(50)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개선 필요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공제 규모 및 실태 정확히 파악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구축주택 물량 공급을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한시적용에 대해 검토할 것

조정대상지역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한시적, 조건부적 양도세를 완화할 것

부동산 양도차익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설계방안을 마련할 것

(51) 임대주택사업자 관련 소급추징 유예 및 대책 마련 필요

임대주택 사업자 중 주택임대업 코드 기입 오류로 인해 과거 종부세 합산배제를 인정받아왔으나 현재 소급추징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소급추징을 유예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52) 배우자 상속세 공제 개선 및 편법 상속 차단 방안 마련 필요

상속세 과세대상 대부분이 부동산 중심의 중산층인 점을 고려할 때 주거안정과 생활 보호를 위해 배우자공제 등 공제 한도 상향과 동시에 편법상속·증여를 차단할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배우자 상속제도와 관련하여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를 상향보다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53)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및 가업상속공제 기준 검토 필요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인한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문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 범위 축소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 축소,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기준·한도 확대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할 것

(54) 상속세 개편 방안 검토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이 어려울 경우 인적공제 현실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과 함께 시기·금액별 자본이득 과세를 포함한 하이브리드형 상속세 개편을 검토할 것

(55) 주가 누르기 방지 위한 세제개편 필요

상장주식 상속·증여세가 저평가된 주가만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비상장주식이나 실제 경영권 거래 가치에 비해 과세가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주가가 순자산가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 가치 평가를 통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 할증 및 물납제도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

(56) 가업승계제도 관련 개선 필요

가업승계제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7) 영농자녀 농지증여에 대한 상증세 부담 경감 방안 마련 필요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훈령 제2681호)과 관련하여,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증세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8) 해외자원개발 및 중간재 도입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해외자원개발 및 중간재 도입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관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59) 혁신 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 지원 대책 마련 필요

혁신 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 지원 제도화 필요

(60) 할당관세 제도 관련 개선 필요

제약,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할당관세 제도를 개선할 것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할 것

농축수산물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

체적인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

할당관세 물량 배정 및 수입유통구조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할당관세 지정 및 변경과정의 국회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인 반면 국내 생산자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품목별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수급 상황에 맞게 보다 정교하게 운영할 것

(61) 부가가치세의제매입 확대 필요

중고품 산업 확대를 위하여 중고자동차로 제한되어 있는 부가세의제매입을 중고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2) 장류업계 부가세 면세기간 연장 반대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장류업계 부가세 면세기간 연장 반대 의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63)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김리아)에 대한 부가세 감면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김리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검토할 것

(64)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필요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것

(65) 담배사업법 개정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담배의 범위가 확대된 최근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하여 사제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66) 주세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소비자 보호 및 주류시장의 건전성 유지, 주세의 형평성 및 공평과세 등의 측면에서 발포주를 맥주에 포함시킬 것

공평 과세 및 세수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본처럼 알코올 농도별 차등세율 도입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67) 교육세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교육세 증세에 대해 재검토할 것

교육세 인상은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재부 차원에서 분석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

금융,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인상 재검토를 위하여 교육세 인상에 3년 인물조항을 추가하고 세율 인상폭을 축소할 것

(68) 비거주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비거주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69) 세무사들의 실효적인 관리감독방안 마련 필요

한국세무사회 감사 결과에 따라 감리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 감독 방안 마련을 위해 주기적인 감사 계획 수립 등 대책을 수립할 것

2. 국가데이터처

(1) 국가정책 활용 통계의 품질관리 강화

국가정책에 활용되는 통계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통계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 동성 배우자 등 민감 사항 통계 반영의 신중한 검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성 배우자 등 민감한 사항의 통계 반영에 신중을 기할 것

(3) 사회적 실체 반영 및 통계적 책무 이행을 통한 차별 방지

법적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실체를 정확히 반영하여 혐오와 차별을 방지해야 하는 통계적 책무를 충실히 고려하여 통계를 생산할 것

(4) 노인 연령 기준 개선 필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연령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

(5)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의성 제고 및 제도적 장벽 해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의성 확보를 위해 공표 시기를 단축하고, 행정자료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6) 물가지수 개편 주기 단축 및 보조지표 활용 강화

변화된 소비 패턴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물가지수 개편 주기를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고 보조지표 활용을 강화할 것

(7) 자가주거비의 물가지수 주지표 전환 및 객관성 확보

OECD 주요국과 달리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서 제외하여 발생하는 현실 물가와의 괴리를 해소하고, 이를 주지표로 전환하여 통계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

(8) 사회이동성 지표체계 구축

사회이동성 지표 등 기본권 보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할 것

(9) 고용의 질 지표체계 공식 통계화

단순 취업자 수를 넘어 ‘고용의 질 지표체계’를 공식 통계화할 것

(10) 현장 조사요원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현장 조사요원이 직면한 물리적·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인 조사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1) 경제통계조사 시 사업체 응답 부담 완화

경제통계통합조사 시 유관 기관과의 자료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할 것

(12) 인구주택총조사 예산 절감 방안 강구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위해 태블릿PC를 대량 구매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렌탈·리스 도입 및 기존 기기 재활용 등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

(13) 인구주택총조사 응답률 제고 및 홍보 방안 마련

인구주택총조사 응답률 하락 추세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참여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14) 쌀 소비 통계 오류 시정 및 통계 생산 체계 구축

현행 쌀 소비 통계의 오류를 시정하여 변화된 식생활 현실을 반영한 통계 생산 체계를 구축할 것

(15) 데이터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등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 총괄·조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

(16) 실질적 보안 강화 조치 및 대응 시스템 마련

상시 탐지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보안을 강화하고, 신종 보안 위협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구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할 것

(17) KOSIS 복구 및 서비스 체계 구축 세부 계획 마련

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국가통계포털(KOSIS) 장기 마비 사태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향후 데이터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대책을 마련할 것

(18) 지방 조직 명칭 일원화 및 행정 정합성 확보

국가데이터처 승격에도 불구하고 본부와 지방청 간 명칭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시정하기 위해, 체계적인 명칭 일원화와 행정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

(19) 가구 단위 조사 방식의 개인 중심 전환 검토

기존 가구 단위 조사 방식을 개인 중심으로 전환할 것

(20)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공표 및 플랫폼 종사자 통계 구축

사업소득자 및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업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록 2018년 ILO 개정 체계를 반영한 종사상지위분류를 선도적으로 공표하고, 실험적 통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 마련을 협의할 것

(21) 외로움 조사 항목 세분화 및 국제 비교성 확보

OECD 기준에 부합하도록 외로움 관련 조사 항목을 세분화하여 보완하는 등 국가 간 정밀한 데이터 비교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할 것

(22)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개선 방안 마련(기관 공통)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국세청(지방국세청 포함)

(1) 의료법인 등의 유통구조 중간 업체를 통한 사익편취 통제 필요

의료법인에서 유통구조 중간에 간납업체를 끼워넣고 탈세 등 이익을 몰아주는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공익법인이나 비영리 의료법인들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포착하는 시스템, 내부거래가 공개되는 제도를 마련할 것

(2)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에 대해 업무구조 재구성 및 보안 위험 방지 등 필요

국세행정의 AI 대전환 관련하여, 단순한 서비스 제고 및 시스템 고도화를 넘어 국세행정의 업무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성·재설계하는 방향, 시스템 위험 방지를 위한 이중화·삼중화 방향, 정부 AI와의 연계를 위해 국세 데이터 개방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

AI 기반 세정으로의 대전환과 관련하여, 각종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체계의 철저한 구축 및 AI 모델 윤리성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고, AI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가 누락되지 않도록 구축되어야 하며,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장치도 마련되도록 효율성 외의 부분도 잘 고려할 것

AI 국세서비스에 대한 민원 사례로 오류 발생 시 일선 담당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호소가 있으니 직원들의 실제 응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3) 대전 관내 세무서 추가 신설 필요

대전광역시의 세무서 정원 1인당 납세 인원 등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납세자들의 방문 이동 시간도 길게 나타나고 있어 대전 관내에 세무서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4) 부동산 대책의 적정성 검토 필요

부동산가격의 상승 원인을 부동산 불법 투기라고 단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부동산정책은 과거 이미 실패한 방식이므로,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

부동산 대책에서 진흥이나 규제 해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 근본적인 설정부터 맞는 것인지 시장 반응을 보고 국세청에서 충분히 의견을 잘 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처할 것

(5) 미가공 식료품 부가세 면세제도 기준 명확화 필요

미가공 식료품 부가세 면세제도의 기준이 모호한데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6)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금융정보 수집 및 활용 필요

영장 없이 진행된 금융조회가 증가하고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받은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정보 수집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7) 재벌총수에 대한 과도한 보수 배분 대처 필요

재벌총수에 대한 문어발 보수지급으로 기업에 유보된 이익이 총수에게 과도한 보수로 배분되는 것에 대해 지배주주 사익편취의 불공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

(8) 영세사업자 국세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신속 집행 필요

영세사업자 국세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해서 25

년도 확정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의 다른 수수료 전가 등에 대한 보완책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

(9)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결정 건에 대한 엄정한 조치 필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편법증여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행위로 결정한 건에 대해 국세청에서 엄정한 조치 등 제대로 된 결과를 내도록 할 것

(10) 국세청 퇴직 세무사의 유튜브 등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

국세청 퇴직 세무사들이 유튜브 등에서 탈세를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으므로 광고 규제의 기준을 법률에 자세히 규정할 것

(11)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필요

물가와 임금이 오르면 고정된 과표구간에 따라 높은 세율의 세금 구간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있는데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통해 실질소득을 보호하고 물가상승의 세 부담을 완화할 것

(12) 독점 발렛파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세무행정 필요

발렛파킹 업체가 담당구역을 독점하고 건물주 및 업체로부터 수익을 얻으면서 100억대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 거래 등을 통해 탈세 가능성이 높아 실태 파악을 통해 적의 조치할 것

(13) 티몬, 위메프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 필요

티몬 및 위메프의 정산대금 미지급 피해사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하여 세정 지원을 강화할 것

(14) 유튜브 1인 미디어, 연애인 등 1인 기획사 탈세에 대한 조사 필요

유튜버 1인 미디어, 연애인 등이 1인 기획사를 통해 수익 창출하면서 탈세 소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과세할 것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간 세율차이를 이용하여 세금 이득을 보는 경우에 대해 해석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5)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 대응 필요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세금 탈루액이 급증하고 있어,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익명으로 사업을 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응할 것

(16) 가상자산 강제징수 개선 필요

탈세한 사람에 대한 가상자산 강제징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시장변동 및 가격 폭락을 이유로 강제징수를 유보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고, 강제징수한 가상자산의 매각 방안에 대해 전문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개인 전자지갑을 통한 가상자산 이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17) 과오납 환급에 대한 납세자 보호 및 신뢰 제고 등 개선 필요

불복,경정청구에 따른 과오납 환급 및 환급가산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 편의가 아니라 납세자 중심 세정으로 전환해 납세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선할 것

세금 불복이나 환급 등 과오납을 줄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8)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필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스템 화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위험 대응력을 높일 것

국세청의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률이 낮아 재난 발생 시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구축률을 높이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19)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필요

캄보디아 국제범죄 등에서 이루어진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방지나 2027년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등을 대비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

가상자산 과세 관련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금세탁, 불법적인 상속이나 증여 등의 거래내역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할 것

(20) 조세채권 우선변제제도 개선 검토 필요

조세채권 우선변제제도로 인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세채권 우선변제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것

(21) 부동산 계약해제를 통한 계약금 몰취 금액 등 탈세에 대한 관찰 관리 필요

부동산 계약해제 위약금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 신고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관리할 것

(22) 세금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보완책 필요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금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의 예산이나 조사 대상 표본이 너무 적어 예산 증액 요청 등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23) 각 세무서별 자체 규정 등에 대한 통제 필요

각 세무서별로 운영하는 자체 규정이나 내부 매뉴얼 등에 따른 세무조사 실시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각 세무서의 자체 재량권이 법률이나 시행령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것

(24) 납세자보호 기능의 외부기구화 검토 필요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내부조직인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외부 독립기구화, 위험평가시스템의 평가지표나 가중치 공개 등 투명한 세정을 실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5) 수입업체 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

수입기업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통관 단계에서 부가세를 내고 요건이 충족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의 절차가 복잡하여 중소기업 수입업체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므로 원클릭 환급 서비스 도입 등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26)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한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 검토를 판단하는 기준 명확화 필요

상표권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해, 상표권 사용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27)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사적 이용 통제 필요

법인 보유 주택을 사적인 용도로 편법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인의 주택 보유 현황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 시스템을 갖추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8) 국세행정 개혁TF 개혁안 이행 필요

과거 국세행정 개혁TF에서 마련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법제화’, ‘국세지방세 중복조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조사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 개혁안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이를 추진할 것

(29)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 폐지 검토 필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에 따른 선지급으로 인해 정산 자료 확정 시점에 환수금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환수가 발생하고 있어 반기지급제 폐지에 대해 검토할 것

(30) 월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홍보 강화, 신청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1)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당한 세금 징수 필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매출액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의 제도를 활용해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할 것

(32)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 승격 필요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인원, 세수 등에 따른 1인당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천지방국세청이 1급 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3)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과금 수납률 제고 대책 필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징계부가금도 크게 늘어났는데 수납률이 저조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34) 조세포탈 고발 등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

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과 검찰, 수사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5) 기준경비율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라이더 등 특정인적용역 업종의 경비율 하락으로 과세표준이 올라가 실질적인 증세가 되고 있으며, 유사 업종(가수,성악가)간에도 경비율의 편차가 심한 경우가 있는데, 보다 합리적인 경비율 산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설 심의위원회 운영,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정체계를 도입하여 신뢰도를 높일 것

(36) 국세청 사칭 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철저

국세청 사칭 사이버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국세청의 전자고지 서비스의 확산을 막고 있고, 향후 AI 세정 강화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위험성도 높아지는 만큼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대응하는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관리를 철저히 할 것

(37) 부가세 예납제 개선 필요

부가세 예납 후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액이 발생하는 등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 예납을 유예하는 등의 개선방향 검토할 것

(38) 세무서 증축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 등 검토 필요(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를 신증축하여 세무서 위에 청년임대주택을 올리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할 것

(39) 미등록 PG 단말기를 통한 세금 탈루 해결책 마련 필요

금융위에 미등록된 PG 단말기를 사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40) 서면질의 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등 실효성 개선 필요

어려운 세법에 대한 납세자권리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서면질의 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등의 평균 답변기간이 2024년의 경우 100일이 넘어가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1)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실효성 개선 필요

납세자보호위원회(납보위)에 대한 세무조사 권리보호 요청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납보위 관련 홍보 부족,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 미 실시 등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 확인 부족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심의 사례 공개도 본청의 납보위 심의사례뿐 아니라 지방청 등 사례도 공개하도록 할 것

(42) 가상자산 파생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 구축 필요

가상자산 금융(디파이)에 따라 경품 등 부수적으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과세 근거가 없어 사안별로 판단해 과세하고 불복소송을 통해 과세액이 감면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나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있어 디파이 파생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확실히 구축할 것

(43) 국세청의 NTIS 운영·유지관리 사업의 참가기준 변경 및 계약구조 변경에 대한 검토 필요

국세청 NTIS 운영·유지관리 사업의 '24-'25년 입찰공고에서 기존과 달리 '동일기업집단 내 지배·종속 관계 기업의 동시 참여 금지'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연도별 참가기준 변경의 이유가 특정 기업의 참여 제한 또는 참여 가능성을 위한 목적이 아닌지 보고할 것

국세청 NTIS 운영·유지관리 사업의 분리발주·장기계속계약 구조를 품질 관리와 일관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는 통합발주 및 운영 방

식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4) 외투기업 세무조사 대상 선정 논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코드를 잘못 입력해 수십개에 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외투기업이 국세청 상대 소송에 나설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할 것

(45)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 세액공제 활용 위한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시급

'23년 한시적으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하였으나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산출식 관련 기준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세액공제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세법해석을 통해 신속히 확정할 것

(46)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의 개선 필요

인공지능 AI 등을 활용해 근로장려금을 자동지급에 가깝게 변경하는 방안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나 인력 투입 축소 방안 등을 검토할 것

(47) 사회적 파급이 큰 사안에 대해 선제적인 세정지원 필요

홈플러스에 대한 잠재적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청산하는 경우 사회적 충격이 클 수 있어 국세청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의원실에 보고할 것

(48)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한 매각유예 등 세정지원 검토 필요

학자금 대출은 일반적인 대출이나 세금 탈루와는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강제징수 일변도보다는 압류나 매각 유예와 같은 세정지원을 검토할 것

(49) 정치적 세무조사 절대 필요

과거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 대통령 발언에 따른 세무조사 등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세무조사로부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50) 영세한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개선 필요

경기침체로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해 법의 허용범위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

(51) 국세청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방안 마련 필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전담 경비인력 배치,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 신설 등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2) 지역 특화 사업 활성화 위한 지방 국세청 역할 필요(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바이오 클러스터 및 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

(53)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확대 필요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확대하여 고가부동산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것

(54) 사문화된 입회 세무조사 제도 폐지 필요

과거 현금거래가 주류였던 시절에 필요했던 입회 세무조사 제도는 최근 10년간 집행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등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입회조사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할 것

(55) 군부대 판매물품에 대한 재판매 단속 필요

군부대에서 시중가액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물품을 일반인이 쉽게 구매하여 반복적으로 인터넷 판매를 하는 등 불법유통 및 부가가치세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

(56) 다국적기업의 스톡옵션 등 거래내역 미제출 시 제재 필요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이 국내 거주 임직원에게 국외 본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지급했을 경우 기업의 거래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할 수가 없어 제제 조치를 마련할 것

(57) AI를 활용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적발 방안 추진 필요

법인카드의 사적 목적 사용을 통한 탈세, 횡령 행위를 조사·적발하기 위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58) 국세청 민간위탁 콜센터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필요

국세청 민간위탁 콜센터 직원의 업무 관련성 있는 질병에 대한 유급병가 확대방안 마련, 위탁운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검토 등 처우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위탁용역비 과다청구 등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59) 과소부과액 최소화 및 사후 관리 시스템 필요

국세청이 세금을 적게 부과해 발생하는 과소 부과액이 매년 3천억원 안팎이고 과소 부과 이후 추가로 걷힌 세금의 징수 현황도 집계·관리되지 않고 있어 과소 부과를 줄이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60) 부동산 탈세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에 대해 적극적인 추징에 나설 것

전체 순자산 지니계수 불평등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순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불법 상속 증여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특히 외국인의 역외 탈세를 통한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해 명확한 추징 등 관리를 강화할 것

부동산 의심거래, 출처 불명 소득 발생 등에 대한 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과 단속을 통해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를 추적할 것

(61) 공무원 근로자 등 복지포인트 과세 필요

국가기관에서 공무원 근로자와 교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과세할 것

(62) 양도소득세 공제에 대한 통계 관리 필요

1가구 1주택자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 규모에 대한 통계를 관리할 것

(63)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근거 마련 필요 등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유예에 대한 사유별 통계를 관리할 것

(64)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 필요

세금 체납 등으로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후에도 서훈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해 개선하고,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실효성 검증’ 연

구용역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할 것

근로소득자가 모범납세자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간 형평성을 반영한 새로운 예우 체계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5) 군부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 조치 필요

국방부의 잘못된 용역 공고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용역업체가 잘못 인지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 기한 연장, 가산세 면제 등을 통해 업체에 발생하는 피해를 완화할 것

(66) 주택 감정평가 사업 예산 증액 필요

주택 감정평가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를 다시 증액하기 위해 노력할 것

(67) 바우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개선 필요

바우처 사업 중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중단할 것

(68)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성화 필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유인책 등을 개발할 것

(69) 주류 인터넷 판매 단속 강화 필요

조선 술 및 북한 술의 인터넷 판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 시 고발 조치할 것

(70) 체납액 탕감에 대한 검토 필요

소액 체납액 탕감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할 것

(71) 세무 플랫폼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세무 플랫폼 업체를 이용한 납세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

세무신고 플랫폼 이용으로 납세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은 플랫폼 업체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2) 기업의 기부금,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에 대한 점검 필요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

식자재 납품 기업이 납품단가를 인상하는 대신 기부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여 탈루에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식자재 납품기업에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할 것

(73) 고위공직자의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한 조사 필요

고위공직자의 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하여 자금출처 등에 대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

(74) 암표 거래 단속을 위한 협력 필요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암표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세청이 확보한 매출 정보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게 공유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75) GS그룹의 사익편취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

GS그룹은 해외 자회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사익편취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므로 국세청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할 것

(7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이 국내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영리활동을 한 사항과 관련하여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해야 하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불법 영리활동 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것

(77) 국세청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국세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우수한 인력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업무강도가 높은 현장에서 국세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하급직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8) 세목별 조세환급금에 대한 통계 관리 필요

세목별 조세환급금에 대한 통계를 관리할 것

(79) 생계형 체납에 대한 지원 필요

소상공인 폐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소멸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생계형 체납에 대해 상담, 복지, 채무조정 등 연계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자금 체납은 한국장학재단 등과 협력해 탄력적 상환제 등을 검토하여 학자금 대출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

(80) 수도권 청년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필요

수도권 청년 창업자는 비수도권 청년 창업자에 비해 세액감면율이 낮은데,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창업분야에 대해서는 수도권 청년 창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을 확대할 것

(81)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관리 필요

게임 아이템 거래시장에 대한 업종코드를 마련하고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할 것

(82) 세무조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감찰 필요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한 전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철저하게 감찰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철저하게 할 것

(83) 고위직 공무원의 해임 무효소송에 대한 대응 필요

고위직 공무원의 해임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재심신청과 복직 이후의 급여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방안 등을 검토할 것

(84) 가족 신탁회사를 활용한 탈세에 대한 대응 필요

가족 신탁회사를 활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탈세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법 개정 및 자료 수집 범위에 신탁원부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

(85) 역외 탈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MBK, 블루런벤처스 등 기업의 역외탈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가 급증하고 있고 변호사 등 전문가 조력을 통해 탈세 구조를 설계한다는 분석에 대응하여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역외탈세 세무조력인 제재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86) 국세청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 필요

대형 로펌과의 조세불복소송에서 국세청이 승소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여기에는 국세청 출신 전관들의 영향력도 크다고 보이지만 현재 운영되는 사적이해관계 신고제도로는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세청 퇴직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할 것

국세청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 및 이해충돌방지심의위원회 내실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세무사 자격이 있는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대형로펌의 위성 세무법인에 취업한 후, 대형로펌에 영입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

(87)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공동 대응방안 마련 필요

국세와 관세를 모두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88) 미술품 거래 시장 투명화 등 필요

미술품 임대 형식을 빌린 변칙적 탈세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미술품 거래 시장을 투명화하고 과세를 현실화할 것

(89) 공정한 세무조사 필요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AI 분석 시스템 확충 등을 추진하고, 고위험기업에 대해서만 정밀조사하고 성실납세 기업은 신속하게 서면 검증 등으로 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방식을 전환하며, 구체적인 현장조사 기준과 매뉴얼을 공개할 것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조사 담당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

(90) 공정하고 균등한 인사관리 필요

국세청 고위직공무원 중 비고시 출신이 매우 적고 여성 비율은 더 적어 비고시 출신이나 여성들에게도 더많은 기회를 부여할 것

사무관·서기관 승진 및 핵심 보직 인사가 특정대학 출신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사를 개선할 것

(91) 체납 관련 개선 필요

체납 누계가 100조가 넘어가는 수준이므로 체납징수 우수자에 대한 특별 승진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체납업무 직원에 대한 법적,경제적 지원제도를 만드는 등 전면전을 통해 상습 체납, 탈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

국세정리보류 금액이 91조를 넘고 2021년부터 매년 2조원 안팎의 체납 세금이 소멸시효 완료로 사라지고 있는데, 납세의식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세청이 체납관리, 세금징수시스템 문제 등을 점검할 것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고 징수율 또한 떨어지는 등 체납징수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혁신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탈세 제보 포상금제도, 예산 성과급 인센티브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하도록 할 것

현재 운영되는 상습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에 대한 효과성 분석자료 또는 그에 대한 연구과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출할 것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액 증가, 고액 상습체납자 감치 제도의 낮

은 실효성, 국세채납관리단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홈페이지상 채납자 공개명단에서 나이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방안을 비롯하여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

(9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대책 마련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한 역외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3) 외국인 채납에 대한 관리 강화

외국인 채납에 대해 국적별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사업자 부가세 관리 점검 체계를 개선하며, 외국인 채납자에 대한 추적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채납자 행정제재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94)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를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상속증여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95) 채납관리단 문제 개선 필요

채납관리관 운영에 있어서 자료제출 요청, 질문 권한 등에 불법적인 부분이 없도록 하고 목적이 채납징수인지 어려운 형편의 채납자 정리인지 확실하게 정리해서 실시할 것

채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2000명이 1인당 666만명의 채납자를 상대하게

되는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 검증 절차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채납관리단 신설과 관련하여, 조사원에 대한 권한 부여 범위, 조사방식, 영세사업자 채납액 소멸제도와 연계 등의 보완과제를 검토할 것

채납관리단과 같은 임시조직이 아닌 인력·예산 확충을 통해 징세조직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96) 스프레드 업체에 대한 관리 개선 필요

스프레드 업체에 대한 세무 목적상 별도의 관리코드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스프레드 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것

(97) 정보보안 개선방안 마련 필요

무선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도입과 도청 보안 누수 지점 보강 계획을 검토하고 보고할 것

(98)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한 부가세 감면 필요

백혈병 및 림프종 치료제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것

(99) 공평한 과세 필요

고소득 사업자와 전문직의 탈세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지 않고 확장재정을 위한 세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철저한 과세를 추진할 것

(100) 무분별한 계좌 일괄조회 남용 지양 필요

무영장 계좌조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세무조사의 효율

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써 그 활용 빈도가 급증하고 있지만, 상속·증여세 추정세액 성과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평가 체계 정비를 마련할 것

국세청은 개별조회 중심의 엄격한 통제 하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계좌 일괄조회를 지양할 것

(101) 세무조사 개선 필요

국세청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세무조사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 사후모니터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하며, 세무조사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감시할 것

(102) 징세역량 강화 필요

징세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의 조사인력 비중을 축소하고, 징세인력 비중을 높일 것

각 부처에 분산된 징수업무를 국세청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3) 임대주택사업자 관련 소급추징 유예 및 대책 마련 필요

중부세 합산배제 제도 변경에 따라 주택건설임대업자에 대한 합산배제 혜택 제외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

임대주택 사업자 중 주택임대업 코드 기입 오류로 인해 과거 중부세 합산배제를 인정받아왔으나 현재 소급추징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소급추징을 유예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104) 체납후 납세자에 대한 기록 삭제 검토 필요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하를 체납했다가 세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신용평가회사 기록 삭제를 검토할 것

(105) 비거주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비거주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106) 사후적 감정평가 요구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필요

국세청 감정평가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기준시가로 성실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를 요구하거나 세액을 재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107)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개선

비상장주식에 대한 복잡한 평가방식이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실무 어려움을 청취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실질적 대안을 검토할 것

(108) 고충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민원조정위원회는 국민의 고충을 조정하고 제도개선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나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민원인이 직접 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9) 지역간 형평성있는 세금신고 지원사업 위탁인력 배치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위탁인력의 배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가 큰 상황으로 지역 납세자 누구나 동등하게 세무행정의 도움을 받

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110) 세무조사 착수사유 세분화 관리

비정기조사 착수사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따라 구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11) 북대전 세수규모 고려한 세무서 신설 추진(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북대전의 세수 규모가 매우 큰 상황으로 세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세무서 신설을 추진할 것

(112) 세무서비스 품질 개선(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최근 23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지적 받음. 세무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세무서비스의 관리나 품질 등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을 강구할 것

(113) 허위 광고·표시 세무사 조치(대전지방국세청)

지방국세청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명한 특정 세무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엄정히 조치할 것

(11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행정(대전지방국세청)

지역 특성을 살리는 창업 기업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나 대전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행정을 강구 할 것

(115) 체계적인 정보 제공 등 세정행정 구현(대전지방국세청)

연금수령 고령층이 공공일자리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 소득세 합산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장부 작성, 관련 증빙 서류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국세청은 납세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세정행정을 구현할 것

(116) 국세채납관리단 운영 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채납관리단이 실제로 운영될 경우 납세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 실태조사원들의 안전문제 등을 잘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117) 벌떼 입찰 건설업체 세무조사 실시 여부 은폐 관련(광주지방국세청)

건설업체의 벌떼 입찰 사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통해 특정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숨긴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

(118) 체계적인 정보 제공 등 세정행정 구현(광주지방국세청)

연금수령 고령층이 공공일자리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 소득세 합산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장부 작성, 관련 증빙 서류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국세청은 납세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세정행정을 구현할 것

(119) 국세채납관리단 운영 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광주지방국세청)

국세 채납관리단이 실제로 운영될 경우 납세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

함, 실태조사원들의 안전문제 등을 잘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120) 체납액징수특례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광주지방국세청)

영세·소상공인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국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세심한 징수 행정의 필요하고, 관련하여 체납액징수특례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121) 소송 역량 강화(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의 과오납환급금의 규모가 매우 큼. 무리한 징세를 지양하고, 정당한 과세에 대하여는 대형로펌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역량을 강화할 것

(122) 전통주 홍보 등 지원(대구지방국세청)

우리나라 전통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홍보 등 지원 노력을 기울일 것

(123)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안내(대구지방국세청)

대학생 학자금 상환 체납액과 체납 건수에 있어 대구가 높음. 청년들에게 상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

(124) 전략산업 중심 세정지원 실시(대구지방국세청)

청년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거나 대구의 미래를 이끌고 갈 전략산업 중심 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경제적 파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125) 자료상 근절 대책 마련(대구지방국세청)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발급하는 자료상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126) 세정지원 홍보 강화(부산지방국세청)

진주·마산·거창 세무서에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운용하였으나 재해손실 세액공제 실적은 1건에 불과함. 이는 홍보 부족에 그 원인이 있어 보이는데 향후 관련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

(127)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책 강구(부산지방국세청)

경남 지역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므로 이들 수출기업들에 대한 실효적인 세정지원 등 대책을 강구할 것

(128) 체납액징수특례 제도에 대한 홍보 등 강화(부산지방국세청)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영세 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의 요건을 합리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홍보를 강화할 것

(129) 신고포상금 실효성 강화(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은 포상금 지급률이 약 3% 수준임.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세정 투명성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할 것

(130)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홍보 강화(부산지방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의 홍보 부족으로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격차로 인해 고령자 등 일부 소상공인은 온라인 상담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마련할 것

4. 관세청(부산본부세관 등 포함)

(1)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적극적 대응 필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세관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 결백 입증, 허위 주장에 대한 고발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2) 캄보디아발 마약 밀반입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캄보디아발 마약 등 불법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양국간 공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험화물을 분석하며 승객 사전검증 시스템(APIS)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3) 마약류 및 총포류 등 위험물 밀반입에 대한 대책 마련

단속장비 및 인원 확충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며, 특송업체와 택배업체 간 배송정보가 바뀔 경우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전송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입국 시 간이통관 문제, 우회 입국 문제, 관련 부처 간 정보 공유 문제 등 시스템을 보완하고 AI 접목을 통해 단속 적중률을 높이는 등 통관 사각지대를 차단할 것

(4) 불법 의약품 반입 차단을 위한 공동대응센터 가동

불법 의약품 반입 차단을 위하여 관계부처 간 공동대응센터를 가동하고 해외 플랫폼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5) 해외 마약류 밀수출 단속 강화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되는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범 화물 유형에 대한 성분분석표 강화, 마약 관련 기관 공조를 통한 세관별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 수출 통관의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

(6) 개인 사용 목적 불법 무선통신기기 반입에 대한 대안 마련

개인 사용 목적 불법 무선통신기기는 요건 확인이 면제되므로 국내 상황과 요건에 맞춘 적극적인 후속조치 및 대안을 마련할 것

(7) 통관시스템 고도화

딥러닝을 통한 AI 기반 영상 인식 역량 제고, SNS 및 해외직구 플랫폼 거래정보 연동 등 통관시스템을 고도화할 것

(8) 무선백도어 등 신종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

무선백도어 등 신종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할 것

(9) 자가사용물품 면세제도 악용사례 개선

구매대행 업체 등이 자가사용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영업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가격을 과소신고하여 관부가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를 추진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10) 보세운송 관리감독 강화

보세운송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1)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회수출 관련 피해규모 및 산업별 영향에 대한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자료 관리,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 개선, 처벌 강화, 법령 개정, 원산지 검증 인력 확충, 적출국·목적국 품목별 통계 관리, FTA 및 원산지표시 규정 준수 안내 및 지원 강화, 국내 적발 기업·품목의 공표방안 검토, 시중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정보와 수출입신고 데이터 간 연계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

(12)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적발 이후 판매 사이트 차단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식재산처 및 플랫폼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전담인력을 충원할 것

(13) 관세 관련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조사인력 부족 해소 및 세수 누락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가 세액 정확성을 검증하고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국세청과 협의하여 도입할 것

(14) 중국 원자재 수출 통제에 대한 대안 마련

중국 정부의 원자재 수출 통제 문제로 인한 우리나라 수입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것

(15) 미국 CBP 사전심사 지원사업 예산 확보

미국 CBP 사전심사 지원사업과 산업통상부의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 지원사업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

(16) 세관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체인력 관련 예산 편성

세관 직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현장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17) 법적책임 등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여 AI 통관시스템 도입

AI 통관시스템 오류 발생 시 법적책임 소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여 AI 통관을 도입할 것

(18) 수입물품 개장검사 확대

중국산 위조 완구류 등에 대한 개장 검사 수량을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하며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

(19) 사전구매 검사 예산 증액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하여 사전구매 검사 예산을 증액할 것

(20) 수입품 안정성 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부처간 칸막이 해소

수입품 안정성 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관세청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 부처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공유를 원활히 할 것

(21) 카지노 환전업체 불법환전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다수의 카지노 환전업체에서 환전 거래내역 거짓 작성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으나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과소하므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22)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방지를 위하여 국적별 환급액 집계 등 시스템을 개선할 것

(23) 귀책사유 없는 경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면제, 인센티브 부여

관리대상화물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는 경우 화주가 검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하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더라도 협력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24) 도청 보안체계 수립

도청 보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효적인 보안체계를 수립할 것

(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취소 관련 양벌규정 개선

관세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제도에서 범규 위반 업체 대부분이 양벌규정 예외 조항으로 인해 공인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6) 해외통관 애로 해소 및 지원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수출기업에 대한 외국세관의 자의적 특혜세율 배제 및 통관 지연 문제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해외통관 애로 해소 및 지원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27) 상근 국선관세사 제도 도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근 국선관세사 제도를 도입할 것

(28) X-Ray 판독인력 증원

X-Ray 판독인력을 증원할 것

(29) 국경 넘는 환경범죄 단속 강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경 통과 단계에서부터 환경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

(30) 과태료 수납실적 저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과태료 수납실적이 저조하므로 관세청·기획재정부·법무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법률 개정, 제도 정비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1) 체화물품과 압수물품의 적극적인 매각을 위한 제도 정비

체화물품과 압수물품의 적극적인 매각을 위해 제도를 정비할 것

(32) 압수물품 보관업무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치

압수물품 보관업무를 관세청의 전관단체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몰아주고 있으므로 유착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33) 관세청의 통상환경 변화 대응활동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관세청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고 통상환경 변화 및 안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34) 타인의 여권사진을 통한 면세품 구매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타인의 여권사진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현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35) 면세사업자 허가기준 계량화 등 제도 개선

면세사업자 허가기준 중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계량화하고 법규 미준수 시 과락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

(36) 역사열 시 면세한도 내 구입물품 반납의무 면제 등 제도 개선

역사열 시 면세한도 내 구매 물품에 대한 반납 의무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37) 입국장 인도장의 공항 확대 정책 폐기

공항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입국장 인도장의 공항 확대 정책을 폐기할 것

(38) 가상자산 등 불법 외국환거래에 대한 대안 마련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 탈세 등을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확대, 분석 고도화, 규율체계 및 적발 시스템 구비, 추적프로그램 확대·보급, 검·경과의 공조체계 정비 등 대안을 마련할 것

(39) 가상자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수사권 확보

가상자산 불법거래와 환치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행위 수사권 확보를 포함한 입법 필요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

(40) 세관별 인력 재배치 및 분담 등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세관별 폐기업무 물량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업무 과중 완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 및 효율적 분담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1) 격무·기피업무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격무·기피업무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보상체계 및 지원방안을 강화할 것

(42) 기관 청렴도 제고, 전관예우 근절 등 조직 혁신

기관 청렴도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중 최하위이고, 관세청 출신 퇴직자가 한국면세점협회 임원을 독점하는 등 전관예우가 팽배하므로 조직 혁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43) 6급 정원 축소 및 5급 이상 정원 확대

국가 통상역량 강화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6급 정원을 줄이고 5급 이상 정원을 동일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계급구조를 개편할 것

(44)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른 특사경 제도 보완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른 특사경 수사인력에 대한 재구성 과정 및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 협업 과정에 대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세청 특사경 지휘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45) 미국의 원산지 관련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필요 등

우리나라를 경유한 중국산 물품의 우회 수출 증가에 대비해 미국의 규제 정보에 대한 표준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단일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미국과의 정례 협의체를 만드는 등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

미국 관세청의 품목분류, 원산지판정 등과 관련된 정성적 판단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원산지정보원과 협업을 강화하고 예산 및 인력 계획을 보고할 것

(46)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원산지 세탁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원산지 세탁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을 검토할 것

(47) 비비탄총 개조용품 등의 반입 차단 필요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완구용으로 들어오는 비비탄총 개조용 부품과 규격 외 비비탄, 총기부품의 반입을 세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

(48) 북한 술 반입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필요

북한 술 반입이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조

치할 것

(49) 외국인 관광객 국적별 텍스 리펀드 현황 파악 필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국적별 텍스 리펀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

(50) 수사·조사 관련 기본 소양교육의 철저한 실시 필요 등

세관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수사·조사와 관련된 기본 소양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조사 시 영상녹화가 허용된다는 사실을 피조사자에게 고지할 것

(51) 마약 반입 방지를 위한 인력의 증원 필요 등

마약 반입 방지를 위한 자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특송 및 여행자 통관 인력을 확충하고,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마약폭발물탐지기·X-ray 동시구현시스템·수중드론 등 필수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

(52) 자가사용물품 해외직구 면세제도 관련 제도개선 필요

상업용 구매를 목적으로 자가사용물품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해 개인이 대량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문제점에 대해 누적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3) 관세 체납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관세 체납액 징수를 민간인이 수행하도록 하기보다는 관세청의 체납 징수 기능을 국세청에게 맡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54)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공동 대응방안 마련 필요

국세와 관세를 모두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

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55) 역사열 관련 제도개선 필요

비자발적 출국 취소자에 대해서 면세 한도 내에서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56)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필요

관세청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이 미진한 점을 고려하여 재해복구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것

(57) 유니패스 시스템 개선 필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능 추가, BL 번호를 통한 수출관련 정보 접근 개선, 수리 전 단계의 제공 정보 세분화 등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을 개선할 것

(58) 입국장 면세점 운영 개선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의 복수 운영사 도입의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해 보고할 것

(59) 체납관리단 문제 개선 필요

체납관리단과 같은 임시조직이 아닌 인력·예산 확충을 통해 징세조직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60) 부산항의 마약 밀반입 방지 필요

외국 정보기관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산항의 마약 밀반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61) 정보보안 개선방안 마련 필요

무선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도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형 탐지 장비 구축 계획을 보고할 것

(62)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한 관세 감면 필요

백혈병 및 림프종 치료제의 관세 면제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것

(63)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필요

면세사업자 특허심사 시 사업자의 관세법 위반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비계량평가 중심 구조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할 것

(64) 역직구 활성화 필요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관세청 차원의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65) 수사장비 노후화 문제 개선 필요

관세청 수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추가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장비의 구매 및 교체를 이력화하여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

(66)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상생방안 마련 필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신속한 협의채널 구축 등 K-면세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신속하게 착수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

(67) 개인통관고유번호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개인통관고유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갱신하는 제도를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

(68) 마약 문제 대응을 위한 AI 기반 시스템 구축 필요

청소년 마약문제 대응을 위해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할 것

(69) 인천항만 X-RAY 판독원 증원 필요

인천항만 통관 과부하 문제가 심각하므로 X-RAY 판독원을 증원할 것

(70) 입국장 면세점 경쟁체제 도입 필요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

(71) 위해물품 밀반입 방지 대책 필요(부산본부세관)

마약, 총기 등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화된 검색 장비의 개선 및 관련 첨단장비 도입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것

(72) 수출기업 지원대책 필요(부산본부세관)

경남 지역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이들 수출기업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

(73) 위해물품 밀반입 방지 대책 필요(대구본부세관)

마약, 총기 등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 탐지견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후화된 장비의 개선 및 관련 첨단장비 도입 등 계획을 수립할 것

미흡한 장비, 인력에 대하여는 현황을 파악하여 본청,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관련 장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4) 위해물품 밀반입 방지 대책 필요(광주본부세관)

마약, 총기 등 위해물품을 X-ray 관독 등 모니터링 하는 직원의 1인당 업무량이 과다하여 적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인력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것

항공 노선이 급증하면서 잠재적인 마약 반입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나, 관련 단속 장비와 인력은 현저히 미흡한 상황이므로 보완할 것

군산세관을 통한 총포류 적발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본청과 협력하여 불법 총포류 무기류 단속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군산 특송물류센터의 통관 물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관은 X-ray 관독 인력 확충 및 장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불법 물품의 통관 차단 역량을 강화할 것

(75) 지정면세점 활성화 방안 필요(광주본부세관)

제주도 방문 여행객들과 제주 지역사회를 위해 지정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6) 새만금 신항 개장 관련 준비 필요(광주본부세관)

새만금 신항 개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고, 물류, 관광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므로 추후 준비 미흡으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77) 수출기업 지원대책 필요(광주본부세관)

영세한 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통관, 물류, 인증, 마케팅 등 여러 측면에서 초기 진입장벽이 높으나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의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78) 불법 외국환거래 근절 필요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불법 외국환거래에 대해 실질적 단속과 과태료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 조달청

(1) 조달물자 품질 관리 및 비축 제도 실효성 제고

철도차량 납품 지연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신용평가 이원적 인정 체계 및 등급 격차 등 제도의 허점을 개선할 것

마스크 폐기 물량 발생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전략물자 비축을 위한 민간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업참여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강구할 것

(2) 혁신제품 공공구매 이행력 및 판로 지원 강화

혁신제품 지정 이후의 구매 실적 저조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 이행력을 높이고 구체적인 판로 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것

(3) 입찰 검증 체계 강화 및 계약 정보 공개 투명성 확보

허위 시험성적서 및 페이퍼컴퍼니 비리 차단을 위해 우수제품 지정 등 주요 절차에 조달청 주도의 직접 샘플링 점검과 현장실사를 필수 도입할 것

평가위원단 Pool을 대폭 확대하여 개별 평가 참여 인원을 증대하며, 평가위원의 공무원 의제 등 처벌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특정 종교 단체 및 사이버 종교 연루 기업 등 반사회적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

나라장터 내 계약 정보 누락 등 시스템 오류를 시정하고, 국립대 축제 용역 등 자체 조달 계약에 대한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4)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확보 및 조달 브로커 근절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계약법령을 개정하고, 제재 중인 업체와의 신규 계약 체결을 제한할 것

대규모 국고 손실을 초래한 비리 업체에 대하여 손해 규모에 비례하여 입찰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징벌적 제재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실적 제고를 위해 문서 검증을 확대하고, 부당이득 취득 자체를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로 명시할 것

나라장터 시스템을 악용하는 조달 브로커 근절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것

(5) 산업현장 안전 중심의 조달 평가 및 관리 체계 개선

고용노동부의 산재 현황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받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감점 및 참가 제한 등 페널티를 강화할 것

1인 사망 사고나 반복적 사고 발생 시에도 엄격한 입·낙찰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안전관리공정 포함형 특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제도 및 AI 기반 스마트 신고 체계 등 안전 관련 시스템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6) 입찰 담합 방지 및 불공정 행위 조사권 강화

LH로부터 이관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브로커 개입 및 동가 입찰 등 부정 의혹을 차단할 수 있는 담합 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것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낙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연계 시스템을 확립할 것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사권 부여 및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협력할 것

(7) 조달 가격 검증 시스템 고도화 및 계약 조건 현실화

다수공급자계약(MAS) 운영 시 조달청의 과도한 가격 개입은 지양하되,
가격 검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시장 자율성을 존중할 것

외국산 제품의 국산 위조(표지갈이) 차단을 위해 관세청 수입 정보와 조
달 정보를 연계한 상시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구축할 것

물품제조계약에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설
계 및 계약 변경 정보 제공 체계를 투명화할 것

태양광 시설 제재 관련 패소 원인을 분석하여 직접생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항소를 지양하며 실질적인 계약 이행 관리 체계를 정비
할 것

군 방상내피 납품 지연 및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계약 등 특정 품목의
납품 불이행 대응 및 단가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

(8) 정보기술 자원 다변화 및 개방형 사무 환경 구축

ARM 기반 서버 등 다양한 아키텍처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을 지원하여
특정 서버 방식(x86)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

나라장터 공고는 AI와 호환성이 낮은 HWP 문서로 편중되어 있어 데이

터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AI인식이 가능한 형태의 문서 도입을 확대하고 관련 조달 기준을 정비할 것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 공사 실적 제한 경쟁 등 안전 중심의 기술 평가 방식을 적용할 것

(9) 조달청 조직 운영 효율화 및 정보 보안 강화

대전지방청 등 도심지에 위치한 지방청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무선백도어 해킹 등 신종 보안 위협에 대응하여 실시간 탐지 및 하드웨어 보안 검증을 포함한 통합적인 보안 대책을 수립할 것

(10) 중소기업 대금 지급 신속화 및 해외 진출 지원 내실화

조달 대금 지급 프로세스 자동화 등으로 대금 지급 지연을 해소하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DR)을 구축할 것

G-PASS 제도가 입찰 가점용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실적 부재 기업에 대한 전수점검 및 지정 취소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6. 한국은행

(1) 통화정책 독립적 운용

재정적자 확대와 유동성 증가가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 우위에 눌리지 않는 중앙은행의 독립적이고 엄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채무 급증 위험에 대응하여 정부와 협의를 지속할 것

(2) 거시경제 변수 및 재정정책을 고려한 금리 결정

기준금리 결정 시 부동산 가격, 성장률, 환율, 관세협상 등 대내외 여건 및 거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

세수 결손 등 재정 여건에 대응해 재정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

물가안정이라는 핵심 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성장, 금융안정 등 제반 경제 지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

(3) 금융안정을 고려한 기준금리 운용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보다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여, 금리 조정 시 시기와 속도를 신중히 검토하고 금융안정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통화정책의 부동산 가격 영향력을 인지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유동성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 피해 없는 부동산 안정을 도모할 것

(4) 유동성 관리 실효성 제고 및 부작용 대국민 공표

확장적 재정정책이 유동성(M2)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자산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자산 및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대국민 설명을 강화할 것

○

(5) 원화가치 관리 방안 모색 및 단기 유동성 조달 방식 개선

원화 가치 하락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금리 조정 외에도 통화량 및 유동성 관리 등 원화가치 관리를 위한 통화정책 운영방안의 개선을 검토할 것

세수 결손에 따른 기재부의 한은 일시대출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증권 발행 확대 등 근본적인 단기 유동성 조달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

(6) 증시 안정판 확보 및 해외 정책 수단 활용

일본은행의 ETF 직매입 사례를 연구하여 증시 안정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NGFS(녹색금융협의체)가 제시한 대출·담보제도 등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

(7) 생활물가 안정 및 체감 물가 지표 현실화

식료품·주거비 등 필수재 중심의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고환율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분의 소비자 전가 과정을 정밀 분석할 것

CPI와 국민 체감 물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데이터처의 보조 지표 개발에 협력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 등 고물가 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기여할 것

(8) 현금 사용권 보장 및 화폐 유통 인프라 정비

현금 결제 거부 실태 파악을 통한 현금 사용 선택권 법제화와 ATM 접근성 격차 해소에 나서는 한편, 화폐 제조·유통 인프라를 공공재 차원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정비할 것

(9) 일시대출 제도 및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금융 대책 마련

일시대출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인위적인 금리 조정이 아닌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정교한 금융 복지 대책을 수립할 것

(10) 장기 저성장 리스크 점검 및 성장잠재력 강화 방안 마련

일본화지수 등 장기 저성장 리스크 점검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공급 기반 확충 등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정책 연구를 추진할 것

(11) 경제 전망 정확도 제고 및 통계 적시성 확보

고빈도 자료와 최신 예측 모형을 활용해 경제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ECOS 통계의 정합성 확보 및 통화지표 공표 시차를 단축할 것

(12) 국채 직접 인수 규정 정비 및 구조 개혁 추진

사문화된 국채 직접 인수 규정 삭제를 검토하며, 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제언을 강화할 것

(13) 노동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책 연구 강화

주 4.5일제, 정년 연장, AI 기술 확산 등 노동 환경 변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비하여 정책 연구를 강화할 것

(14) 국가 경쟁력 회복 및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

불평등 해소 및 근로 환경 점검으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며, 혁신기술 촉진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중앙은행 차원의 정책 연구와 금융 제언을 강화할 것

(15) 원화 디커플링 분석 및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지속에 따른 경제 위기 가능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글로벌 달러 약세(달러 인덱스 하락)와 역행하는 원화의 디커플링 현상을 정밀 분석하여 적극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

(16) 외환보유액 확충 및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 재점검

GDP 대비 낮은 외환보유고 비중(22%)을 전면 재점검하여 대외 위기 대응을 위한 확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유가증권에 편중된 자산 구성을 개선하여 안정성·유동성·수익성 간 균형을 유지할 것

(17) 금 보유 비중의 전향적 확대 및 운용 투명성 확보

주요국 중앙은행 수준으로 금 보유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자산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보관 비용 및 유사시 현금화 방안 등 자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세 자료를 마련할 것

(18)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확보 및 국채 시장 인프라 선진화

WGBI 편입 등에 따른 인프라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2년 미만 단기 국채 도입에 관하여 기재부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

(19) 한국은행의 재정 독립성 및 비상시 정책 투명성 강화

헌법 파괴적 상황에서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비상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사후 평가로 정책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립적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부 정책의 위험성을 점검하며 국익을 위한 정책 제언을 지속할 것

(20)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및 비율 하향 안정화 추진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대출 규제 강화 과정에서 서민·청년층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맞

충형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고, 과거 디레버리징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부채 의존적 정책 탈피 및 정책금융 운용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

(21) 부동산 PF 리스크 차단 및 주택 공급 안정 시그널 제공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한 전 금융원의 부동산 PF 리스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체계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정부에 조언할 것

인허가 및 착공 실적 급감에 대응하여 시장에 확실한 공급 안정 시그널을 제공하고,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조화롭게 추진할 것

(22)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 및 정책금융 기조 재검토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리 인하 기대가 부동산 과열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지속할 것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책금융 운용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추진할 것

(23) 실수요자 보호 및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안정 도모

부동산 규제가 노동 부자를 역차별하거나 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차단하지 않도록 현실적 격차를 반영한 정교한 맞춤형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전세대출 DSR 산입 등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되, 교육 격차 및 입시제도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을 협력하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10년 이상의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

(24) 역머니무브 완화 및 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시장 안정화

주식시장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역머니무브 현상을 완화하여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인위적 개입 대신 경제 원리와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안정화 대책을 모색할 것

중립적인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부 정책의 위험성을 점검하며 정책 제언을 지속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에 기여할 것

(25)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자 수익 악용 방지 및 인센티브 개선

저리 자금이 은행의 이자 수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출 금리 실적을 배정 기준에 반영하여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고, 수혜 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금리 인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26) 지역 금융지원 현실화 및 자산 불평등 구조 개혁 연구

지역별 경제 비중 등을 반영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영을 현실화하고,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양극화 점검 및 청년층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조 개혁에 기여할 것

(27) 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실효성 제고

영세 중소기업·취약계층 금융 지원과 필수 생활물가 분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대출비율준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유인을 높이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

(28) CBDC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전략과 관리 체계 구축

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전략을 구체화하고, 한국은행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법적·규제적 충돌 방지 및 통합 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

CBDC의 공공 부문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의 외환 규제 우회 등 리스크를 차단하고 환율 안정 및 금융 혁신을 위한 최적의 발행 모델을 도출할 것

(29) 지역본부 위상 재정립 및 맞춤형 지역 금융 지원 강화

일부 지역본부 명칭을 행정구역 및 경제활동 단위에 맞춰 위상을 재정립하고, 대출 한도 상향 및 금리 인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적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

(30)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특화 산업 구조 개혁 추진

수도권 유입 분산을 위한 교육·입시제도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을 협력하고, AI 전환·기후위기 대응 등 권역별 신산업 육성과 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주도할 것

(31) 권역별 주요 현안 대응 및 현장 밀착형 모니터링 강화

APEC 금융 지원, 부산 금융 중심지 육성 등 지역별 상생 모델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제고하고, 부동산 리스크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정책 제언을 지속할 것

(32)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수도권·비수도권간 양극화 완화, 지방재정 확충, 지역별 특화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지방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강화할 것

지역거점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으

므로, 이를 거점으로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구축에 일조하여 지역 경제의 혁신 동력을 확보에 기여할 것

(33) 내수 활성화 효과 분석 및 지역 수출기업 전문 지원

소비쿠폰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대외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여 지역 수출기업 지원과 지역별 특화산업 생태계 조성 등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를 강화할 것

(34) 사이버 보안 인프라 확충 및 보안 운영 체계 점검

AI·클라우드 환경 대응을 위한 보안 예산과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외주 보안 인력의 지휘 체계 점검을 통해 불법 파견 소지를 해소하며 조직 내 보안 운영의 적정성을 기할 것

(35) 조직 문화 혁신 및 불합리한 행정 관행 시정

4급 이상 직급 격차 분석을 통한 여성 임용 확대와 자체 감사 활동 내실화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임금 원천공제 관행을 시정하여 자율적 가입 체계로 전환할 것

(36) 금융통화위원회 의사결정 투명성 및 다양성 강화

대외 경제 현안 보고를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도입 검토 등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추천 절차 개선과 발언 실명제 검토 등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37) 기후 리스크 선제적 관리 및 녹색금융 지원 체계 고도화

기후변화의 물리적·이행 리스크를 통화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요국 수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금융중개지원대출 내 녹색금융 비중 확대 및 적격담보 우대 등 실효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38) 중앙은행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견제 기능 수행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외환보유액의 특정국 편중 리스크를 정밀 분석하고, 정부의 무모한 정책에 대해 중앙은행으로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

(39)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 재설계

금융안정협의체를 제도화하여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실무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감독 체계를 전면 재설계할 것

(40) 결제 인프라 글로벌화 및 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

거액결제시스템 운영 시간을 20시로 연장하는 등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진입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41) 중앙은행 발권력 수호 및 화폐 정보 투명성 공표

예술형 주화 등 발권력 침해 시도에 엄정 대응하여 기념주화 발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관봉권 정보 한계를 공표하여 자금 출처 추적 관련 가짜뉴스 확산을 차단할 것

(42) 수출입은행 출자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

수출입은행 출자 공적자금의 실효성 있는 상환 대책을 마련하여 회수율을 높일 것

7. 한국수출입은행

(1)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이행보증 발급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웨스팅하우스 이행보증 발급 시 위험성 검토가 부실하고 서면 결의로 처리되는 등 절차적 미비점이 확인된바, 향후 대규모 보증 시 자료 완결성 확보 및 대면 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할 것

한국수출입은행의 웨스팅하우스 이행보증 발급 과정에서 리스크 평가 등이 철저히 진행되었는지 규명할 것

(2) 히든챔피언 기업 제도 개선 필요

히든챔피언 기업이 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경우 대상 기업이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② 기존 고객사 위주의 히든챔피언 선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개 공고를 통해 히든챔피언을 선정하며, ③ 2023년 제도 개정 당시 부칙을 재검토하여 불공정을 해소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의 히든챔피언 취소가 지연되어 불공정 기업이 우대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특별계정 유지 필요성 검토 필요

2019년 고위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계정의 승인 실적이 2025년 8월까지 5건에 불과하고, 승인 사업들의 후속 사업 연계 또한 미흡하므로, 특별계정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특혜성 만기 연장 방지 필요

수출성장자금대출을 포함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 및 보증 상품이 당초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만기가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 연장을 관리할 것

(5) 유턴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한국수출입은행의 ‘유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적이 2년 연속 전무하므로,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 전략적 금융 지원 추진 필요

‘국가 전략 사업·수출 파급 효과가 큰 사업·고부가가치 사업’의 결합 사업에 대한 전략적 금융 지원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 할 것

(7) 관심서한 절차 재정비 필요

관심서한의 문안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승인 절차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

(8) 배드뱅크 사업에 대한 분담금 지출 검토 필요

한국수출입은행의 배드뱅크 사업 분담금 지출은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 원리를 훼손하거나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관 설립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한국수출입은행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출연 여부 및 그 적정성에 대하여 설명할 것

(9) 중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필요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3년간 중형 조선사에 대하여 선수금환급보증

(RG)을 발급하지 않은 바,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수행할 것

한국수출입은행은 중형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재개할 것

(10)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내실화

2025년 기준 118개 세계 공적금융기관이 석유·가스 사업 투자 배제 기준을 도입하였고, 화석연료 인프라의 자산 가치 급락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바, 한국수출입은행이 검토 중인 신규 화석연료 사업 45건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기관의 의사결정 방향성을 재확립할 것

LNG 운반선 과잉 공급 및 주요국 공적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관련 선박 금융 중단·축소 추세를 고려하여, 한국수출입은행으로의 리스크 전가 가능성 및 LNG 운반선에 편중된 지원 구조를 검토할 것

필리핀 해상교량 건설사업, 인도네시아 메단 하지 종합병원 확장 사업, 필리핀 순환도로 건설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과 무관한 사업들이 그린 ODA 실적으로 분류되어 ‘그린워싱’으로 판단되므로, 그린 ODA 판단 기준을 재정립할 것

한국수출입은행이 2021년에 수립한 ‘ESG 경영 로드맵’의 13개 금융프로그램 중 4개 프로그램은 집행 실적이 전무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ESG 경영 로드맵’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지원 실적 및 성과 간 유기적 환류 체계를 구축할 것

기술적 불확실성이 있는 차세대 선박 외에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해상풍력 전용 선박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에 대한 금융 지원 필요성을 추가 검토할 것

한국수출입은행은 LOI가 발급되었거나 발급을 검토 중인 45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하여 재무적 리스크를 검토하여 보고할 것

(11) EDCF 사업 관리 강화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외압 의혹을 포함하여, 캄보디아 EDCF 사업 규모 급증, 우크라이나 지원 및 미소 금융 지원 관련 특혜 의혹 등 EDCF가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몽골 아이막 난방사업 관련 벽산 ENG의 사업을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이 보증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몽골 정부와 건설공제조합 간 소송이 우려되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EDCF 사업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주 비중이 58%에서 2%로 급락하고, 중소기업 전용 ‘소액차관제도’의 집행 실적이 전무한 바,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 발굴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고, 소액차관 기준을 현행 700만달러에서 2,000만 달러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나가 2022년 12월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관 한도를 20억불로 확대하였고, EDCF 사업 중단 상황에서도 3개 사업의 사업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바,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도적 절차를 보완할 것

모로코 전동차 사업 등 특정 대규모 사업에 EDCF 지원이 집중되면서 타 사업의 선수금 비율이 하향 조정되고, 이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대형 사업 추진 시 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여 집행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EDCF 연도별 운용계획을 재설계할 것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하수처리 사업의 보충용자 규모가 본용자에 육박

할 정도로 과도하게 증액되는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재조사가 생략되고 2016년 심사보고서와 2023년 심사보고서 내용이 상충되는 등 부실 심사정황이 의심되므로, 동 정황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할 것

캄보디아 EDCF 기본약정 한도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사업이 통일교 메콩강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소명할 것

현재 보충용자 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대신하여 상시설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것

한국수출입은행은 ① 캄보디아 ODA 원조 사업과 관련된 검토 자료가 보존되어 있고, ②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제도상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며,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③ 캄보디아 ODA 사업은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하게 수행되었음을 명확하게 해명할 것

캄보디아 민관 전대차관 예산의 과거 집행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현지 실사나 사업 의향서에 대한 평가 없이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

캄보디아 EDCF 사업과 관련하여 ① 민간협력 전대차관 제도는 문재인정부 시절에 도입되었고, ② 4대 시중은행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③ 관련된 기초 자료들이 보존되어 있고, ④ 외부 청탁·특혜와 무관하다는 사항을 소명할 것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사업 및 모로코 교외선·메트로 철도차량 공급사업과 관련된 특혜성 의혹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소명할 것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사업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진행 불가 통보

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동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근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민간협력 전대차관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되었고 OECD에서도 확대를 권고한 사안이며, 윤석열 정부 기간 중 민간협력 전대차관 신규 사업 비중은 낮은 편이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은 관련 의혹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할 것

대개도국 차관 예산 중 현대로템의 수주 비중이 24%에 달하고, 현대로템의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수출 EDCF 사업은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승인 전 수원국이 대통령령을 미리 개정하는 등 절차적 모순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EDCF가 특정 기업의 전용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하도급법 등 경쟁법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하여, EDCF 사업 참여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엄격한 입찰 자격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캄보디아 민간협력 전대차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공고 당시부터 ① 최종 차주의 한국계 자본 비율을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② 최종 차주는 비한국계 기관으로 한정하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은 관련 의혹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할 것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협력 전대차관과 관련하여, ① 동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시행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되었으며, ② OECD 권고 사항 역시 '전대차관 도입'을 특정하여 명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것

2013년 12월 진행된 필리핀 EDCF 사업설명회에 불참한 대우건설이 한

달 후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점과 해당 사업의 중단으로 타당성 조사비용 16억 원이 낭비된 바, 타당성 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하여 사실 관계를 규명할 것

EDCF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세계은행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제재 기준을 적용하고, 특히 탄자니아 사업 관련 로비 의혹 제보에 대해서는 ‘경협 민원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보고할 것

건설공제조합은 몽골 아이막 난방 사업과 관련하여 벽산 ENG에 계약이행보증 및 선수금지급보증을 제공하였으나, 동 보증의 미이행에 따라 대한민국-몽골 간 외교적 신뢰가 저하되고, 건설공제조합의 해외보증사업 대외 신뢰도가 저하되었으므로, 건설공제조합과 벽산 ENG의 공모를 비롯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것

캄보디아 EDCF 사업은 시중은행 참여의향서 평가 및 현지법인 실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총리실에서 수립하는 ‘국제협력개발 종합계획’에도 사후에 포함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협력전대차관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

이집트가 IMF 구제금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입은행 EDCF 심사보고서는 외채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표기하는 등 부실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EDCF 심사보고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KDI 예비타당성보고서 공개기준을 참고하여 심사보고서를 공개할 것

소액차관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윤석열 정부 기간 중 캄보디아 EDCF 지원 한도와 집행액이 상향되는 과정에서, 해당 결정이 통일교 및 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 연계된 것인지 규명할 것

우크라이나 EDCF 사업과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간 연계 의혹이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규명할 것

도이치모터스 캄보디아 자회사(BAMC) 특혜 의혹 및 민간협력 전대차관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규명할 것

EDCF 연체가 발생한 수원국에 대하여 신규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후 제도적 절차를 보완할 것

EDCF 사업은 물가상승, 환율 변동, 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민간협력 전대차관 제도가 대한민국 내 특정 기업·특정인·특정 단체에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인지 소명할 것

한국수출입은행이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급기관 또는 정치권에서 부당한 압박을 받거나 부적절한 특혜를 요청받았는지 소명할 것

민간협력 전대차관이 문제인 정부 기간 중 실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것

모로코, 이집트, 캄보디아 등 EDCF 지원 사업들의 심사보고서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심사보고서를 공개할 것

(12)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내실있는 운영 및 지원방식 다양화

전략물자 비축량 확대를 위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관 공동 비축제도’ 참여 중소기업 중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수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금리 우대 및 융자프로그램 신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금융지원이 신규 시설 자금에 편중되어 기존 프로젝트의 증액 수요나 운영·투자자금 지원에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리파이낸싱 허용 등 다각적인 지원 방식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은 약 70%인데, 실제 기금 지원 실적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이 대출과 보증 등 민간 기업에 리스크를 전가하는 방식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적극적 투자를 진행할 것

(13) 남북협력기금 사업관리 및 북한 자산 환수 등

북한의 대북 차관 미상환 및 경수로 사업 관련 원리금 부담 등 대북사업에 혈세가 낭비되었고, 유엔 대북 제재로 실질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올해보다 25.2%가 증가한바, 한국수출입은행은 대북 사업이 국제법 위반 사업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은 6%로 저조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에도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으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 관리 주체로서 현행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청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임차료, 업무추진비 등 지출 내역 전반을 정밀 점검하고, 청산 법인의 신규 직원 채용 경위를 파악할 것

한국광해광업공단 흑연광산 개발사업, 한국전력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 개성공단 지원 및 경수로 사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액의 대북 채권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웜비어’ 부모 사례와 같이 소송을 비롯한 적극적 회수 방안을 검토할 것.

2025년 9월 기준, 전체 차관 약 1조원 중 북한 관련 미상환 원리금이 6억 2,120만 달러로 88%에 달하고 있으므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공탁 자산 환수 등 북한 관련 자산의 환수방안을 강구할 것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업무추진비의 비정상적 집행 행태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감사 등을 통해 점검할 것

한국수출입은행이 통일부 대신 남북협력기금 운용을 수탁받는 사유를 소명할 것

남북협력기금은 집행을 및 회수율이 저조한바, 과도한 예산편성, 비공개 사업 운영 등의 원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등에 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감사를 진행할 것

(14) 대미 관세 협상 대응 방안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펀드 조성 시, 한국수출입은행의 외화채권 발행 분담과 관련하여 국제 채권시장의 수용성 및 금리 변동 리스크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대비할 것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도입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신규 대출 심사 기간을 신속심사제 도입 등을 통해 간소화할 것

현행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각각 3조원이 배정되어 있으나,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등 대외 통상 환경 악화 시 자체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

(1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제고 필요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2020년 이후 매년 악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기관의 투자 및 구매 계획을 수립할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계획을 포함할 것

한국수출입은행은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여 약 9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부담하였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6) 탄소배출 저감 계획 제출 필요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체 탄소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은 탄소배출량 저감 계획을 제출할 것

한국수출입은행은 ‘탄소배출량 저감계획 및 예측치’를 제출할 것

(17) 수출입은행 안정성 제고 필요

현행 「한국수출입은행법」은 은행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은행장의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입법할 것

(18) 수출입은행 청렴도 제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청렴도는 4등급으로, 기재 위 소관 8개 기관 중 최하위 수준이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은 청렴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9) 수출위기상황 점검회의 정례화 필요

경제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여신정책 방향 설정과 유동성 점검을 위해 발족한 ‘수출위기상황 점검회의’가 2024년 12월 발족 이후 개최 실적이 저조하므로, 내부 일상 회의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해당 공식 회의체를 정례화하여 운영할 것

(20) KAI 대주주로서 관리 강화

한국수출입은행은 KAI의 대주주로서, KAI의 부실한 환차손 관리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주주 대표소송 등을 통하여 경영진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한국수출입은행은 KAI의 최대주주이므로, KAI 사장 임명 등 최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이행할 것

(21) 조직 운영 방안 개편

직접투자 범위 및 간접투자 펀드 대상을 확대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수출입은행의 학술연수 성과 제고를 위하여 현행 운영 방식을 재검토할 것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 현지사무소 내 성폭력 예방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포함한 윤리교육을 강화할 것

한국수출입은행의 젊은 직원의 퇴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퇴사 증가에 대한 원인 규명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기획재정부는 직무급 도입기관을 중심으로 직무급 비중 향상 및 직무등급 간 차등 수준 확대 등 보수 체계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 중인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도입을 연기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제출할 것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원 대상으로 운영 중인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금리를 비롯한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

8. 한국조폐공사

(1) 모바일상품권 관련 제도개선

순환효과를 위해 모바일상품권을 2, 3차 결제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2) 골드바 거래를 통한 탈루·탈세 방지 대책 마련

골드바 음성 거래 및 탈루·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명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만 골드바를 구매하도록 하거나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

무기명 골드바 거래가 상속·증여세 포탈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통보 시스템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 지역사랑상품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지역사랑상품권 시장점유율 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

디지털온누리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 이용 불편, 오류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전준비가 미흡했다고 보이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플랫폼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민간업체들의 불공정 거래·입찰 등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CHAK)의 상품권 발행액 점유율이 하락 추세이므로 지자체 대상 수수료율 개편, 소상공인 지원책 등 대책을 마

련하고,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품질을 제고할 것

(4) 지폐 내구성 및 위생 강화 연구 실시

지폐 내구성 및 위생 강화를 위한 연구를 실시할 것

(5) 모바일신분증 이용 편의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동사무소 등 관련기관의 불필요한 방문 없이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6) 전자쇼핑몰 개선방안 마련

조폐공사 전자쇼핑몰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7) 골드바와 24K 메달 관련 정책 일원화 검토

현재 골드바와 24K 메달 가격 및 판매 정책이 다르므로 정책 일원화를 검토할 것

(8) 사업 다각화 방안 마련

사업 다각화를 위해 예술형 주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행할 것

외국인 관광객들의 디지털 신원 인증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

(9) 경영실적 개선방안 마련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부담이나 장기부채 누증 문제가 있으므로

로 구조적 투명성을 확보할 것

물품 대금 미회수 관련하여, 상환금리 등 약정이 상대 업체측에 유리하고 상환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해당 경위 및 책임소재를 보고할 것

(10) 자회사 운영 관련 개선방안 마련

자회사(코스코시큐리티, 코스코투게더) 노동조합 농성 중으로, 노동자 및 자회사 대표 면담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우즈베키스탄 자회사(GKD)가 아동 노동 착취 원료 구매, 환경오염 문제, 린터 안전재고 미달에 따른 특별감사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 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할 것

조폐공사 특수경비 자회사(코스코시큐리티) 직원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자 면담 및 의견 청취할 것

(11) 조직운영 관련 개선방안 마련

임직원 복지카드 교체에 따라 카드사가 지급한 발전기금(판촉비)을 조폐공사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바로 제3자인 노동조합에 직접 입금한 것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반으로, 환수 후 회계처리할 것

임직원공제기금과 관련하여 퇴사 시 처리 규정 미비, 공제 철회 불가 등 문제가 다수 있으므로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할 것

회사를 상대로 한 직원들의 소송 규모가 21건, 소송가액 129억원에 달하므로 직원과의 소통 등 개선책을 강구할 것

전자여권기 관련 감사원의 직원 면담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이 있었는지 경위를 확인하여 보고할 것

5년간 수의계약 심의 대상 공사 건수가 34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심의위원회 회의가 전혀 개최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할 것

노란봉투법 관련 공사의 리스크 관리 현황 및 노동쟁의 발생 시 대책을 보고할 것

(12) 우선구매 · 장애인생산물 구매 실적 개선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비율이 다른 공공기관 대비 저조하므로 적극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 중 해당 협동조합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이 실적으로 포함된 사례가 있으므로, 직접생산 여부나 납품 제품의 적정성에 대한 전수조사 후 문제 제품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제외할 것

9. 한국투자공사

(1)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확대

한국투자공사의 설립 목적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용 자산 중 국내 자산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하므로,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

한국투자공사의 국내 운용사 위탁 규모를 확대하라는 의견을 유념할 것

한국투자공사의 운용 자산 중 국내 자산운용사 위탁 비율이 1.6%, 수수료 지급 비중이 0.3%에 불과하여 국내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미흡한 바, ① 국내 자산운용사에 대한 중장기적 위탁 비율 목표 설정, ② 신생·소형 운용사 발굴을 위한 루키리그 제도 도입, ③ 해외 자산운용사 선정 시 국내 기관의 컨소시엄 참여 의무화, ④ 소규모 사업에 대한 국내 운용사 별도 리그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저조한 투자수익률 개선 및 전략적 투자 대책 마련

글로벌 국부펀드 추적 기관인 싱가포르 SWF의 분석 결과, 한국투자공사 평균 수익률은 5.36%로 조사 대상 50개 연기금·국부펀드 중 41위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거버넌스 개편 등 수익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투자공사는 투자 전략 재검토 등을 통하여 부동산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2015년 기획재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공동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50억 달러의 집행 실적이 2025년까지 전무한 바, 한국투자공사는 다른 부처 산하의 전문 기관들과 협업 관계를 확대할 것

2015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해외 진출 기업 투자 지원 목적으로 위탁받은

50억 달러는 위탁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일반 위탁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동 50억 달러를 반납할 것

2015년 한국투자공사가 전략적 투자자금을 위탁받은 이후 이를 전담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전략투자팀을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투자 실적이 전무하며, 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 또한 개최한 적이 없는 바, 해당 사항의 존속을 검토할 것

한국투자공사는 2015년 기획재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공동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5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투자에 대하여 구체적 집행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투자공사는 전략적투자가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전략적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3) 국부펀드로서의 사회적 책무 등 수행

한국투자공사가 석탄 발전, 담배, 대마 등을 투자배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립모리스 등 담배 관련 기업이나 석탄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바,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를 참고하여 ESG 원칙을 견지하며 수익을 추구할 것

국부펀드로서 ESG 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엔화 외평채 위탁자산 운용의 절차적 정당성 및 독립성 점검

2023년 발행된 엔화 외평채 위탁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자산 배분 전략의 적절성 논란과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누락 등 절차적 정당성 훼손 문제가 제기된바, 운용 원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5) 한국투자공사 운용 자산 및 운영 방식 개선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기금관리 주체로부터만 자산을 위탁받을 수 있어, 운용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현행 한국투자공사는 위탁자산을 외국에서 외화 표시 자산으로만 운영하여야 하므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국투자공사의 국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투자 허용 등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포함한 한국투자공사 운영 방식을 재설계 할 것

(6) 대미투자 시 한국투자공사의 독립성 준수 등

대미투자 방안으로 한국투자공사(KIC) 자산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한국투자공사는 국부펀드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투자공사법」 제30조에 명시된 위탁자산 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준수할 것

(7) 우수인력 확보 및 투자 전문인력의 높은 퇴직률 개선

한국투자공사는 총인건비 규제 및 성과보상체계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글로벌 인재 확보가 곤란하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 공공기관 운영 내실화

한국투자공사의 직원 1인당 지출 규모 및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예산 및 비용 구조를 성과 중심으로 설계할 것

한국투자공사 임직원의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 위반은 42건임에도 경징계 처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투자공사 직원이 개인 저서 발간 및 유튜브 출연을 통하여 사모펀드 투자 전략 등 공사의 구체적 실무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한국투자공사법」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위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바, 비밀누

설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투자공사법」 제31조제6항은 자산운용 전문성 제고를 위한 투자 운용인력 자격 요건과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여 위임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할 것

한국투자공사의 운용 자산은 327조원이나, 한국투자공사는 자료 미제출 및 정보 비공개 등 대외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

KIC 운영위원회는 학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현장 투자 전문가 비중이 확대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

글로벌 국부펀드의 전략적 투자 강화 추세에 발맞춰, 한국투자공사의 국 외 투자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첨단전략산업 투자 등 역할 확대와 법적 기반 마련 방안을 검토할 것

한국투자공사의 설립 목적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이 아니므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것

한국투자공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방안을 제출할 것

10. 한국재정정보원

(1) 시스템 개선 및 활용도 제고

국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플랫폼인 ‘e나라 도움’에 대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보조금을 통합적으로 사후관리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구축할 것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활용 실적을 관리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국민 편의를 위해 만든 국세외수입포털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낮으므로 국민 인지도 증가 및 국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

디브레인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삶 지표와 재정사업 간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2) 장애인 고용률, 동반성장 평가 등 기관운영 개선

정보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3년간 미이행하고 있고,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5년 연속 개선 필요를 받았으므로,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

(3) 콜센터 상담사 이탈 문제 개선

한국재정정보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의 지속적인 상담사 이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정보원 차원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정보원과 상담인력 간의 소통 창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한국원산지정보원

(1)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예산 증액 및 통상 대응 지원 대책 필요

수출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의 삭감된 예산이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미국과 EU의 통상 규제 강화 및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의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과 공급망 실사지침 등 미국과 EU의 공급망 규제 강화로 기업의 공급망에 불안정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 강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 강화 및 정성적 판정 기준에 따른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기업에게 최신 동향과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원산지정보원의 기업지원 역할을 강화할 것

(3)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확보 필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을 조속하게 확보할 것

(4)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필요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력강화 등 고용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

(5) 원산지정보원의 연구보고서 공개 확대 및 방안 마련 필요

원산지정보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을 명확히 수립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6) 연구보고서 공개 제도 개선 필요

연구보고서 공개 규정을 명확히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것

12. 한국통계정보원

(1) 통계 품질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 필요

통계품질 개선을 위하여 데이터 수집·검증 및 품질점검 역량을 강화할 것

(2) 정규직 신규 채용 재개 및 인력 구조 개선

중단된 정규직 신규 채용을 재개하고, ‘체험형 인턴’ 위주의 인력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할 것

(3) 자체 감사기구 마련 및 규정 정비 완료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감사 조직 구성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것